20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2024.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2023~2024년 시행계획 개요 ····· 1

Ⅱ. 2023년 시행계획 ····· 6

1. 2023년 시행계획 총론 ····· 7

2.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2023년) ····· 29

3. 주요과제 추진일정(2023년) ····· 30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3년 시행계획 ····· 32

1) 교육부 ····· 3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2
3) 외교통상부 ····· 81
4) 법무부 ····· 91
5) 행정안전부 ····· 323
6) 문화체육관광부 ····· 337
7) 농림축산식품부 ····· 370
8) 산업통상자원부 ····· 389
9) 보건복지부 ····· 401
10) 고용노동부 ····· 413
11) 여성가족부 ····· 445
12) 국토교통부 ····· 462
13) 해양수산부 ····· 475
14) 중소벤처기업부 ····· 492
15) 방송통신위원회 ····· 504
16) 통계청 ····· 520
17) 경찰청 ····· 535
18) 해양경찰청 ····· 554
19) 국세청 ····· 563
20) 질병관리청 ····· 574

Ⅰ. 2023~2024년 시행계획 개요

1. 수립배경

2. 추진경과

3. 수립 대상 기관 및 정책

4. 2023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1. 수립배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확정

○ '23.12.27.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확정

☑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5대 정책목표**

❶ **【경 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❷ **【안 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❸ **【통 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❹ **【인 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❺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23~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23.12.2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 ’24.5.7.~5.10. 제2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서면 회의)

3. 수립 대상 기관 및 정책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22개 기관(15부·1위원회·6청)*

* 해양경찰청, 국세청, 질병청, 재외동포청은 추진과제가 있는 기관으로 시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 대상 정책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 이주 제외)을 의미

□ 주요 정책 대상[1)]

○ **체류외국인(약 251만 명)**

- (단기체류) 친지 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록외국인'이라고 함

○ **국적취득자(약 30만 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1) ‘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기준

4. 2023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 **(체류외국인)** ’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32만 명) 대비 약 4.9%에 해당 (출처: 법무부·행안부)

※ ('21년) 196만 명(3.8%) → ('22년) 225만 명(4.4%) → ('23년) 251만 명(4.9%)

-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423,675명,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율 16.9%

- **(난민)** ’94년~’23년 12월 말까지 난민신청 103,760건 중 58,483건 심사 결정

※ 난민인정 1,439명, 인도적 체류 2,613명 등 4,052명에게 국내체류 허용

❖ **(국적취득자)** ’23년 12월 말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14,431명 (출처: 법무부)

※ 정부수립 이후 총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약 30만 명

❖ **(외래관광객)** ’23년 12월 말 외래관광객은 1,103만 명이며, ’22년 동기 320만 명 대비 약 245% 증가 (출처: 한국관광공사)

❖ **(외국인 투자액)** ’23년 12월 말 외국인 투자액은 327억 달러이며, ’22년 동기 304억 달러 대비 약 7.6% 증가 (출처: 산업부)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목표	중점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Ⅱ. 2023년 시행계획

1. 2023년 시행계획 총론

2.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2023년)

3. 주요과제 추진일정(2023년)

1. 2023년 시행계획 총론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23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합 계	**1,379**	**593,500**	**158**	**350,757**	**1,221**	**242,743**
1.【경 제】	201	209,885	59	178,538	142	31,348
2.【안 전】	51	11,489	25	8,638	26	2,851
3.【통 합】	962	304,945	33	123,996	929	180,949
4.【인 권】	112	58,701	18	33,867	94	24,833
5.【협력/인프라】	53	8,480	23	5,718	30	2,762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추진방향>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 추진**
- **우수인재·전문인력·투자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가.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 이민자 유입 및 관리시스템 선진화

○ 인구구조 변동과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노동시장 수급 전망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이민정책 영향 등을 고려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추진 (법무부)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

▪ **도입 규모(총량) 산출 절차**

❶ 공급 부족 규모 분석	▸	❷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	❸ 도입 규모(총량) 일차적 산정	▸	❹ 의견 수렴 (관계부처·전문가)	▸	❺ 도입 규모 최종 산정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위한 실태조사·계량 분석 연구용역 실시

○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부처별 외국인 행정업무 자료 통합연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법무부)

☐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

○ 사증 접수량 대비 심사인력이 부족한 공관 또는 주재국 여건상 민원인 대기가 곤란한 공관 등을 중심으로 비자신청센터 신규 설치 (법무부, 외교부)

< 비자신청센터 비자발급 절차 >

접 수		심 사		교 부
• 신청서류 검토 • 전산입력	⇨	• 출입국기록 등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 직접 방문 • 우편 택배 등
비자신청센터		재외공관(영사)		**비자신청센터**

○ 송출국 현지 훈련기관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발된 인력을 뿌리산업 사업장에 알선 (고용부)

※ 훈련 시간 80% 이상, 훈련 이수 평가 60점 이상, 한국어 능력 시험 80점 이상 (200점 만점 기준) 적격 E-9 선발

☐ 고급·숙련 비자체계(트랙) 구축

○ 자격증·경력·학력 등 점수제 평가를 통하여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부여 (법무부)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 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법무부)

○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경력·학력·연령·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전환 추진 (법무부)

나.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우수·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 이공계 특성화기관*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 취업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자격 부여 및 3년 후 점수요건 충족 시 영주·귀화를 허가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법무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5개 기관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단기(3~12개월) 또는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 지원 (과기정통부)

○ 고소득자 및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 신설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비율 확대, 숙련기능인력 별도 쿼터 신설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혁신적 확대 방안 마련(법무부)

○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체결, 뿌리산업 양성대학 점검 및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 (산업부)

□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 「가사근로자법」 상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고용부)

○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E-9) 허용 확대 및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 간 전산 연계 추진 (고용부)

□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및 온라인 기반 유학박람회 운영,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2차년도) 구축, 외국인 유학생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교육부, 산업부)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교육부, 법무부)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 첨단산업 관련 학위과정 운영, 대학원 과정 장학생 선발 비중 확대 등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교육부)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고충 상담, 한국어·한국 문화이해 교육 등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교육부)

□ 창업·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 외국인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창업 지원 (중기부)

○ 투자이민제도 조정 및 기술창업(D-8-4)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최초 체류허가 기간 확대 제도 마련 (법무부)

다.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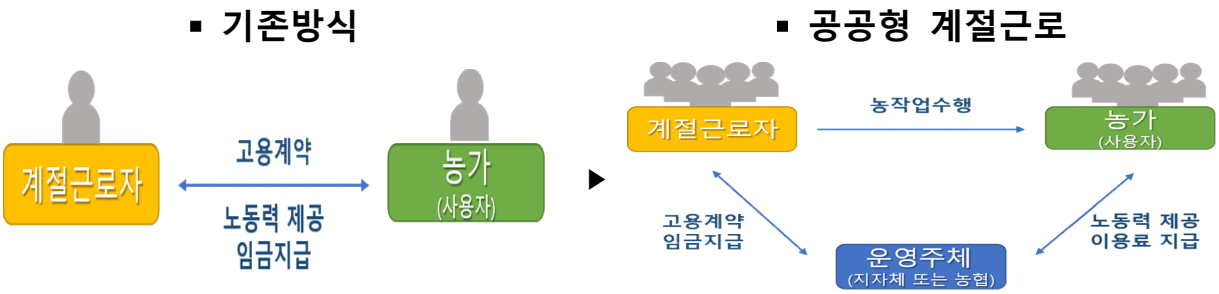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장기체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법무부)

* 28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1,500명 배정('22.10.~'23.10.)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일(日)' 단위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농식품부)

<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요 >



☐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실무분과위원회」 개최·운영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시 기준이 되는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수,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안부)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권역별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개최 (법무부)

※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총 4회, 247명 참석('22년)

☐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참여 및 인프라 강화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대표자회의, 자율방범대 등 외국인주민 참여 기구 구성·운영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가이드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배포 (법무부, 행안부)

라.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 관광매력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지자체·민간 주최 K-Pop 콘서트 지원, 한류테마 대표 관광코스 발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및 홍보 (문체부)

○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 한국 테마관광박람회 연계 크루즈 박람회 개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등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문체부, 해수부)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국어 서비스 구축,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개선 (법무부)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관광수출전략추진단(2년 한시조직)' 신설 및 운영 (문체부)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전자민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확대·개편 (법무부)

□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 K-컬처 비자,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등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별도 체류자격 신설 추진 (법무부)

○ 우수 유치기관 지정 상한 폐지, 비자쿼터 상향, 동반자 제한 완화, 외국인환자 체류기간 연장 범위 확대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복지부, 문체부)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추진방향>

- **다부처 협력을 통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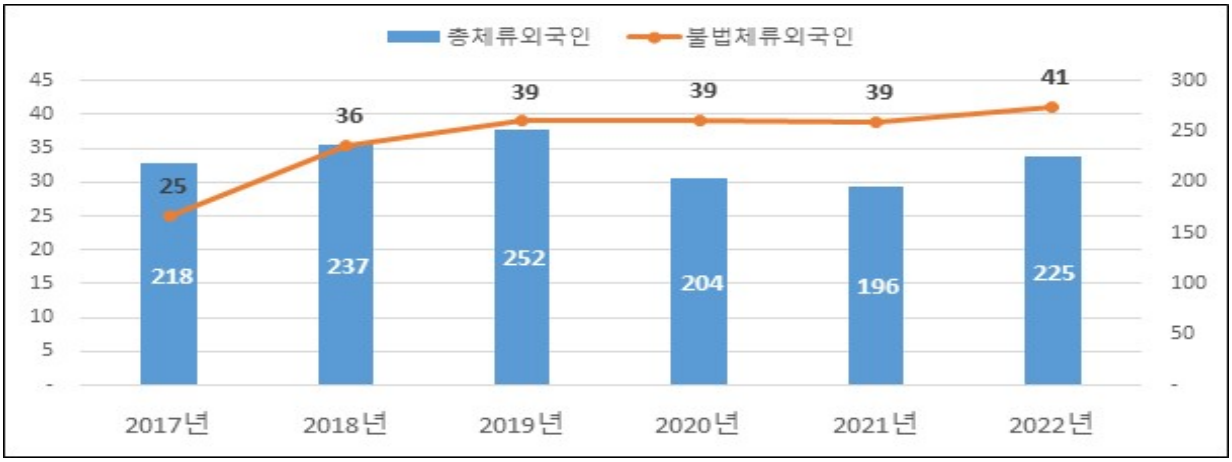
가.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체류 관리체계 고도화

○ ‘22년 말 41만여 명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 명대까지 감축하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23~’27년)‘ 계획 수립 (법무부)

▪ 연도별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만명)



※ 5개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등)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 실시,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 다부처 분야별 차별화된 책임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 공유 활성화 (고용부)

○ 외사안전구역(30개소) 분석 및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활용,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 치안 활동 강화 (경찰청)

○ 전문 건설업체 담당자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절차, 규정, 숙련기능 인력 도입 등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

○ SNS 등 사이버상 불법취업 정보수집 활동 강화, 외국인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협조원 구축 활동 지속 (법무부)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 (법무부)

○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한 관리 인력(사범·보호·퇴거 등) 및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추진 (법무부)

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귀화 면접 심사에 기본소양 반영, 면접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귀화 민간 면접관의 업무 전문성 강화 (법무부)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간소화, 온라인 국적 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재외공관에 복수국적 관련 설명자료 제작·배포 (법무부)

○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신고 및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실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순찰활동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실시 (경찰청)

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입국자 사후분석 강화를 위한 출입국 빅데이터 정보 활용 및 체계적인 입국 외국인 정보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추진 (법무부)

○ 단체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시스템 구축, 화면 개선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법무부)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입국자 관리 협조 (질병청)

○ 밀입국·밀수 등 해양 국경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외국인 항만 출입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해수부, 해경청)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추진방향>

- **사회통합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정책 체계화**
- **국민과 이민자 간 소통 증진, 문화 다양성 확대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 역량 강화**

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법무부)

□ 유입과 통합을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체계화

○ 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 대상자에 대한 체류 혜택 강화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무상으로 제공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유형별, 교육 단계별 점진적 유료화 추진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를 위해 CBT(Computer Based Test) 평가장 추가(대전) 설치, 비대면 화상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예술・흥행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계절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력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법무부)

나.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 소통 증진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개설・운영,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법무부, 여가부)

○ '세계인의 날(5.20.)' 기념식 및 지방 출입국관서・지자체・유관기관과 연계한 세계인의 날 주간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

○ 이민자의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국민⇔이민자 간 교류・소통 증대 및 이민자 사회참여 다각화 추진 (법무부)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 분석, '문화다양성의 날(5.21.)',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운영 및 기념행사 개최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문체부)

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적합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부)

○ 입국 전후별・체류 경로 및 생애 주기 등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추진 (문체부, 법무부)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가족상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등 제공 (여가부)

○ 결혼이민자의 요구·수준에 따른 단계별 농업교육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 운영,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가족 농촌 정착지원 과정 운영 (농식품부)

□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

○ 언어별 상담원 정원 조정, 상담 서비스 향상, 상담실적 및 응대율 관리 등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역량 강화 (고용부)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교육 실시, 정보 제공을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보급 (방통위)

□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지원 및 이중언어 역량강화 지원 확대(여가부)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초·중등) 확대 운영, 한국어 학급 확대 및 온라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시범 운영 (교육부)

라.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의 단계적 통합 추진 (법무부)

※ 재외동포 자격통합 및 동포 취업 범위 재설계 방안 연구용역 실시('22.11.)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 점진적 확대 추진 (법무부)

○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 허용 및 취업활동 제한 완화, 배우자 등 취업 허용 (법무부)

□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

○ 동포체류지원센터 적격 단체 발굴 및 지정 확대, 주요 동포정책 현안 설명 등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법무부)

○ 출입국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법무부)

○ 재외동포 인식 정립 및 동포정책 이해를 위한 홍보·언론 대응,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협업 추진 (법무부)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추진방향>

-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이민자 차별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로 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어업 집중점검, 기본적 근로조건 위반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점검 및 주거 실태조사 병행 실시 (고용부)

○ 외국인 근로자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 절차없이 갱신되도록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 갱신제 도입 (고용부)

○ 외국인 대상 국민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시스템 개선 및 재난 안전 정보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 App) 자료 현행화 (행안부)

○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 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공유 등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위)

□ 인도적 차원의 법 집행 인프라 확대

○ 소송제기 등 공항 내 장기 대기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장기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법무부)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 운영 (법무부)

나.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

○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활동 전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다문화 청소년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경찰청)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공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기반 강화 (교육부)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전문 상담·주거·법률·의료 등을 지원하는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여가부)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절차 마련 (법무부)

다.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

○ 난민전담공무원 및 난민(전문)통역인 대상 교육 및 평가 실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및 관계부처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한 난민 인식개선 지속 추진 (법무부)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청취 확대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절차 마련 (법무부)

○ 국가정황 자료집 현행화 및 발간, 해외 국가정황보고서 번역 사업 등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활용 강화 (법무부)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협업 방안 마련 및 소통 강화 (법무부)

□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계획 수립, 재정착 난민 국내 정착지원 및 학생 난민 프로그램 지속 추진 (법무부)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관련 논의, 재정착 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및 난민 관련 국제기구 교류 지속 (법무부, 외교부)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추진방향>

- **범정부적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관련 민간협력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가.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

○ 외국인정책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외국인정책의 기본원칙·방향·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정례적 개최 추진 (법무부)

○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및 배정 인원 결정 등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공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나.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 이수 교육(연 2회) 및 보수교육(연 1회)을 통한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강화 (법무부)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 「국제법」을 외국인정책 관련 법령·제도를 총칭하는 「이민법(학)」으로 대체 추진 (법무부)

○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행정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분석센터 신설 및 이민정책연구·교육·협력 사업 강화 (법무부)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논의 및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 '11년부터 운영된「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

다.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출입국 민원시스템을 사증 신청부터 체류관리 등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법무부)

○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위해, 법무부-금융회사 간 등록증 정보를 실시간 조회·회신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으로 외국인등록증 활용성 및 편의성 증진 (법무부)

* 사진 컬러 인쇄 및 크기 확대, 인적사항 QR코드 인쇄 등

○「국제인구이동통계」,「인구총조사」,「다문화 인구동태통계」,「장래인구추계」결과 공표,「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 및 결과 공표 등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제공 (통계청)

라.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법무부)

❍ UNHCR, IOM 등 국제기구 주관 워크숍·세미나 참석 및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 주관 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체계 유지 (법무부, 외교부)

❍ 법무부와 KOICA가 협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법무부, 외교부)

※ <예> 해외 현지 직업훈련원을 통해 숙련기능 인재 양성 지원 및 귀국 시 본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지원

❍ 한국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Hi-Korea, K-ETA 등)의 해외 현지화 및 이식 사업 추진 (법무부, 외교부)

【참고1】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 연도	2023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58**	**350,757**
기획재정부	0	0
교육부	10	110,8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8,329
외교부	1	0
법무부	92	33,522
행정안전부	4	35
문화체육관광부	8	26,074
농림축산식품부	5	1,951
산업통상자원부	2	190
보건복지부	2	4,864
고용노동부	10	1,986
여성가족부	4	113,057
국토교통부	2	0
해양수산부	3	8,630
중소벤처기업부	2	6,000
방송통신위원회	3	1,775
통계청	1	2,533
경찰청	4	974
해양경찰청	1	0
국세청	2	0
질병청	1	0

【참고2】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 연도	2023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221**	**242,743**
서 울 특 별 시	95	40,827
부 산 광 역 시	42	7,093
대 구 광 역 시	78	6,671
인 천 광 역 시	22	14,999
광 주 광 역 시	67	10,529
대 전 광 역 시	61	5,314
울 산 광 역 시	59	7,579
세 종 특 별 자 치 시	10	209
경 기 도	226	44,856
강 원 도	56	9,216
충 청 북 도	85	6,718
충 청 남 도	111	11,083
전 라 북 도	77	39,868
전 라 남 도	89	14,424
경 상 북 도	57	6,616
경 상 남 도	63	14,414
제 주 도	23	2,327

2.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2023년)

체류주기	사 업 현 황
단기체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개선, 비자신청센터 신규 설치,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 의료관광 및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 K-컬처 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장기체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진적 유료화 방안 마련(법적근거 신설),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이민자 사회참여 다각화 추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등

체류자격		사 업 현 황
D계열	유학생 (D-2, D-4)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선,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등
	투자자 (D-7~D-9)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국내 기술창업 지원, 외국인 창업이민자(D-8-4) 제도 개선 등
E계열	전문인력 (E-1~E-6)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기술인재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설 추진 등
	숙련기능인력 (E-7)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공급 확대, 쿼터 신설 등 숙련기능인력 공급체계 개선, 뿌리산업 양성대학 지정 확대 등
	단순노무인력 (E-8~E-10)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타당성 마련,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공공계절근로 사업 추진,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갱신제 도입 등
F계열	결혼이민자 등 (F-2, F-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이수자 혜택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다문화 가족 (F-1, F-3)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초·중등)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외국국적동포 (F-4)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재외동포 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 취업활동 범위 점진적 확대 추진, 차세대 동포 체류지원 강화 등
G계열	난민 (G-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등 난민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자 처우개선, 재정착 난민 수용, 난민관련 국제기구 참여 등

3. 주요과제 추진일정(2023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현지 훈련기관 선발인력 뿌리산업 사업장 알선(연중)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취업비자 총량사전 공표제 연구용역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시행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현황 분석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점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1-4.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크루즈 발전 협의회 개최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정부합동단속 실시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 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설명회 개최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불법성, 투기성 거래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사업 착수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완료	국제범죄 집중단속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정책컨설팅 시범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법적 근거 마련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계획수립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및 워크숍 개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이민자 직업훈련 및 상담창구 강화	한국어학급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외국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시범사업	동포 자격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동포체류지원 센터 확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정규사업 추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울산사무소 보호실 개방형 전환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갱신제 도입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지원	인신매매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보편적 출생등록제 법적 기반 마련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UNHCR 상임위원회 참여	난민위원회 개최	국가정황정보 현행화	글로벌 난민포럼 참석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공론화		출입국·이민 관리청 관계부처 협의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검토·협의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교육 실시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연구용역 활용결과 공유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이민정책 위원회 개최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고도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 실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등 공표
5-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UNNM 등 국제기구 요청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OECD회의 참석	UNNM 등 국제기구 요청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OECD 회의 참석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3년 시행계획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교 육 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36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3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1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4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44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47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49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54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 57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 소통 증진

3-2-2-4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60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3-1 이주 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63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65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67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69

교 육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0	100%	96,510	110,837	14.8%
1. 경 제	5	50%	81,323	94,094	15.7%
2. 안 전					
3. 통 합	4	40%	14,130	15,891	12.5%
4. 인 권	1	10%	1,057	852	△19.4%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지원**
-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주요 사업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박람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개최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차년도 운영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반 마련
  - ’23년도 학부 장학생 및 우수교환학생 선발, GKS 수학대학 운영 점검 및 워크숍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편·입학 예정 다문화 학생 대상 ‘징검다리 과정’ 운영 등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공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기반 강화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0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4)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10개	96,510	110,837	14.8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81,323	94,094	15.7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1,046	1,620	54.9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70	75	7.1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268	241	△10.1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79,855	92,061	15.3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강화	84	97	15.5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14,130	15,891	12.4	
3-2-2-4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7,380	9,141	23.8	
3-3-3-1	이주 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	-	3-2-2-4 예산에 포함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	-	3-2-2-4 예산에 포함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6,750	6,750	-	
소계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1,057	852	△19.3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1,057	852	△19.3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9~'21년 **소폭 감소**했으나 **'22년 회복추세 전환,** 해외 각국의 유학생 **유치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유학생 수 : ('19)160,165명 → ('20)153,695명 → ('21)152,281명 → ('22)166,892명

○ **초·중·고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을 내실화하고, 전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유학박람회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운영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국가별 박람회, 테마형 박람회 운영, 유학생 네트워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 온라인 박람회 운영(4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8회)

○ **국립국제교육원-산업부(KOTRA)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22.10)

- 우수 해외 인력수요가 있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연계** 기회 제공

※ 면접 진행건수 3,578건 / 참가규모: 115개 기업, 외국인 유학생 2,033명

○ 22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 유도할 수 있도록 **3주기 보완방안** 마련('22.9)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를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 GKS **신규 선발인원**을 **확대**('21년 1,972명 → '22년 2,310명)하고 지역대학 학생 및 소외계층 교육기회를 확대

※ 재외동포(19명) 및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28명) 우대

- 연구개발(R&D) 및 산학협력(UIC) 연계된 신규 학위과정 및 전형 확대를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R&D 83명, UIC 99명)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국립국제교육원 내)을 통한 유학생 고충 상담(10,459건) **한국 유학생활 적응 지원** 및 **국내 취업기회 제공**

○ **권역별 한국어 센터 지정 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K-MOOC 등) **보급**하여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 이해** 교육 지원

○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확산**

- 8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 중앙선도교사 65명, 시·도 선도교사 593명 선발(시도별 각 36명 내외)

-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내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운영 및 체험 지원

※ '22년 서울관 및 부산관 총 1,695명 참여(학생 56개교 977명, 일반 718명)

○ 초·중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287개교)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통합교육 모델 개발 노력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21) 162교 →('22) 198교)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한국어학급을 확대(('21) 393학급 → ('22) 429학급)하고, 한국어교육 수혜학생 수가 적은 한국어학급 조정을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및 멘토-멘티 매칭을 위한 수요조사 시스템 도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유학생 유치단계 입학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 학업단계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GKS **장학생 선발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유학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중이 확대**되고, **청소년기 다문화학생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교원의 다문화교육 연수 참여 확대** 필요

- 모의 유네스코 총회 등 세계시민교육 대면 체험의 지역적 한계(서울, 부산 운영) 극복을 위한 지역 협력 필요

○ **개선방안**

-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평가 부담**은 **낮추되, 질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 유지** 및 **컨설팅 강화**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검토**

- **대학 내** 우수한 **한국어교육 시설**이나 **지자체 평생학습 시설**을 **한국어 센터**로 **지정·운영, K-MOOC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좌 확대** 등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

- **GKS 장학생**의 성공적인 학위취득을 위한 **한국어 능력향상 지원** 및 **동문회 지원 확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 강화

-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서·진로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전문상담 원격연수 콘텐츠 신규 개발**

- 교육연수원, 국제교육원 등 지역 유관기관 대상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콘텐츠 보급 모색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구축(2차년도)을 통한 한국유학홍보 활성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

- **온라인 원스톱 한국유학서비스** 실현을 위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3년 집행 예산 1,320백만원

○ '23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기업과 유학생 간 채용 연계 제공

○ ’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4주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 지자체-대학-기업 연계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반 마련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 **첨단산업 관련 학위과정 별도 운영** 통한 우수 이공인재 유치 강화,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규모 확대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유학생 지원체제 등 **교육의 질 관리 강화** 유도(법무부 협업)

  * 우수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국내·외 홍보 지원

- **유학생의 고충을 상담**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정착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소재)[*] **전문성 제고**

  * 상담언어(8개) : 한국어·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

☐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맞춤 교육 지원과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기반 조성

☐ **교원의 다문화 교육역량, 세계시민교육역량 강화**

○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국제회의 등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관련 지식·이해 증진** 및 **정보공유**

-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증진을 위한 의제 채택 추진

○ **교원 및 학생의 세계시민교육 연구 역량 강화 및 실천동기 제고**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 연구회 지원 등 세계시민교육 연구 지원

- 고등교육기관(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및 사례 확산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선정 ▪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23년도 학부 장학생 선발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담당자 연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지정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한국어학급 지정 및 징검다리과정 개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추진계획 수립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1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의견수렴 ▪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GKS 수학대학 운영 점검 및 워크숍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및 워크숍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담당자 협의회 및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 학급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23년도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방문 및 성과 보고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담당자 협의회 및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 학급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2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결과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3년 인증(서면·현장) 심사 ▪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연중)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 GKS 수학대학 워크숍, 동문 멘토링 추진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방문 및 성과 보고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담당자 협의회 및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 학급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 한국어 학급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유학 수요층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유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과제 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 국가별 박람회(온·오프 연계), 테마형 박람회(온라인)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박람회 운영,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온라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운영('1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15)

○ 온라인 기반 한국유학박람회 확대 · 개편 운영('20)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21)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추진('2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2. ’22년도 추진 실적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 온라인 박람회 운영(4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8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신규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유학 정보 제공 등)

- 미래 신기술 기반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1차년도** 운영

※ 한국유학정보서비스 혁신, 유학생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온라인 박람회 플랫폼 구축 등

3. ’23년도 추진계획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연중)

○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박람회, 국가별 온·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개최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도모**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차년도** 운영(연중)

※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유학생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한국유학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총 1,62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046	1,620	54.9	
-국 비	▪ 일반회계	1,046	1,620	54.9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300백만원),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1,320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집행금액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5,130	7,749	온라인 자동집계
'23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	7,749		온라인 자동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법무부, 산업부, 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인재 활용도 제고

○ 글로벌 인재 채용수요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업 발전전략 실현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졸업 후 국내취업 연계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년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10.4.~10.5.)

○ '11년~'21년 국립국제교육원-산업부(KOTRA)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2년 국립국제교육원-산업부(KOTRA)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10.21.~10.2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동 주관)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시행(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22년도 추진 실적

□ **2022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10.21.~10.22./COEX)

○ 글로벌 인재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 기회 제공

※ 면접 진행 건수: 3,578건 / 참가 규모: 115개 기업, 외국인 유학생 2,033명

○ 취업 선배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 강화 지원

3. '23년도 추진계획

□ 2023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3분기) 기본계획 수립, 행사 홍보 및 준비

○ (3~4분기) 채용박람회 개최 및 결과 분석

□ 소요예산 : **총 75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0	75	7.1	
-국 비	▪ 일반회계	70	75	7.1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1,000명	2,033	결과보고
			참가 업체 수	100개사	115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1,000명	2,377	결과보고
			참가 업체 수	100개사	97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교육부, 법무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수준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도모

○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업,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활동 지원

□ 과제 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

- 인증대학에는 외국인학생 입국 시 출입국심사 완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수학대학 선정 시 우대 등 지원

○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인증과는 별개로 매년 전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한 대학 지정

- 부실한 정도에 따라 컨설팅, 모집제한 권고*로 단계별 제재조치

*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비자발급 시 제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기존 기초단위 교육국제화특구를 개편하여 광역단위로 초·중등부터 고등분야까지 新유학수요를 창출하는 '해외인재특화형' 특구 신설

-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정착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중앙에서는 규제 특례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11년도 인증제 시범도입 및 결과 발표('11.5~12)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1주기 시행('12~'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주기 시행('16~'19)

※ 1주기 평가대상은 학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2주기 평가대상은 학부 외에 어학연수,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

○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0.2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유학생 감소 등을 반영, 코로나19 영향 지표(불법체류율, 어학 요건 등)를 조정하여 평가 시행('20년, '21년)

- 대학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년도 계획이 아닌 안정적인 3주기 보완방안('22~'24)* 마련('22.9월)

* 코로나19 영향 지표 재검토(예 : 불법체류율 산식 조정, 대학 자체 언어능력 검증 인정 등)

○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발표('23.2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23.8.16.)

○ '교육국제화특구 3기('23~'27년) 육성종합계획' 수립('23.9월)

○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 실시 및 워크숍 개최('23.11~12월)

☐ 추진체계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제한여부 검토 → 정량지표 검토	⇒	국제화지원지표 심의(자체점검보고서)	⇒	현장 확인 (필요시)	⇒	위원회 최종심의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추진주체 :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 추진절차 : 특구 신설(교육부) →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지자체) → 특구 지정(교육부)

2. '22년도 추진 실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코로나19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3주기 보완방안 마련('22.9월)

- 3주기 인증제 보완방안 시안 발표 및 의견수렴('22.6~9월)

○ 보완방안 반영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 (인증대학) 학위과정 120교·어학연수 75교, (비자발급 제한대학) 학위과정 24교·어학연수 15교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해당없음(신규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1분기)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선정

○ (2분기)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포함) 관련 의견수렴 실시

○ (3분기)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 (4분기) 2023년 인증(서면, 현장) 심사

□ 소요예산 : **총 24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68	241	△10.1	
-국 비	▪ 일반회계	268		순감	
	▪ 특별회계		241	순증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41백만원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협의체(TF)’를 구성,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을 수립토록 지원

□ 소요예산 : 해당없음(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70개교	134교	인증평가 결과
'19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80개교	117교	인증평가 결과
'2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80개교	143교	인증평가 결과
'2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90개교	132교	인증평가 결과
'2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90개교	120교	인증평가 결과
'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134교	인증평가 결과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해당없음(신규과제)

5. 담당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6
담 당 자	5급 남하린	이 메 일	zdsn54@korea.kr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797
담 당 자	5급 김영삼	이 메 일	blueyou03@korea.kr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 인재를 선발·초청하여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친한·지한 인재 양성

☐ 과제 내용

구분	세부프로그램	장학기간	지원내역
장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한국어연수 1년 + 학위과정 2~6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비, 등록금, 항공료, 학업장려금 등
단기	우수 교환학생 지원	4개월~10개월	항공료, 학업장려금
	우수 자비학생 지원		
	초청연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67년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시작

○ '05년'Study Korea Project'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점사업 지정

○ '0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6.1~2)시 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 발표

○ '10년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프로그램 재정비 및 신규 사업 신설 등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화(化)

○ '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14년'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수립·발표

○ '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추천(재외공관, 대학) → 장학생 선발(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수학(대학)

2. '22년도 추진 실적

□ GKS 신규 선발인원 확대 : ('21년) 1,972명 → ('22년) 2,310명 (+338명 증)

※ ('21년) 장기 1,351명, 단기 621명 → ('22년) 장기 1,410명, 단기 900명

□ 지역대학 학생 선발 및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인원의 지속적 확대로 260명 선발('21년대비 20명 증)

※ 지역대학 선발 실적 : ('20) 240명 → ('21) 240명 → ('22) 260명

○ 재외동포와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우대하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재외동포 : 19명,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 : 28명

□ 신규 학위과정 개설 및 전형 확대를 통해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 '22년 학부 과정 5, 6년제 학과 지원 허용을 통해 장학생 전공 분야 다양화

○ 연구개발(R&D) 및 산학협력(UIC)과 연계된 신규 학위과정 개설*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기여

* 총 182명 선발(R&D 83명, UIC 99명)

3. '23년도 추진계획

□ GKS 장학생 선발·관리

○ (1분기) '23년도 학부 장학생 선발 및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완료)

○ (2분기) GKS 수학대학 운영 점검 및 워크숍

○ (3분기) ’23년도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완료)

○ (4분기) GKS 수학대학 워크숍, 동문 멘토링 추진

□ 소요예산 : **총 92,06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9,855	92,061	15.3	
-국 비	▪ 일반회계	79,855	92,061	15.3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장・단기 과정 지원 92,061백만원(집행액)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1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7.6%	96.8%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2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7.4%	97.2%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3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3%	98.4%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 (학위과정 관리인원-학위과정 중도포기 인원) / 학위과정 관리인원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전화번호	044-203-6772 (02-3668-1368)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제유진 (행정사무관 신은정)	이 메 일	cheerupje@korea.kr (sej0616@korea.kr)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 · 적응지원 강화 (교육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국내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만족도 및 한국 유학 성공률 제고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내) 연중 운영

- 한국생활, 국내대학 학업 등 각종 고충에 대한 다국어 상담 진행

※ 상담언어(7개) : 한국어· 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K-MOOC 등) 보급, 입학 초기 이중언어 교육 병행, 국내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지원

* 대학 한국어교육 시설 또는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Study Korea Project」('04.11) 및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08)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개설('10)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23.8.)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23.8.16.)

□ 추진체계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 계획수립(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시행(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추진주체 : 대학, 자치단체

○ 추진절차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교육부) → 시도별 한국어 센터 지정·운영지원(대학·지자체)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고충 등 상담

※ 상담 실적 : 10,459건

- 국가별 상담 비율 : 인도(11.9%), 인도네시아(3.03%), 필리핀(2.16%), 중국(3.03%), 파키스탄(4.25%), 나이지리아(2.06%), 몽골(1.52%), 기타(70.44%) 순(총 164개국)

○ 장학금 정보, 국내 대학 학사 운영, 취업 및 비자 등 상담 추진

※ 상담언어(7개)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인도네시아어 · 베트남어 · 몽골어 · 러시아어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해당없음(신규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장학금, 학사, 한국 생활, 취업 등 다양한 주제의 유학생 상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재한 유학생회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한국 유학생활 정보 제공

☐ 소요예산 : 총 97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4	97	15.5	
-국 비	▪ 일반회계	84	97	15.5	상담원 인건비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해당없음(신규과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학습, 적응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상담실' 운영	운영건수(건)	1	1	결과보고
'23	학습, 적응지원 강화	다국어 상담 제공 언어	개수(개)	7	7	결과보고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해당없음(신규과제)

5. 담당자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 당 자	8급 김지나	이 메 일	jnkim20@korea.kr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797
담 당 자	5급 김영삼	이 메 일	blueyou03@korea.kr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여 학교 내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의 확산 및 실생활 중심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교원 연수 실시

○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

○ 연구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모델 및 교육자료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14~'18년) 및 정책학교('19년~)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 ('19) 287교 → ('20) 267교 → ('21) 277교 → ('22) 287교

○ 다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15년)

*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존중, 협력성, 세계시민의식 등

○ 다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자료 개발('16~'18년)

○ 2022년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사업 계획 수립('21.9월)

□ 추진체계

<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 추진주체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KERIS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교원 연수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 초·중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287개교)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통합교육 모델 개발 노력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담당자 연수

○ (2분기)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및 워크숍 개최

○ (3~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방문 및 성과 보고회

☐ 소요예산 :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예산 **총 9,14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380	9,141	23.8	
-국 비	▪ 일반회계	7,380	9,141	23.8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250	287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23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300	317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7141
담 당 자	5급 전상희, 양준혁	이 메 일	shjunedu21@korea.kr yang385@korea.kr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 및 기초학습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통합적 성장 지원

□ 과제 내용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을 확대하여 다문화유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도입·운영('15년~)

○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보급('20.8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21) 162교 →('22) 198교)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모든 유아에게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2.3월)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지정

○ (2~4분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담당자 협의회 및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예산(특교 9,141백만원)에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맞춤형 다문화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유아 발달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수	120	198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23	맞춤형 다문화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유아 발달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수	200	212	시·도교육청 운영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전상희, 양준혁	이 메 일	shjunedu21@korea.kr yang385@korea.kr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역량을 측정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 편·입학 예정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학교 준비과정인 '징검다리 과정'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예비학교 도입('12~'19년) 후 한국어학급으로 확대('19년~) 운영

○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12년) 및 개정('17.9월)

○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여 중도입국·외국인자녀에게 학교 편·입학 등 자료 안내('17년~)

○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운영('19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법무부 협업), 시·도교육청, 학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한국어학급 설치·운영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한국어학급을 확대('21년 393학급 → '22년 429학급)하고, 한국어교육 수혜 학생 수가 적은 한국어학급 조정을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학생이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인근 한국어학급 운영교 또는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한국어학급 지정 및 징검다리과정 개설

○ (2~4분기) 한국어 학급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 (4분기) 한국어 학급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예산(특교 9,141백만원)에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입국초기 적응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수	350	444	시도교육청 결과보고서
’23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수	450	520	시도교육청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전상희, 양준혁	이 메 일	shjunedu21@korea.kr yang385@korea.kr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해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 및 언어교육, 학교생활 적응 등 지원

☐ 과제 내용

○ 국내 대학(원)생과 다문화·탈북학생을 매칭하여 기초·한국어 학습, 이중언어 역량 강화, 진로·진학 상담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사대생 멘토링 사업 도입('09년) 후 참여대학('11년, +모든 대학) 및 지원대상('12년, +탈북학생)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멘토·멘티 모집 및 매칭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멘토링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 멘토-멘티 매칭을 위한 수요조사 시스템 도입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추진계획 수립

○ (1~4분기)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 소요예산 : **총 6,750백만 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750	6,750	0	
-국 비	▪ 일반회계	6,750	6,750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추진 (신규 과제)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73	74	멘토링 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22
담 당 자	5급 양준혁	이 메 일	shjunedu21@korea.kr yang385@korea.kr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지속적 확산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자유,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 교육

□ 과제 내용

○ 유네스코 등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공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기반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인천선언문*」채택('15.5월)

* 2030년까지「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글로벌 교육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GCED) 확산 반영

○ 유엔 개발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15.9월)

* 세부목표 4.7에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증진' 반영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지원('15년~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 교육청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교육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교육청)

2. ’22년도 추진 실적

□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확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실시 및 교사연구회(중앙 및 시도) 운영·지원(658명, 연중)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대외협력 프로그램운영(1,695명, 연중)

○ 세계시민교육 도서관 운영(자료 6천여권 보유, 학술자료 DB 연계)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22.11.3.~11.4.)

3. ’23년도 추진계획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및 활동(연중)

※ 중앙선도교사 1차연수(1분기) → 시도선도교사 전달연수(2분기) → 중앙선도교사 2차연수(3분기) → 성과공유 워크숍(4분기)

○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조직·운영 및 시도연구회 지원(연중)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2분기)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체험 지원(연중)

○ 세계시민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4분기)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4분기)

□ 소요예산 : **총 852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57	852	19.3	
-국 비	▪ 일반회계	1,057	852	△19.3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852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세계시민교육 연수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확산도(점)**	3.5	4.24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확산 활동 참여도 측정 (리커트 척도(5점 만점) 기준)
'23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11교	지난 3년(2020-2022) 개설 지원교 평균(9.33)의 올림 값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0
담 당 자	교육연구관 전성원	이 메 일	rail0880@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75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7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77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7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	100%	36,107	38,329	6.2%
1. 경 제	1	100%	36,107	38,329	6.2%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전략적인 해외 연구자 유치 여건 조성

주요 사업내용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단기(3~12개월) 또는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를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 최대 3억 원까지 단기(3~12개월)·장기(3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 원까지 10년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22년 성과 : 해외 우수 연구자 154명 신규 선발, SCI(E)급 논문 583건, 등록특허 5건 등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1개	36,107	38,329	6.2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36,107	38,329	6.2	
I-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36,107	38,329	6.2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급격히 기술이 발전되는 국제환경에서 우수 과학기술 연구자 확보는 신산업 성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中, 日 등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연구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과학 인재 영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경쟁적으로 추진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 우수 연구자 154명을 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신규 초빙·유치하여 논문 우수한 성과 도출

· '22년 성과 : SCI(E)급 논문 583건, 등록특허 5건 등 ('24.2월 집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략적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우대혜택 확대(장기 체류기간 부여, 가족 체류지원 확대) 필요

* 과기정통부 추천시 이공계 해외 우수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및 체류 등 혜택 부여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전략적인 해외 연구자 유치 여건 조성

□ 촘촘하고 체계적인 해외인재 입국·정착 지원

□ 연구자 맞춤형 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선발 및 입국지원 (총 3차, ~’23.6월)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과제 내용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단기(3~12개월) 또는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를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 최대 3억원까지 단기(3∼12개월)·장기(3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원까지 10년 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94. 2.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착수

○ 2015. 3.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0. 1.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사업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추진절차 : 과제공모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운영 및 관리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외 우수 연구자 154명 신규선발(외국인·재외한인)

○ 2022년 성과

- SCI(E)급 논문 583건, 등록특허 5건 등 (’ 24.2월 집계)

3. ‘23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계 획
1/4분기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2/4분기	▪ 신규과제 선정 및 입국 지원
3/4분기	▪ 현장점검
4/4분기	▪ 성과교류회 개최

□ 소요예산 : **총 38,329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6,107	38,329	6.2	
-국 비	▪ 일반회계	36,107	38,329	6.2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 38,329만원

- 계속과제 지원을 위한 26,204백만원, 신규과제 127개 선발을 위한 12,125백만원

■ (계속, BP) 229과제 × 평균 77.09백만원 = 17,654백만원

■ (계속, BP+) 15과제 × 평균 570백만원 = 8,550백만원

■ (신규, BP단기) 46과제 × 150백만원 × 12/12개월 = 6,900백만원

■ (신규, BP장기) 76과제 × 100백만원 × 6/12개월 = 3,800백만원

■ (신규, BP+) 5과제× 570백만원 × 6/12개월 = 1,425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60명	160명	매년 유치인원 산출
'23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127명	183명	매년 유치인원 산출

5. 담당자

소관부서	과학기술정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전화번호	044-202-4831
담 당 자	5급 안효정	이 메 일	ahyoj@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외교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84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85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87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8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3.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4-3-2-2 난민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88

외 교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1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국가 간 외교관계를 고려한 외국인정책 추진과제 협조**

주요 사업내용

- UNHCR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집행이사회 및 글로벌 난민포럼(GRF) 등 관련 회의 참여, 한-UNHCR 인적 교류 확대

- 외국인정책 관련 협조과제 지원

  -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재외공관 사증 정밀심사 강화 등 지원
  -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및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 강화 지원
  -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 관련해서는 외교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 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1개				
소계	1.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1)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비예산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관련) △한-UNHCR간 인적 교류 확대, 협의 개최 등을 통한 양자협력 강화, △유엔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 이행 관련 국제협력 동참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UNHCR과의 협력 강화

- 한-UNHCR 기본협력협정 서명(11월)

- 인적 교류

  · 유엔난민최고대표 방한(11월), 우리국민 고위급(D-1) 진출(한국대표부 대표)(11월), UNHCR 한국 대표 및 각국 사무소와 외교부 본부, 공관과 협의(수시)

- UNHCR 회의 참여

  · 제83~85차 상임위원회(3, 6, 9월), 제73차 집행이사회(10월),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플랫폼 핵심그룹 회의(3, 9월), 2천만불 공여그룹 회의(3월) 등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UNHCR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집행이사회 및 GRF 등 관련 회의 참여

○ 한-UNHCR 인적 교류 확대

□ **(협조 과제)** 외국인 정책 관련 사안 발생시 양국 외교관계에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정책 추진

○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재외공관 사증정밀심사 강화 등 측면 지원

○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및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 강화 지원

○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은 여타 부처 추진 사업과 함께 외교부 소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 참여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 참여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상임위원회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체계 참여	■ UNHCR 제74차 집행이사회 ■ 한-UNHCR 고위급 교류(수시) ■ 제2차 GRF 참여 및 공약 발표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회의(수시) ■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수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난민 관련 국제 논의 및 규범 형성 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과제 내용

○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주요 국제 논의 적극 참여

○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약 발굴 및 이행

* GCR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난민수용국가 부담 경감, 난민의 경제적 자립 증진, 제3국 정착 방안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이 핵심 목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8.1월 신규 과제 추진

○ (2018년) △유엔난민최고대표 방한(10월) △제71~73차 UNHCR 상임위원회 (3, 6, 9월) △제69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유엔 난민 글로벌 컴팩트 채택(12월) 등

○ (2019년) △유엔난민최고부대표 방한(1월) △제74~76차 UNHCR 상임위원회 (3, 6, 10월) △제2차 한-UNHCR 정책협의회(5월) △유엔난민기구 보호국장 방한(9월) △제70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제1차 글로벌난민포럼(12월) 등

○ (2020년) △'파키스탄의 아프간 난민 수용에 관한 국제회의'(2월) △제77-79차 UNHCR 상임위원회(3, 7, 9월) △외교장관-유엔난민최고대표 유선협의(4월),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참여(SSAR 고위급 회의(7월), 핵심그룹 출범 회의(10월) 등), △제71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 △제3차 한-UNHCR 정책협의회(12월) 등

* SSAR: Solutions Strategy for Afghan Refugees

○ (2021년)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 현장회의(2, 5월), △제80~82차 UNHCR 상임위원회(3, 7, 9월), △제72차 UNHCR 집행이사회(10월) △글로벌난민포럼(GRF) 고위급 점검회의(12월)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외교부, 법무부 등

○ 추진절차 : 사안별로 별도 또는 협력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UNHCR과의 협력 강화

○ 한-UNHCR 기본협력협정 서명(11월)

○ 인적 교류 :

- 유엔난민최고대표 방한(11월)

- 우리국민 고위급(D-1) 진출(한국대표부 대표)(11월)

- UNHCR 한국 대표 및 각국 사무소와 외교부 본부, 공관과 협의(수시)

○ UNHCR 회의 참여

- 제83~85차 상임위원회(3, 6, 9월)

- 제73차 집행이사회(10월)

-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플랫폼 핵심그룹 회의(3, 9월)

- 2천만불 공여그룹 회의(3월) 등

3. ’23년도 추진계획

□ UNHCR과의 협력 강화

○ (수시) 한-UNHCR 고위급 교류

○ (1분기 등) 제86~89차 상임위원회(3, 6, 9월)

○ (4분기) 제74차 집행이사회(10월)

○ (수시) 아프간난민해법전략(SSAR) 지원플랫폼 핵심그룹 회의

□ 글로벌 난민 문제 관련 국제회의 참여

○ (4분기)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GRF) 참여 및 공약 발표

○ (수시, 3 · 6 · 9월 인권이사회 등) 난민 관련 결의안 논의 적극 참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난민 관련 규범 형성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UNHCR 및 난민 관련 회의 참여	4	7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3	정량/횟수
’23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난민 관련 규범 형성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UNHCR 및 난민 관련 회의 참여	4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정량/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전화번호	02-2100-7263
담 당 자	외교통상5등급 김용기	이 메 일	yogkim18@mofa.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법 무 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97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100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110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117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1-①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 117

1-1-1-②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120

1-1-1-③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122

1-1-1-④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125

1-1-2-①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 128

1-1-3-①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 130

1-1-3-②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 132

1-1-3-③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 134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1-① [국내체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136

1-2-1-④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 139

1-2-2-①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 141

1-2-2-②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143

1-2-2-③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 145

1-2-3-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147

1-2-3-②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149

1-2-3-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151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153

1-2-5-②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 155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①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 157

1-3-2-①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159

1-3-2-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161

1-3-2-③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163

1-3-2-④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 166

1-3-3-②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168
1-3-3-③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 170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 172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1-③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174
1-4-1-④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 176
1-4-1-⑤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178
1-4-2-①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 180
1-4-2-②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182
1-4-2-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184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1-①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186
2-1-1-②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188
2-1-2-①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190
2-1-2-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192
2-1-3-①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 194
2-1-3-②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 196
2-1-3-③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 198
2-1-3-④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00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④ 귀화 면접시험 개선 ····· 202
2-2-1-⑤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205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1-①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208
2-3-1-②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시스템 고도화 · 210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3-1-1-①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213
3-1-1-②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 215
3-1-2-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217
3-1-2-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 219
3-1-2-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221

3-1-[2]-④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223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1]-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226
3-2-[1]-②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228
3-2-[1]-③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 232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④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235
3-3-[3]-②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237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1]-①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239
3-4-[1]-②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241
3-4-[1]-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 243
3-4-[2]-①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강화 ····· 245
3-4-[2]-②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 247
3-4-[2]-③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 249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2]-①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 251
4-1-[2]-②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253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255
4-2-[2]-②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257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4-3-[1]-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259
4-3-[1]-③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263
4-3-[1]-④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266
4-3-[2]-② 난민의 처우 개선 ····· 268
4-3-[3]-①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270
4-3-[3]-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274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1]-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276
5-1-[1]-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278
5-1-[2]-①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281

5-1-2-②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283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5-2-1-①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285
5-2-1-③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288
5-2-2-①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290
5-2-2-②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292
5-2-2-③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294
5-2-2-④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297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1-①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 299
5-3-1-②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 301
5-3-1-③ 모바일 외국인증록증 발급 ····· 303
5-3-1-④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305
5-3-2-①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307

5-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5-4-1-①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309
5-4-1-②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311
5-4-1-③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 313
5-4-1-④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 315
5-4-2-① 이민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 319
5-4-2-②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 321

법 무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92	100%	5,292	33,522	533.4%
1. 경 제	32	34.8%	505	8,502	1,583.6%
2. 안 전	12	13.0%	596	761	27.7%
3. 통 합	17	18.5%	1,344	1,460	8.6%
4. 인 권	10	10.9%	540	19,614	3,532.1%
5. 협 력 / 인프라	21	22.8%	2,307	3,185	38.1%

추진 방향

- **외국인력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선,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강화**
-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이민행정 선진화**

주요 사업내용

-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필수분야 외국인력 공급 확대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첨단산업 분야 비자 제도 개선, 숙련기능인력 혁신적으로 확대·시행(K-point E74),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계절근로자 확대 등
-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 불법체류 감축 5개년('23~'27년) 계획 추진, 단속·보호 인력 및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로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립능력 향상 유도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계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 확대 등
- 기본 인적정보 등 정보 연계 및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9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2)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7)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92개	5,292	33,521.9	533.4%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2)	505	8,502.3	1583.6%	
1-1-1-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80	100.0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194	8,079	4,064.4%	
1-1-1-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1-3-1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1-1-3-2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1-1-3-3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1-2-1-1	[국내체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50	100%	
1-2-1-4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2-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1-3-1-1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66	48.3	△26.8%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245	245	0.0	
1-4-1-4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1-4-2-2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2)	**596**	**761**	**27.7%**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2-1-3-1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2-2-1-4	귀화 면접시험 개선	596	596	0.0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2.97	100%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고도화		162	100%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17)	**1,344**	**1,460**	**8.6%**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3-1-1-2)동일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90	100%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033	1,059	2.5%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311	311	0.0	
3-2-1-3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강화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0)	**540**	**19,613.6**	**3,532.1%**	
4-1-2-1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8,707	100%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56	213.6	281.4%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38	38	0.0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92	100%	
4-3-2-2	난민의 처우 개선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446	463	3.8%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1)	**2,307**	**3,185**	**38.1%**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91	100%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75	113	50.7%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1	100%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2,004	2,268	13.2%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산미확보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5-3-1-1)동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481	100%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일시중단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3	100%	
5-4-1-3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5-4-1-4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228	218	△4.4%	
5-4-2-1	이민과 개발(M&D)의 정책화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활용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급감, 지역소멸의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이민정책 활용 필요성 증가

※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 332만명 감소, 고령인구는 485만명 증가(통계청,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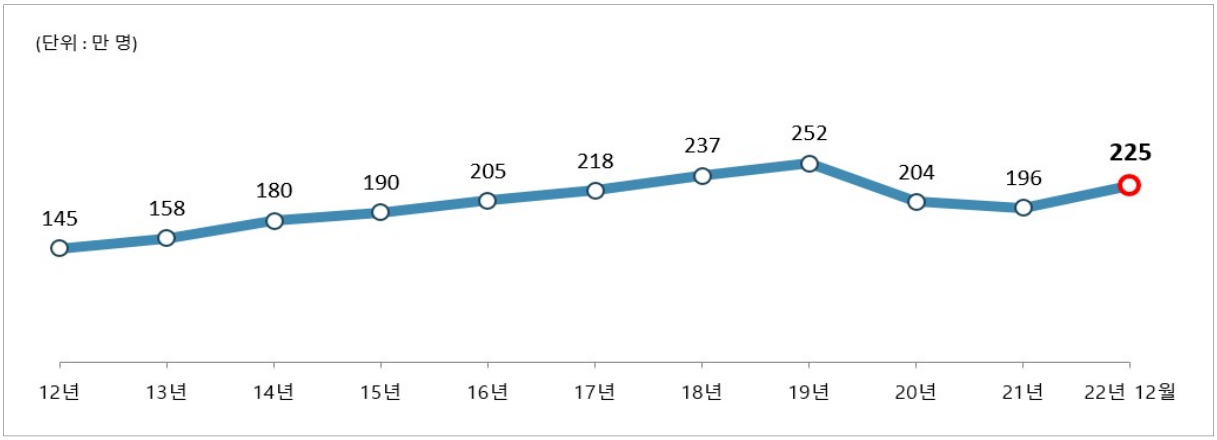
○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 간 정책 중복·비효율 발생

※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이민정책 추진체계로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 코로나19 펜데믹으로부터 점차 회복되어 관광객 등 국내 출입국자 수 및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 관광수요 회복으로 '22년 국내 출입국자는 1,9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25% 증가

【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입국자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9,030
출국자	44,363,675	46,777,964	7,172,408	2,317,328	9,715,198
총 계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 범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외국인 방한 관광객 유치 기조

- 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시책 시행과 외국인 관광시장 수요 회복으로 출입국자 급증 예상

■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3.29.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 (대통령) "외국인 방한 대비 비자 개선..."(법무부장관) "전자사증 발급기간을 현재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서 지역·국가 관할없이 전자비자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 온라인민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고 강조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한국문화(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① 동남아 단체전자사증 발급요건 완화, ②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기준 완화, ③ 전자사증 발급 기간 단축

■ **'국정과제(약속11-국정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2027 외국인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 - '비자 등 편의 제고'

□ 인력 부족 심화

○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유입 중단으로 특정 산업계 구인난 및 임금 상승 심화

※ 인력 부족 인원은 '13년 30.2만 명에서 '23년에는 56.3만 명까지 증가(고용부, 2023)

○ 전문·숙련 기술 분야 인력 수요 증가

- 신산업·첨단기술 확대로 전문·숙련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 수요 증가, 농·어업, 조선업 등 산업 분야는 인력 부족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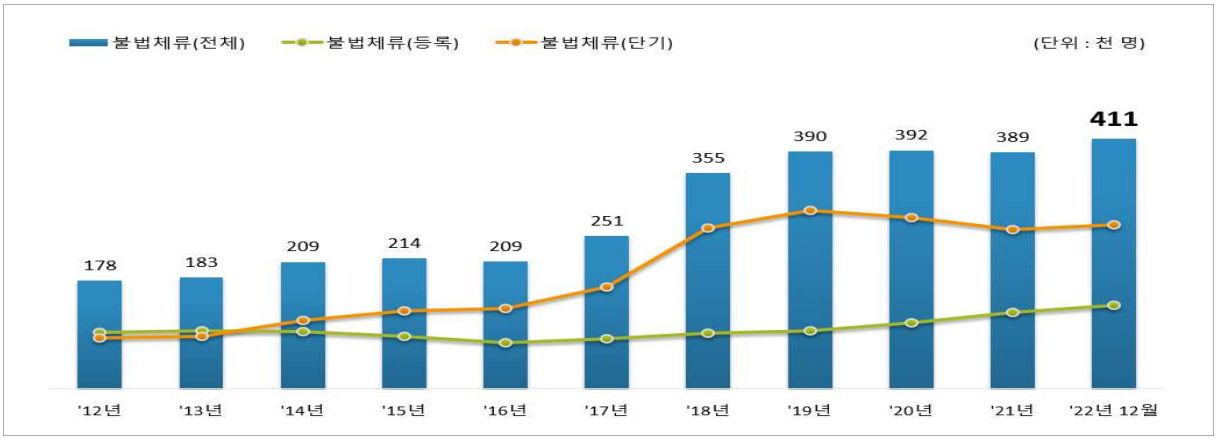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산업별)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업, (직업별)고숙련 직업군의 인력 수요 증가 예상(한국고용정보원, 2023)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 요구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

- 불법체류 외국인이 '17년 25만 명을 넘어, '18년 35만 명으로 급증, '22년에는 41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



○ 체류관리 강화 요구 증대

- 불법체류 신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 우려 등 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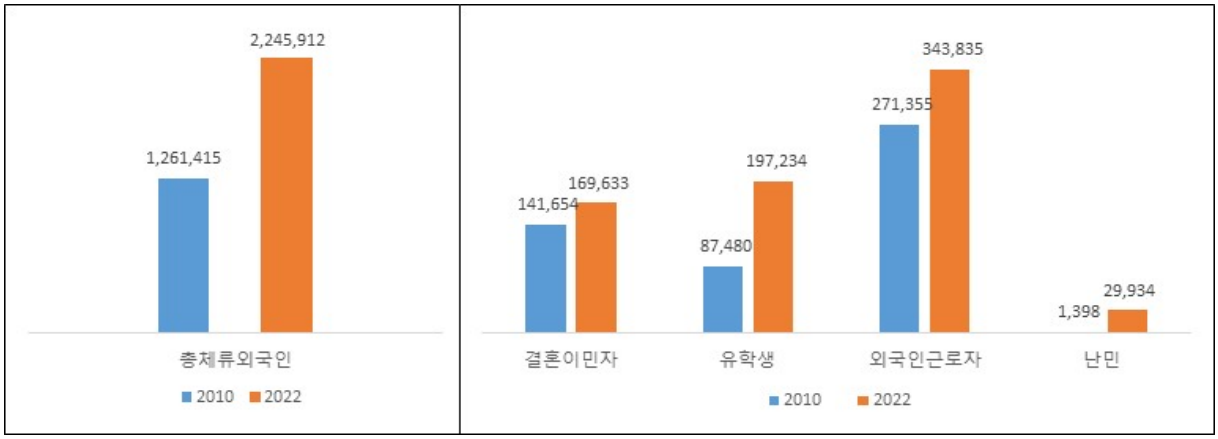
※ 5개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등)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 실시,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중요성 증대

○ 사회통합정책 신규 대상자 증가

-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수요 증가 및 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과거와 비교하여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의 유입 증가 추세

【 체류유형별 현황 】



* △(단순노무인력) '20년 56천명 → '23년 120천명, △(숙련기능인력 쿼터) '20년 1,000명 → '23년 35,000명으로 전년 대비 1,650% 증가

○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 단일민족 정체성 소실, 복지 비용 부담 증가, 외국인 범죄 등 우려로 인해 반(反) 이민정서,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반감 등 지속

☐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지원

- 계절근로제도,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지자체 역량 강화 필요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한국어 성적 우수 외국인 유학생·전문인력에 대해 구직 자격 변경 시 점수제 적용 면제, 주당 30시간 범위 내 시간제 취업 활동 허용

-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문연구자의 경우 국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연구(E-3)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선

-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목적 등의 단기방문(C-3) 비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 발급 재개

* 단체관광 6,769명, 전문인력 112명 등 총 7,116명 발급(’22.6.~’22.12.)

○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허용 상시화 및 농어업과 계절적으로 밀접한 제조업 분야에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확대

※ 44개 지자체 1,850명(’21년) → 104개 지자체 12,027명(’22년) 계절근로자 운영

-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1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총 118명 추천(’22.12. 기준)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 재개 및 특별자진출국 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유도

※ 관계부처 참여 정부합동단속(’22.10.11.~12.10.) 실시(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고용주 483명 적발),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22.11.7.~’23.2.28.) 총 6,893명 자진 출국

○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를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구축

○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노후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 교체(26대) 및 등록외국인의 이용 연령 인하(17세 이상→7세 이상)를 통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908,914명('21년) → 9,992,181명('22년)

-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 국가·지역 확대(50개국 → 112개국)

- 승선 검색, 순찰 등 직접 심사를 통한 항만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감시정(인천, 부산 등 2척) 도입·배치*

* 감시정 총 157회 운항, 승선검색 186회 실시, 105건 위반 적발('22.4.~'22.12.)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대규모 집합 평가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시자 편의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도입

* 경기도 광명 개소('22.3.), CBT 사전평가 9,009명, 귀화용 종합평가 474명 응시('22.3.~'22.12.)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에게 상대방 국가의 문화, 결혼이민 체류 정보 등 제공을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책자 발간 및 배포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업무 수행을 위해 난민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난민업무」 지침 개정 및 대외 공개

- 재정착난민 사업 재개*, 민관협력의 새로운 난민수용 방식인 ‘학생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도입

  * 미얀마 등 재정착난민 67명 입국

-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착 지원 시행

  * 인천, 울산, 양주 등 78가구 399명 거주('22.12. 기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세미나·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이민정책 관련 사회 각계 의견수렴 및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방안 수립

※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8~9월) ▲국민참여단 대상 온라인 및 대면 토론회(8월, 10월) ▲제1회 이민정책위원회(11월) ▲이민정책 토론회(12월) 등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국제법」을 「이민학」으로 대체, '이민학' 표준체계 구성 등 도입방안 제시

-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 7개 중앙부처(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경찰청) 및 17개 광역 자치단체 참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이민정책의 부처별 추진에 따른 중복·비효율 야기

➡ 부처별 단편적·분절적으로 시행 중인 이민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극대화

○ (문제점)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 필수 산업분야 및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활용방안 검토

○ (문제점) 중앙부처 주도의 이민정책 추진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지역 기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지원

○ (문제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등 발생

➡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을 통해 단속 수행 중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 강화

○ (문제점) 이민·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인식 존재

➡ 다문화 수용성 확대 및 이민자에 대한 편견·차별 방지 교육 강화,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대국민 인식개선 방안 다변화 필요

○ (문제점) 난민 등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 야기

➡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양화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쿼터 확대 및 점수제 간소화 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 인력 제도 개선 추진

- 산업현장 및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

-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및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한 우수유치기관 지정 확대

* 기업 인센티브·수학여행단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동남아 3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단체전자비자 제도를 일반 단체관광객까지 확대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 참여 확대를 통한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지방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자진출국 유도로 현재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향후 5년 내(’23~’27년) 20만 명 대까지 감축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체계적인 입국 외국인 정보 관리·분석을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검토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외국인의 정착 단계별, 체류 유형별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강화

- 귀화 민간면접관 신규 선발,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국적면접심사 질문지 개정,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 및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소송 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한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 「난민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이의신청 절차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 처우 제도 개선 지속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인구감소 대응,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 해소 등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관련, 지자체 대상 맞춤형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래 수요예측 모델 개발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3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사업 입찰 공고,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추진	■ 신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1-2-1-1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23. 1월)	법무부 국적과
1-2-1-4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법무부 체류관리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지역특화비자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상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방안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불체감축 추진(안) 수립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면담	법무부 이민조사과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국경·체류·안전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지정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 23. 2월)	법무부 국적과
2-2-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홍보 강화	■ 재외공관 국적 설명자료 제작 배포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 사업 검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4-1-2-1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 출국대기소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이민·난민 용어사전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 정보 현행화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해외 난민수용 사업 추진	법무부 난민정책과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난민 재정착에 관한 실무회의 참석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책 협의	법무부 개선추진단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22년 연구용역 활용방안 제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 예산 신청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예산 신청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시스템 구축	법무부 이민정보과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우리동네 일일방문객 일일 현황 분석 제공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UNNM 등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3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2-1-1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23.6월)	법무부 국적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장기체류 경로 마련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 확대	법무부 체류관리과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 투자이민제도 개선	법무부 체류관리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다국어 지원 서비스 강화 ■ 단체 신청 가능 인원 확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4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법무부 체류관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착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착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3-3-3-2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법무부 이민통합과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울산사무소 보호실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	법무부 이민조사과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법적 기반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제정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 자료집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2	난민의 처우개선	■ 세계난민의 날 기념 행사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공론화	법무부 개선추진단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22년 연구용역 활용 결과 공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개선추진단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 절차 진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시스템 구축	법무부 이민정보과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UNNM 등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OECD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2-1-1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제도 설명회 개최(’23.9월)	법무부 국적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K-ETA 허가서 유효기간 연장 ■ 청소년 및 고령자 의무 적용 제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법무부 이민조사과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실무분과위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관련 주한대사관 홍보 요청	법무부 이민조사과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23.9월)	법무부 국적과
2-2-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국적 및 병역 화상설명회 실시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 정책컨설팅 시범실시	법무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활용한 정책컨설팅		이민통합과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대상 및 내용 발굴	법무부 이민통합과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CBT 평가지 추가 확보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	법무부 이민통합과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법적 기반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조사관 교육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 정보 현행화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2	난민의 처우개선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관계부처 협의	법무부 개선추진단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관계부처(부서) 업무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광역 이민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서비스 시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UNNM 등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규모 산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법무부 체류관리과
1-1-1-3	외국인행정정보	■ 플랫폼 구축 완수 및 설명회	법무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종합플랫폼 구축	개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3-2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계획 발표	법무부 체류관리과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법무부 체류관리과
1-2-1-1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 12월)	법무부 국적과
1-3-1-1	지역특화형비자 제도운영	■ 지역기반 비자 관련 지자체 워크숍 개최	법무부 체류관리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예측 모델 개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 사회통합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집중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23. 10월) ■ 면접 질문지 개정(’23. 11월)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23. 12월)	법무부 국적과
2-2-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국적 및 병역 화상설명회 실시 ■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재외공관에 국적제도 홍보 협조 요청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 본사업 계획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본사업 계획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3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법무부 이민통합과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청주외국인 보호소 개방형	법무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보호시설 시범 운영 개시	이민조사과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일선관서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실적 취합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조사관 교육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 정보 현행화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제2회 글로벌난민포럼 참석	법무부 난민정책과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	법무부 개선추진단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관계부처(부서) 업무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개선추진단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UNNM 등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OECD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1-1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과학적 총량 관리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

- (인력공급 부족 규모 분석)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직종별 인력 부족 규모 분석·추정

-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영향, 불법체류·이민정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도입 규모 예비 산출)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소관 부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총량 산출

- (결정·공표)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량 최종 결정·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추진절차

❶ 공급 부족 규모 분석	▸	❷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	▸	❸ 도입 규모(총량) 일차적 산정	▸	❹ 의견 수렴 (관계부처·전문가)	▸	❺ 도입 규모 최종 산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신규 추진 과제

3. '23년도 추진 계획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

○ ('23. 상반기) 연구용역 발주, 제안서 심의·평가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계약

○ ('23. 하반기) 중간보고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 ('23. 4분기)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량 최종 결정·공표

□ 소요예산 : 신규 추진 과제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	80	100	신규
-국 비	▪ 일반회계	-	80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신규 추진 과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24년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24년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1회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변화와 이민자 유입 영향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입관리, 사회통합, 정착 및 정주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추진

□ 과제 내용

○ 이민자 유입 및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비자 신규 도입

○ 산업 현장, 지역 수요 기반,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등 맞춤형 비자 신설로 국익 및 지역 경제 발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선별적·체계적 비자제도 운영으로 국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력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17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조항을 일반 체류자격(단기, 장기)와 영주자격으로 분류체계 정비

○ ('21. 10.) K-컬처 연수 비자 신설 입안

○ ('22. 9, / '22. 1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총 28개 지자체)

○ ('22.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체류자격 지침 등 정비

2. ’22년도 추진 실적

○ 신규 추진 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시범사업)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 발급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R) 비자 발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도 신설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처 간 상이한 외국인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행정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각 부처가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생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하면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

○ **(외국인정보 정보연계)** 부처별로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 기관별 연계되는 외국인 행정정보 현황 확인 및 납세, 범죄, 복지 등 분야별 외국인 연계 정보 관리 강화

○ **(데이터 분석 체계구축)** 외국인정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별 특수성(농어촌, 공단, 외국인밀집 지역 등)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7.)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과 신설

○ ('21.9.) 외국인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TF 구성·운영

○ ('22.5.)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22.5)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종합플랫폼 구축범위 및 추진방향 수립, 플랫폼 주요 목표 모델 설계 및 이행계획 마련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내·외부 데이터 선별 플랫폼 이관

□ 구축사업 완수 및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 소요예산 : **총 8,079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94	8,079	4,064	
-국 비	▪ 일반회계	194	8,079	4,064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구분		금액	비고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1,918,972	
	개인정보 영향평가	120,086	
	소 계	2,039,058	
자산취득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3,670,858	
	하드웨어 구매	2,369,084	
	소 계	6,039,942	
합 계		8,079,0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보종합 플랫폼 구축	종합플랫폼 사업 완수	사업완수율 (%)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 당 자	5급 김창규	이 메 일	keguri99@korea.kr

1-1-1-4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된 반면, 외국인은 부처별 다른 표기 방식으로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 곤란한 문제 개선

□ 과제 내용

○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을 국제 표준기준으로 제정

○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안전한 외국인 동일인 확인 체계 구축

□ 과제 추진연혁(경과)

○ ('21.2.)「외국인 신원확인 및 정보공유 실태조사(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결과, '외국인 신원정보 통일적 기준 마련' 권고

○ ('22.2.)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실무협의체 구성

- 부처 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통일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 1차 협의체 : 형사사법기관[법무부(범정,교정),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법원]

※ 2차 협의체 : 주요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고용부, 국세청, 복지부, 여가부, 해수부, 국정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형사사법기관, 외국인정책 관련기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협의체 구성→법적근거 마련→ 표준화 시범운영 →표준화 연계 확대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표준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 운영

- 협의체 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1·2차 실무협의회 개최('22.9.20., 9.22.)

3. '23년도 추진계획

□ 기본인적정보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추진**

○ 개정안 마련 (1/4)분기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4)분기

○ 법제처 심사 및 영향평가 (3/4)분기

○ 국회 제출('23. 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조항)**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 **(제공 및 사용권고)** 관계 기관에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 시 법무부 보유 정보 제공 및 법무부장관의 사용 권고

○ **(정보시스템 운영)** 기본인적정보 등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목적 범위 내 활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관련 실무협의체 운영('23. 하)

○ 실무협의체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시범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결과, 운영 매뉴얼 등 설명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 및 국회제출	완수율(%)	100%	국회 제출 ('23.8.)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 당 자	5급 송병희	이 메 일	izntbad1@korea.kr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증 심사를 제외한 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재외공관의 업무적체 해소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사증 접수량 대비 심사인력이 부족한 공관 또는 주재국 여건 상 민원인 대기가 곤란한 공관 등을 중심으로 비자신청센터 설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9.) 비자신청센터 시범운영 개시 (광저우, 칭다오)

○ ('18. 9 ~ '19. 7.) 중국(3개소), 베트남(2개소), 인니(1개소) 비자신청센터 개소

○ ('19. 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체결

○ ('20. 3 ~ '21. 1.)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교부(협조)

○ 추진절차 : 개소 지역 선정 → 센터 운영기관 선정 → 비자신청센터 개소

2. '22년도 추진 실적

□ 비자신청센터 신규 개소

○ 영국(런던) 비자신청센터 신규 개소('22. 1월)

3. ’23년도 추진계획

□ 비자신청센터 신규 개소

○ 비자신청센터 신규 운영대상 지역 확정(’23년 1분기)

○ 신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23년 1분기)

○ 신규 비자신청센터 설치(’23년 3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	3개	7개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1-3-1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 희망자의 자격증·경력·학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IT,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를 유치하는 트랙 마련

□ 과제 내용

○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부여

-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 체류 지원

※ 첨단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경력·학력 등 점수제 평가를 통하여 검증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점수제 우수인재(F-2-7) 관련 지침 등 정비

-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IT, 나노, 디지털전자 등 유망 산업 분야와 과학기술 연구분야 잠재적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2년도 추진 실적

○ 점수제 우수인재(F-2-7) 관련 지침 등 정비(’21. 12월)

-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게도 우수인재 초청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3. ’23년도 추진계획

☐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자격 제도개선(체류관리 지침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1-3-2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유학생이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구인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산업분야에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E-7) 비자 및 거주(F-2) 비자로 전환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추진전략 수립('23. 하반기)

○ 유학생 졸업 후 취업비자 현황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자체계 구축 필요

□ 과제 내용

○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경력·학력·연령·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신규 추진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 '22년도 추진 실적

○ 신규 추진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23년 상반기)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23년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사무관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1-1	우수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1. 과제 개요

□ 목적

○ 우수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KAIST 등 학계의 요구로 '21. 12월 시범 도입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 과제 내용

○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및 유입 촉진 등 활성화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대상자는 취업 등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F-2-7S) 자격 부여 △3년 후 점수 요건 충족* 시 영주(F-5-S1) 자격 부여 △연구실적 우수 시 특별귀화 가능

* 학력·연구경력·실적 등의 평가항목 중 90점 이상(총 배점 200점) 획득 필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카이스트-법무부" 우수인재와 소통 간담회 개최('21.10.)

○ 패스트트랙 제도 시범 시행('21.12.)

○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마련('22.12.) 및 제도 본격 시행('23.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

2. ’22년도 추진 실적 (’23년 신규 과제)

□ 이공계 특성화기관 현장 간담회 개최(‘22년 3~5월)

○ 패스트트랙 관련 정책 제언 및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의견 청취

- 도입 추진 중인 영주·귀화 절차 등 패스트트랙 제도 소개

- 정책 설계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교류·협조 당부

□ 우수인재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순회 교육 실시(‘22년 11~12월)

○ 우수인재 비자 등 정보제공, 외국인 취업정보 안내, 국내 법질서·생활교육, 패스트트랙 제도 관련 절차·요건 등 설명

3. ’23년도 추진계획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23.1.)

○ 영주·특별귀화 절차 정비하여 패스트트랙 통합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 및 계약(’23. 6.)

○ 연구용역 결과 고려하여 패스트트랙 등 영주·귀화 제도 개선 예정(’24년)

□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제도 설명회 개최(’23. 9.)

○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교육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소개

-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수인재가 겪는 고충 등 파악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 12.)

○ 패스트트랙을 통한 특별귀화 절차 정비 및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반영

□ 소요예산 : **총 5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50	100	
-국 비	▪ 일반회계		50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50백만원)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패스트트랙 제도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제도 설명회 개최	2회	4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31
담 당 자	5급 배창준	이 메 일	baechj03@korea.kr

1-2-1-4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 (활동범위) 비자 발급 요건 충족 시, 기존 허용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

※ 단, 단순노무활동 및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 제외

- (고소득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고소득자

-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인 외국인(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신규 추진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보도자료 배포 → 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신규 추진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 (’23. 1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지침 개정·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 신설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1회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 확대 공급 추진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개선

- (쿼터 확대)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혁신적으로 확대
- (추천 제도) 중앙부처 추천 외에 지자체·기업체 추천 도입
- (점수제 간소화) 실질적 요건 위주로 간소화
-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전환 후 일정기간 기존 사업장 근무 의무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신규 추진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대방안 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신규 추진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쿼터 확대 및 세부 추진 계획 입안(’23년 상반기)

○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23년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사무관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근로자 공급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 방안 필요

☐ 과제 내용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력 공급체계 개선

2. '22년도 추진 실적

○ 신규 추진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및 조기집행('23년 상반기)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시행('23년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 당 자	5급 황민하 사무관	이 메 일	hminha26@korea.kr

1-2-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학 중 학업에 충실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 부족 산업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는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유학생이 졸업 후 법무부장관이 구인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산업분야에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E-7) 비자 및 거주(F-2) 비자로 전환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추진전략 수립('23. 하반기)

○ 유학생 졸업 후 취업비자 현황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에 한계가 있는 간병·가사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 부족 전망, 건보연구원) '25년: 8백명→ '26년: 4만명→ '27년: 7만6천명

□ 과제 내용

○ 간병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방안 추진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졸업 유학생(D-10)에게 요양자격증 취득 및 요양 분야 취업(E-7) 허용

-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

○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검토

-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한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 방안 마련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검토

- '22. 9.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방안' 정부에 건의

- '22.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요양보호 분야)

- '22. 12.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 추진절차 : 관계부처(요양보호 분야 : 복지부, 가사돌봄 분야 :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등)와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세부방안(도입 규모·형식 등) 논의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2. '22년도 추진 실적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추진

○ 관계부처 논의

-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회의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논의 지속

* 저고위 산하에 저고위·기재부·복지부 3부처 공동단장(차관급)으로 구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관계부처 논의	2회		회의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업 종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성실 참여 및 이탈 방지

□ 과제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참여 횟수, 기간 등 고려하여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 체류자격 인센티브 부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단기취업(C-4, 90일))

○ 2019. 12.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장기 체류자격 전환 요건 설정 → 관련 지침 개정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22. 9.)

○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 부여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계절근로 성실 참여자의 체류기간 연장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내국인 구인난 심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에 발맞춰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분야별 외국인력 도입의 탄력성 등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선발 방식 확대 및 요건 강화

- (국내) 유학생, 기타 연수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적극 활용

- (해외)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의 해외선발 요건 강화

※ 연령·학력·기능 등의 요건을 적용한 점수제 강화 등

○ 외국인력 도입 필요 분야 지속 발굴

○ 기타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비자 제도개선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8. 2022년도 비전문취업(E-9) 자격 도입규모 등 확대

○ 2022. 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정부 합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22. 12.)

○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 숙련형성자의 경우 출국-재입국의 과정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체류 허용

-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

○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도모

-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을 활용한 외국인력 허용업종 다양화

- 비전문취업(E-9) 자격 도입 대상에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

3. '23년도 추진계획

□ 2023년도 1~4분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출입국관리법령,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정보와 부처별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산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 과제 내용

○ 비자 및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유학생이 졸업 후 변경 가능한 비자 정보 및 부처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서 취업과 연계한 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 부스 운영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 추진절차

-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현황 파악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산업부 KOTRA 주관)' 지원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 지원('23. 3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2개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체류허가 상 혜택에 걸맞게 투자이민 기준 등 조정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촉진을 위해 관련 체류허가 제도 조정

□ 과제 내용

○ 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투자금 도입기준 수립, 제도명칭 변경

○ 기술창업자에 대한 최초 체류허가 기간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2.)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 ('13. 5.)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 ('21. 2.)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및 투자이민제도 개선방향 논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투자이민협의회 협의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투자이민제도 조정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도명칭 변경(’23년 2분기)

○ 투자이민제도 최소 투자기준금액 상향(’23년 2분기)

□ 기술창업 외국인의 국내 정착 촉진

○ 기술창업(D-8-4) 최초 체류허가 기간 확대(’23. 3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지침 개선	2회	2회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3-1-1	지역특화형비자 제도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과제 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장기체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

  * 현재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어있는 단순 노무(53개 직업)를 허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정규사업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6. 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특화비자 도입 국정핵심과제 세부과제로 선정

○ '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 지역특화비자 신설 포함

○ '22. 7. 26. 대통령 지시사항 지역특화비자 도입 지시

○ '22. 10. 4. 시범사업 실시

○ '23. 12. 8. 2024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지자체 공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 희망 지자체 공모 → 사업 지자체 선정 및 인원배정 → 사업 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실시

○ 기간 : 2022. 10. ~ 2023. 10.

○ 실시결과 : 총 15개 지자체

- 배정인원 850명 중 118명 추천(13.8%) (’22.12.31.기준)

3. ’23년도 추진계획

□ 시범사업 계속 실시(’23. 10월)

○ 참여 지자체 확대

- ’22. 12월 추가모집에 따라 28개 지자체, 배정인원 1,500명

○ 참여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23. 하)

□ 2024년도 사업 계획 수립(’23. 하)

○ 정규사업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시행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참여 지자체 모집 공고(’23.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 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방안으로 이민정책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 단위 이민정책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업무량 증가 대응,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지원

□ 과제 내용

○ 지자체 단위 이민정책 실행력 확보 및 지방 출입국관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이민자 거주 지자체에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4.)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전라·경상·충청권)" 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제시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협업)

○ 추진절차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및 안건 협의·논의 → 법령 개정 검토 → 관계기관 의견 조회

2. '22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없음('23년 신규 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실무자 협의 및 회의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분기별)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안건으로 논의(연중)

○ 국가정책수요 의견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로 제출(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전담부서 설치 관련 협의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정책에 관한 현안 논의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안건 발굴 및 정책 논의 필요

☐ 과제 내용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과제 안건 발굴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시 계절근로자 배정, 지역특화비자 운영 등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논의

* 국무총리 주재, 법무부 등 5개 부처 참석

○ ('22.09.) 운영세칙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2.11.)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이민정책에 관한 지역 수요 파악 → 협업 및 교류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회의 개최 → 안건 논의 및 정책화 가능성 검토

2. ’22년도 추진 실적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2.11.24 15:00 ~ 16:30 / 온라인 화상회의*

*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최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주재),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국정원, 경찰청, 해경청, 17개 광역지자체

○ 내용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역 주도 이민행정 활성화 방안 등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 관련 현안 논의 시 지자체 참여 유도(연중)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정책 안건 발굴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지자체 참여 횟수	1		회의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협업 강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

○ 지자체(기초 포함) 외국인 업무 담당자(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역량 강화

□ 과제 내용

○ 국내체류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기초포함) 공무원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 부족으로 외국인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전국을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로 나누고 해당 지역 시설을 이용,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사례형 교육 제공 및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협업 강화

- 국가 이민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및 협의체 등 구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09.)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최초 개최

- '15년부터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대상으로 연1회 1박2일 교육 실시

○ ('22.05.)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4회 실시(1회: 경기・강원권, 2회: 경상권, 3회: 전라권, 4회: 충청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협업·교류 강화를 위한 담당자(실무자) 협의 → 권역별 교육 개최 →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업무 협조, 담당자 간 교류 강화 → 확대 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실무담당자 총 247명 참석

회차	개최일자	권역	참석인원	개최장소
1회차	'22. 5.12 ~ 5.13	경기·강원권	51명	강원도 평창군
2회차	'22. 7.14 ~ 7.15	경상권	63명	경상북도 경주시
3회차	'22. 9. 1 ~ 9. 2	전라권	66명	전라북도 남원시
4회차	'22. 11.15 ~ 11.16	충청권	67명	충청남도 예산군

* 광역(17개) 및 기초지자체(228개) 참석율을 성과 목표로 설정

3. '23년도 추진계획

□ 권역별 개최 및 지자체 수요(요청)이 많은 계절근로 등 주제별(분야별) 교육과정 별도 개최 추진

○ 지자체 참석율 제고 및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지자체 사무지원 업무 등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 추진

□ 소요예산 : **총 48.3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6.1	48.3	26.8	
-국 비	▪ 일반회계	66.1	48.3	△26.8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48,300천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진행 및 교재 발간 5,160,000원 x 5회 = 25,8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 인원	270명	457명	참석자 수

* 광역(17개) 및 기초지자체(228개) 참석자 수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10% 상향 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 당 자	7급 윤동운	이 메 일	headrock999@korea.kr

1-3-2-4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중앙부처・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등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전담 업무 플랫폼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및 배포

2. '22년도 추진 실적

□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22. 9.)

○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보급

3. ’23년도 추진계획

□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	110백만원	0백만원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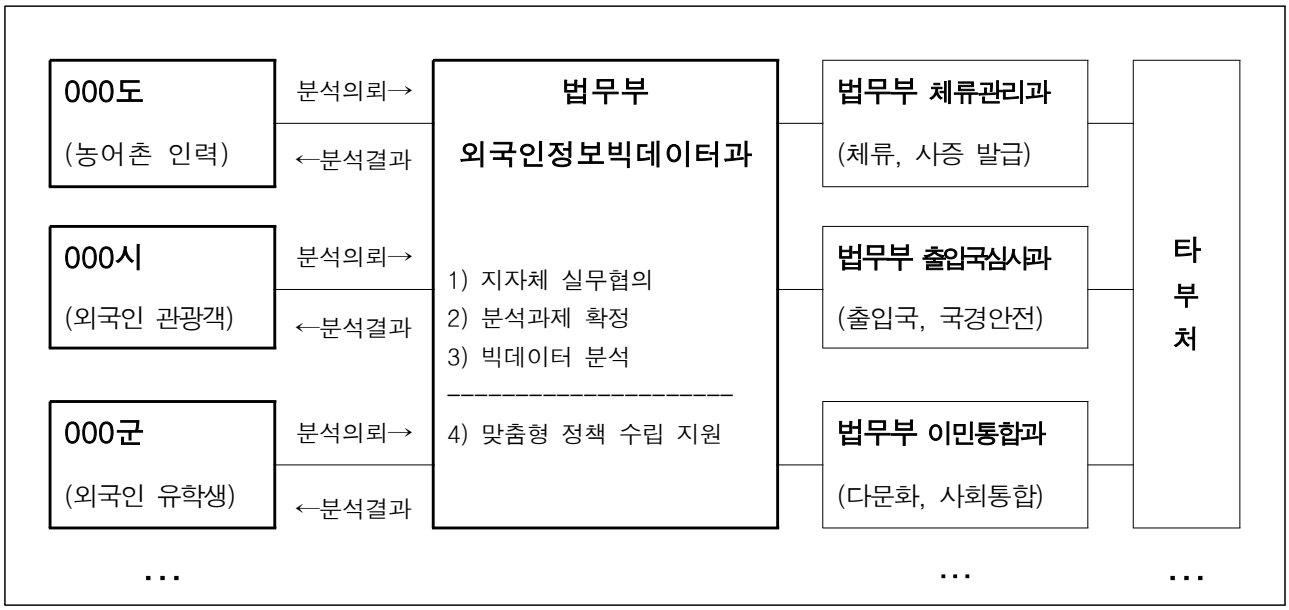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주무 부서 업무에 최적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특화형 외국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 맞춤형 데이터 분석지원

□ 과제 내용

○ 지역별 국민 인구 및 거주 외국인 분포, 취학 연령대 외국인 아동, 외국인 유학생 학교·전공별 분포, 지역별 외국인 고용·산업별 현황, 지자체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지도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지자체에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7.)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자체 요청을 받아 데이터 분석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주무 부처

○ 추진절차 : 지자체 요청 → 법무부 데이터 제공

2. '22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데이터분석 지원

○ 총 9개 지자체, 28개 지역 외국인 거주현황, 유학생, 고용·산업별 현황 등 분석 자료 제공

3. '23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상시)

□ 지자체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현황('18.~'22.) 분석 ('23. 9.)

□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분석 및 수요예측 모델 개발('23. 하)

○ 외국인 고용 농·어가의 지역별 분포, 재배 품목·면적 추이, 인력수요 집중 시기, 이탈 비율 등을 고려한 미래 수요 예측 분석·시각화 모델 구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 당 자	5급 김창규	이 메 일	keguri99@korea.kr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교육·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대외기관 및 이민자의 상담창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사회통합정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7.)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설치

○ ('11. ~ 현재)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매년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2. '22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영상회의, 1회)

3. '23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외국인 업무 지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무전문성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 활성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이민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실행방안과 우수사례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외국인 업무 지원 가이드북(외국인 업무 지침서)」 제작 및 배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중앙부처·전국 지방자치단체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24년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제 성장에 기여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개선 사항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운영 및 신청대상 확대

○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 안내 등 홍보 강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 확대

- 2021년 말 기준 K-ETA 대상 국가·지역 50개국 → 2022. 11. 1.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 전체로 K-ETA 확대

3. ’23년도 추진계획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다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1/4분기)

○ 단체여행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신청 가능 인원 확대(2/4분기)

○ K-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3/4분기)

○ 청소년, 고령자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3/4분기)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도화 방안 검토

□ 소요예산 : **총 245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45	245	0	
-국 비	▪ 일반회계	245	245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사항 이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 당 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1-4-1-4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단체관광 비자제도 개선

□ 과제 내용

○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6. 3. 중국 단체전자사증 전면 시행

○ ’19. 6.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업인센티브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대상 단체전자사증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전파

2. ’22년도 추진 실적

○ ‘22. 6. 1.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단체전자비자 발급 재개

3. ’23년도 추진계획

□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 추진(‘23. 상반기)

- (구성원 기준 완화) 5인 이상 구성되어야 단체비자 신청이 가능하던 조건을 3인 이상 구성으로 완화

- (여행객 범위 확대) 기업인센티브 관광, 수학여행단만 가능하던 단체비자를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단체전자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단체비자 지침 개정	1회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염기동	이 메 일	peacepa5@korea.kr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신청대상 범위 확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확대 등에 따른 정책 대상자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과제 내용

○ 방한 관광객 단체전자비자 신속 발급을 위한 현재 서울청 전자민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개소

○ ('16.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직제 반영

○ ('19.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정식 직제 확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소요정원 요구서 제출 → 검토 및 부처협의(행안부) → 예산협의 및 확정(기재부) → 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의결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23.9.) '23년 하반기 수시직제 요구서 제출

○ ('23.12.)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신속한 단체전자사증 발급	명칭변경 및 인력 확충	직제 반영 여부	직제 반영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12
담 당 자	5급 옥효재	이 메 일	hyojae12@korea.kr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K-컬처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K-컬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 과제 내용

○ (가칭)D-4-K 비자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0.)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입안

○ ('22. 12.) 국무총리실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지시(국무회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문체부(협조)

○ 추진절차 : 법무부-문체부 간 세부 초청기준 수립 → 관련 지침 신설

2. '22년도 추진 실적

□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현장점검

○ K-컬처 연수생 도입 희망기관 내 현장점검 진행('23년 상반기)

○ 협조부처(문체부) 간 초청 세부기준 등 논의 진행('23년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K-컬처 영향력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 발전 도모	협조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2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 당 자	5급 김은호	이 메 일	keh2005v@korea.kr

1-4-2-2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 수집 및 분석

○ 디지털노마드 비자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 및 시범운영 실시

○ 민원인 및 관광업계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사항 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신설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 제도 홍보 → 시범운영 실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신규 추진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디지털노마드 도입 국가 해외 사례 수집 및 지침 신설

○ '23. 1. ~ 해외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운영 국가의 비자 신청요건, 소득기준, 취업 가능여부 등 사례 수집

○ ’23. 12. 디지털노마드 비자 관련 지침 신설, 재외공관·소속기관 시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지침 신설	1회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염기동	이 메 일	peacepa5@korea.kr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시장 확대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개선

□ 과제 내용

○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제출서류 생략 등 의료관광객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의료관광 간담회 실시 등 관련 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 5. 의료관광 지침 제정 및 비자 신설

○ '15. 6.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관리기준 신설

○ '20. 9. 보건복지부 지정 유치기관에 가점 부여 기준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 제도 홍보

2. '22년도 추진 실적

○ '22. 10. 2022년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기간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급감한 상황을 고려하여 28개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지정기간 일괄 연장

3. ’23년도 추진계획

□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

○ (우수 유치기관 확대)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상한(최대 50개) 폐지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의 경우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면제. 단, 불법체류율 10% 이상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서 제외 후 일반 절차로 전환

-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부여

○ (비자쿼터 상향)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비자 쿼터 상향(5명→10명)

○ (동반자 제한 완화)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 및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면제

○ (외국인환자 체류기간연장 범위 확대) 중환자 등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2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기존 1년까지 연장)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의료관광 지침 개정	1회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 당 자	5급 염기동	이 메 일	peacepa5@korea.kr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22년말 41만 여명대 불법체류 외국인을 향후 5년 내(‘27년) 20만 명 대까지 감축 추진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정부합동 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단속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으로 자진출국 적극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 ‘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협업)

2. ’22년도 추진 실적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22.10.11.~12.10.)

○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및 불법고용주 등 483명 적발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22.11.7.~23.2.28.)

○ ‘22.11.7부터 ‘22.12.31.까지 시행기간 중 총 6,162명 자진출국

3. ’23년도 추진계획

□ 상시 단속체계 유지

○ 자체 광역단속 체계 유지 및 테마별 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엄중하고 일관된 단속 실시

□ 범정부적 대처 차원의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확고한 단속 기조 표명(상・하반기)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특별자진출국 운영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자에 대한 범칙금과 입국 규제 면제 부여 한시적 특별자진출국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30,000	39,038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억제 정책 등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등 부처별 합의된 기준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율 단계별 대응전략안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부처별 역할 마련

-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 누적 불법체류율, 연도별 불법체류 증가 규모 등 불법체류 현황에 따른 단계별 역할 정립

○ 국가별 불법체류 현황 공개,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의 관심 제고 및 해당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사증면제 일시중지를 위한 사전 예고 기능으로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관계기관 참석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23년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관련 내용 논의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로 불법체류 신규 유입 차단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다발국가 대상 국가 대사관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제도 홍보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신규발생 및 자진출국을위한 주한공간원 협조체제 구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 다발국가 주한공관원 협조체제 구축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특별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 외국 공관원 대상 간담회 개최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특별자진출국 제도 시행 여부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범죄 증대 우려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과제 내용

○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안전 위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관계기관 상시 합동 단속 체계 구축

○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민원 빈발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지역 지정, 불법고용 분위기 억제 및 국민 치안 불안감 해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2. '22년도 추진 실적

□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 단속 실시

- 불법체류 3,865명 적발, 불법고용주 등 483명(고용주 466, 알선자 17)

□ '22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방안 수립·시달

- 불법체류 1,042명, 불법고용주 등 227명 적발, 특별단속지역 1,126회 순찰·단속

3. ’23년도 추진계획

□ 국민 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및 민생 침해 및 체류질서 문란 행위자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 및 연중 집중단속 실시

□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방안 수립・시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508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3-1	외국인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1. 과제의 개요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취업 알선 홍보·정보 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사이버정보수집·조사팀 활용 및 이민특수조사대 전문 사이버 범죄 수사 기능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 목적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관련 정보수집 체계화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인천공항청 사이버정보조사팀, 서울청(이민특수조사대)과 남부권(김해공항, 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 사이정보수집·조사팀 활용 SNS 등 사이버상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알선자 적발

○ 각 청(사무소) 관할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커뮤니티 대표자, 협조원 등과 협조관계 구축

○ 이민조사관 직위 정보수집 활동을 통한 정보관 역할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중 사이버정보수집·조사팀 및 이민조사관 등 동향조사요원의 정보수집활동,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협조원 구축 활동 지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체계화 → 알선자 적발·처벌

2. ’22년도 추진 실적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

○ 정첩보 3,645건 수집

○ 1,067명 적발(형사입건 134명, 강제퇴거 등 933명)

□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3. ’23년도 추진계획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연중)

□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활동(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 적발	달성도	2,000건/ 1,000명	3154건/ 2309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7
담 당 자	6급 빈중찬	이 메 일	jcbin21@korea.kr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1. 과제의 개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 목적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불법고용·입국 알선 브로커, 허위초청·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불법입국 외국인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증대

□ 과제 내용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예산 확보

- 자동차 번호판 식별을 위한 CCTV 분석 시스템 고도화

-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사법경찰 수사실무' 사이버 교육과정 마련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 인력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송치 담당 직원 교육(연중)

○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7월)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예산 확보(12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예산확보→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과정 마련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송치 담당 직원 교육 계획 마련

□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예산 신청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계획 마련

3. ’23년도 추진계획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송치 담당 직원 교육(연중)

□ 부산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7월)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사업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비공개(정보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디지털포렌식 센터 설치	사업시행 여부	1건	1건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7
담 당 자	6급 빈중찬	이 메 일	jcbin21@korea.kr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 관련 규정에 사업장 등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적 규정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단속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 업무 효율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정 신설 추진

- 출입국관리법 기타 조항 개정 지연을 우려, 논란이 있는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규정 신설 제외 지시(장관님 주재 실·국장 토론회)

○ '15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 및 조사 규정 신설 추진

- ('16.2.) 법사위 소위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외하기로 결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 규 신설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신설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입법사례 검토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 과제의 개요

□ 목적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에 따른 상시 단속체계 가동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소정책 추진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인력 증원 필요

□ 과제 내용

○ 향후 5년(‘23~‘27.)간 불법체류 단속 인력 총 500명(매년 100명) 사범·보호·퇴거 인력 총 300명(매년 100명) 증원 요청

□ 과제 추진 연혁(경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행정안전부에 인원 증원 지속 요청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단속 인력 100명, 사범・보호・퇴거 100명 증원 요청

□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병행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요청	200명	88명	직제요구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 당 자	5급 전동균	이 메 일	jeondk78@korea.kr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1. 과제 개요

□ 목적

○ 변화하는 환경 및 세계 시민의 가치와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소양 등을 귀화 면접심사에 반영 필요

○ 면접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귀화 민간면접관의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필요

□ 과제 내용

○ (면접심사) 변화된 환경 및 대한민국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에 따라 귀화 신청자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변별력 있는 귀화 면접평가 제도 개선

○ (귀화 민간면접관) 민간면접관에게 일정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업무 책임성 제고 노력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 도입

○ ('14년) 기본소양 학습교재「자랑스러운 한국인」초판 발간

○ ('18년)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정례화

○ ('21년) 귀화 면접심사 심사문항 연구용역 실시

○ ('24.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

2. ’22년도 추진 실적 (’23년 신규 과제)

□ 귀화 민간면접관 임기 연장(‘22년 12월)

○ ‘22년 12월 임기 만료되는 민간면접관 총 14명에 대한 임기 연장

- ‘21년 실시한 귀화 민간면접관 평가 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접업무 수행 등 긍정적 평가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22년 3, 9월)

○ 민간면접관 36명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22년 3월)

- 면접심사 실무, 갑질 예방, 청렴 교육 실시, 성평등·인권감수성 제고

- ’21년 실시한 연구 용역「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 문항 개발」 결과 공유

○ 민간면접관 16명 대상 집합 교육 실시(‘22년 9월)

- 면접심사 실무, 갑질 예방, 청렴 교육 실시, 성평등·인권감수성 제고

※ 성평등·인권감수성 강사: 국가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장

3. ’23년도 추진계획

□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 및 역량 강화 교육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화 민간면접관 선발(‘23년 1, 4분기)

○ 면접심사 전문 역량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23년 3, 4분기)

□ 면접질문지 개정(‘23년 4분기)

○「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 문항 개발」 연구 용역 결과 반영 추진

- 기본소양에 대해 단순 지식측정 문항을 지양하고 단답형이 아닌 설명식 답변 문항 추가

☐ 소요예산 : **총 596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20	596	14.6	
-국 비	▪ 일반회계	520	596	14.6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596백만원)

○ 귀화면접관 면접심사비: 면접관 1인당 160,000원 × 3,725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2회 (100%)	-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7
담 당 자	5급 김종승	이 메 일	jongskim@korea.kr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도 증진 및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국적 제도 시행 도모

□ 과제 내용

○ (국적법령 정비)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병무청, 재외동포청)과 협조하여 홍보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적법령 정비) 국적법령 개정 수요 파악 → 법령안 개정 입안보고,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국적제도 설명회 및 자료 수요 파악 → 재외공관 통해 설명회 참석자 파악 → 병무청·재외동포청 협업 국적 설명회 실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신규 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국적법령 정비

○ 국적법령 개정 수요를 조사하여 어려운 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

- 법령 필수 개정 사항과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

□ 해외동포대상 온라인 국적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 국내·외 거주하는 동포에게 국적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적제도 홍보 강화

- 원거리에 위치한 재외공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화상 설명회 위주로 진행하고 국적제도 관련 최신 자료 배포

- 재외국민 대상 국적·병무 화상 설명회 개최 및 국적 자문 및 자료 제공

○ 재외공관 국적 설명자료 제작 배포

-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등 국적업무 관련 설명자료 배포

- 해외 거주 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공항만·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알기쉬운 국적신고제도(한·영)” 리플릿 제작·배포

□ 소요예산 : **총 297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2.97	100	
-국 비	▪일반회계		2.97	100	
	▪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297만원)

○ 리플릿 제작 비용: 국적신고 안내 리플릿 114,500장 제작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홍보강화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국적업무 관련 설명자료 제작·배포	1회(50%)	1	관련 공문
			화상 설명회 실시	2회(50%)	2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2
담 당 자	5급 강성진	이 메 일	ksjksj01@korea.kr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안전 확보에 기여

□ 과제 내용

○ 각종 출입국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국자에 대한 사후 분석 강화를 통한 정밀 심사대상자 선별

○ 입국심사 업무 및 정보 활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하여 입국자 정보 분석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5.)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소속기관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입국자에 대한 사후 분석 강화를 위한 출입국 빅데이터 정보 출입국 심사 활용 방안 검토

□ 체계적인 입국 외국인 정보 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검토

○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전자입국신고서 사업 방안 검토(1/4분기)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 및 완료 (2/4 ~ 3/4분기)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을 위한 본사업 계획 수립(4/4 분기)

※ 전자입국신고서 구축은 「2024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포함되어 개발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산출물 (전자입국신고서 포함)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 당 자	6급 송방혁	이 메 일	oksong12@korea.kr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단체관광객 이용 편의 향상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및 국익 위해 우려자 등의 정밀 분석 강화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외국인 이용 편의 제고 방안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해외사례 등 검토

- 대내외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구체적 시행방안 및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조달청 입찰 공고('23. 4.) →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 ('23. 5.)

2. '22년도 추진 실적

☐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설계(4/4분기)

○ 단체 일괄 신청 등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관계기관 개선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

3. ’23년도 추진계획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목표 설정 등 대내외 관계기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사업 방안 검토 (1/4분기)

○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수행 업체 선정 및 고도화 계획 수립(2/4분기)

○ 고도화 방안 의견수렴 등 ISP 수립 사업 완료(3/4 분기)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본사업 계획 수립(4/4 분기)

□ 소요예산 : <u>총 162백만원</u>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62	100	
-국 비	▪ 일반회계		162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 162백만원(부가세 포함)

- ((직접 인건비) 103백만원 + (제경비 및 기술료) 44백만원)+부가세 1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 당 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 국익과 사회통합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 효율성 제고

□ 과제 내용

○ 시계열적 변화 추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 주기)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공표 및 정책컨설팅 전문기관 위탁 등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 추진

※ (국내 입법례) 「양성평등기본법」, 「가족친화법」,「상생협력법」 등 다수 법률에 관련 지수의 산정과 공표, 환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 측정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 (3년 단위 계획)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개선방향 제시

□ 과제 내용

○ '21년 개발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정책컨설팅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 측정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 ('22.12.)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연구

❍ 지자체 대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방안 마련 및 시범실시

□ 소요예산 : **총 9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90	100	
-국 비	▪ 일반회계		90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책연구비 9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책컨설팅 시범실시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는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 혜택을 부여하여 이민자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정책 구현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일정단계 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대상자에 대한 체류 정책적 혜택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1.)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변경 시 이수자 가점 부여

○ ('12.4.) 장기체류자(F-2-99) 체류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이민통합과, 체류관리과, 국적과 협업)

○ 추진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 확대 대상 및 혜택 부여 관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22.10.)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변경 시 3단계 이상 의무 부과

3. '23년도 추진계획

○ '23. 연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대상 및 내용 발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의 학습의욕 및 교육효과를 높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성 증진

□ 과제 내용

○ 현재 무상으로 제공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유형별, 교육단계별로 점진적 유료화

- (1단계) 교육 재수료자에 대한 교육비용 전액 자부담
- (2단계) 한국사회 이해과정(5단계) 교육비용 전액 자부담
- (3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1~4단계) 교육비용 일부 자부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유료화

○ ('19.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수수료 유료화

○ ('22.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22.1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유료화 방안 추진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기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운영)

○ 추진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법적 근거 신설 → 유료화 대상, 시기, 비용, 재원 활용방안 등 마련 →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23. 3분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마련

○ ’23. 3분기 보도자료 배포

○ ’23. 4분기 유료화 법적 근거 마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기회 및 비대면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평가와 교육 참여 방법 다양화를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과제 내용

○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장 확대, 평가 종류 및 일정 다양화

- 현재 운영중인 광명 CBT센터 외에 평가장소 추가 설치

○ (교육) 참여자의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 과정 확대

- 기존 중앙거점운영기관에서만 운영하던 비대면 화상교육을 일반운영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도입

○ ('19.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민간위탁

○ ('22.3.)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도입

○ ('23.1.) 중앙거점 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도입(운영지침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평가)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수탁기관

- (교육)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 추진절차

- (평가) 법무부, 평가수탁기관 업무협의 → 중부권 CBT 평가장 확보 및 개소

-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시달(법무부 → 운영기관)

2. '22년도 추진 실적

○ ('22.3.)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도입

3. '23년도 추진계획

○ '23. 1분기 중앙거점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운영

○ '23. 3분기 CBT 평가장 추가 확보

○ '23. 4분기 CBT 평가장 개소 등 보도자료 배포(홍보활동)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평가장 추가 개소 및 보도자료 배포	1회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려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 단계에서 기초 법·질서와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기존의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연예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으로 확대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4.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기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 예술·흥행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조기적응지원단(조기적응지원센터)

○ 추진절차 :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지원센터) 선정 → 이민자 교육 신청 → 교육 실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 결혼이민자(배우자 포함) 조기적응프로그램 총 6,874명 참여

3. ’23년도 추진계획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강사 교육(3월)

○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법·질서와 필수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4월)

□ 소요예산 : **총 1,059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33	1,059	2.5	
-국 비	▪ 일반회계	1,033	1,059	2.5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소요예산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전체 예산임

□ 산출내역 (총 1,059,040,000원)

내용	소요예산	내용	소요예산
강사료	642,960,000원	운영비	125,056,000원
전담인력	117,840,000원	교재비	78,000,000원
멘토링	45,684,000원	리플렛	17,000,000원
강사양성 위탁비(강사료)	19,000,000원	강사양성 위탁비(운영비)	13,5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0,000명	42,374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고용주·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이민정책 전문성 함양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해도 제고

□ 과제 내용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 소속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개설·운영

○ 고용주, 유관기관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최초 운영

○ ('12년 ~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매년(2회)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교육 계획 수립 → 수요 조사 → 강의 개설 → 교육 실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공무원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실시(2회, 법무연수원)

3. '23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과정 개설・운영

○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지자체・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회(상・하반기) 실시

☐ 고용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 당 자	5급 이은경	이 메 일	kokiry@korea.kr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 형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해외사례 : 호주 'Harmony day'(3.21), 캐나다 'Multiculturalism Day'(6.27), 싱가포르 'Racial Harmony Day'(7.21) 등

□ 과제 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사회통합 유공자 정부포상 및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

○ 세계인의 주간 기념행사 개최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리는 기념행사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7.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 세계인의 날) 제정

○ ('08.5.)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14.4.)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표창) 선정

※ '08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단, '14년도는 미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단체 등

○ 추진절차 : 기념식(기념행사) 계획수립 → 기념식(기념행사) 개최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실시

○ 제15회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 '22. 5. 20.(목),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 참석자 :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 수상자 및 가족 등
- 주요 내용 : 정부포상, 장관님 등 축사, 미담사례발표, 주제영상 상영 등

○ 세계인의 날 기념 홍보 영상 제작

-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외국인 정책 중요성 부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한외국인의 지원활동,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재한외국인 봉사활동 등 미담사례 선정

○ 세계인 주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별 기념 행사 및 이민정책 포럼 개최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자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자체 기념행사 개최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서울대행정대학원 공동으로 이민정책 포럼 개최

3. '23년도 추진계획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3. 5. 19.)

- 기념일 취지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품격있고 내실있는 중앙 행사 진행 및 최신 이민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메시지 발표

- 수기, 사진 등 다양한 공모전 및 미담사례집 제작을 통해 내·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유공자 정부포상,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범사례 발굴·홍보

○ 지역사회 중심의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 주간에 맞추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념행사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외국인 관련 행사·축제를 연계하여 세계인의 날 인지도 확산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소요예산 : **총 31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11	311	0	
-국 비	▪ 일반회계	311	311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 207백만원, 일반 수용비 80백만원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신하균	이 메 일	lastsin@korea.kr

3-2-1-3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및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하락 추세에 따라, 외국인은 시혜적 정책 수혜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필요

※ 재한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의 비중 감소('14년 41.3% → '20년 28.7%)(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 과제 내용

○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제고, 국민⇔이민자 간 교류·소통 증대

-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사회공헌활동 정례화

- 이민자 멘토단,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그간 구축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 이민자 사회참여 다각화 추진

-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외국인봉사단체(비영리단체), 자원봉사포털(1365)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민자 사회참여 기반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7.)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시범 운영(16회)

○ ('20.6.)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5명) 위촉

○ ('20.11.)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제정

○ ('22.2.)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14명) 선발

○ ('22.8.)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협업), 행정안전부(협업)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 추진절차 : 협업 등 계획 검토 및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성 및 역량 강화

○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선발(14명)

- 이민자 그룹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적·동포·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공모 접수, 서류(1차), 온라인 화상 면접(2차)을 통해 선발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준 높은 멘토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멘토의 강의 역량 및 품질 강화하고, 선발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 보완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역량 강화 교육

- '22년도 제1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모니터링 결과 반영 등을 통한 멘토단 강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멘토단 총 265회 출강, 수강생 총 7,627명

○ 이민자 멘토단 환경정화활동

- 이민자 멘토단의 환경정화활동(플로깅)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 '22. 9. 17. 역량강화 교육 및 청계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연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교육 등 강사활동 연 2회 이상 실시

○ 기타 사회공헌활동

- (4분기) 재한외국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연 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신하균	이 메 일	lastsin@korea.kr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복지기준 불명확 및 체류외국인의 고령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 기준의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과제 내용

○ 체류자격별 복지 기준안 마련

- 복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의 사회보장 기준 연구

- '2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복지수급 등 사회보장 혜택 연구

※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사회보장 기준 연구」연구용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등 복지 소관 부처, 지자체

○ 추진절차 :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적용 실태 파악, 복지 유형별 소관부처 논의를 거쳐 체류자격별(국내 생활 기반, 연령층, 기여도 등 고려) 복지 기준안 마련

2. '22년도 추진 실적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지 제도 실태 등 파악 필요성 논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외국인 복지 관련 관계부처 논의	1회		회의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3-3-3-2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자녀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해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7.)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협력을 위한 "법무부-교과부 업무협약 체결

○ ('14.7.)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실시

○ ('14.9.) 중도입국 청소년 통합정책 현안 보고(BH 교육문화수석)

○ ('15.9.)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세부 약호(F-1-52)를 신설하여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통계 확보

○ ('16.12.) 중도입국자녀가 만 21세까지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17.1.) 중도입국 청소년(만 7세~만 17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7. 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18.7.) 중도입국 청소년(만 6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8. 7.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22.1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 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교육부

○ 추진절차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교육부)에 따른 중도입국자녀 정보제공(법무부) → 정규 교육과정 참여(중도입국 청소년)

2. '22년도 추진 실적

○ 중도입국자녀 등의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교육부 협조 요청에 회신('22.5., 11.)

3. '23년도 추진 계획

□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 교육부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소요예산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대상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격부여 확대

□ 과제 내용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고시국가* 출신 동포 중 국가전문자격 취득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등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등 대상 확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지정 21개 국가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단계적 통합

- 중국 및 CIS(구소련) 6개국 출신 동포에게만 부여하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단계적 통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1. 재외동포 자격통합 및 동포 취업 범위 재설계 방안 연구용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연구용역 결과 보고('22. 11.)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통합 적합성 연구

○ 재외동포(F-4) 자격 통합 시 취업범위 재설계

3. ’23년도 추진계획

□ 인구감소지역 이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동포 체류자격 허용

- 인구감소 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 지자체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일정기간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 변경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 및 동포들의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범위 점진 확대

□ 과제 내용

○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취업(H-2) 활동 범위를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별표 1의2 29. 나. 방문취업 활동범위 적시 추가 및 활동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시하는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통해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직종 점진적 축소

○ 취업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서민일자리 보호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에 대한 단순노무 분야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취업허가제 도입, 분담금을 통한 기금 마련 등 보완책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2. 방문취업(H-2) 서비스업 고용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방문취업(H-2) 고용허용업종 확대 및 방식 전환

○ 고용 허용업종 확대(‘22.12.)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을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 기존 식육운송업체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택배분야에도 허용

- 택배분야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상·하차 직무, 분류 제외)로 한정

-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을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 서비스업·광업 허용업종 결정방식 네거티브 전환(‘22.12.)

- 방문취업(H-2) 허용업종을 기존에 지정·나열하는 방식에서 서비스업·광업분야는 허용제외 업종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3. ’23년도 추진계획

□ 산업계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취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모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수도권에 밀집한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 및 배우자의 취업범위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자격 신설

-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참여 지자체로 이주할 경우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 및 취업 범위 확대

○ 동포 가족에 대한 체류 혜택 부여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을 가진 동포의 가족에게 장기체류자격 부여 및 취업 허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22.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법무부, 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 지자체, 동포 유입 촉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22.10.)

○ 동포와 자녀 재외동포(F-4-R) 자격변경

-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실거주,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이주한 동포 및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 가족에게 해당지역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재외동포(F-4-R) 취업활동 제한 완화

-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 허용

※ 재외동포에게 제한된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 모두 허용

○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모든 분야 취업활동 허용

3. '23년도 추진계획

□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문제점 보완하여 정식사업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50명	-	관련 통계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급증과 더불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법무부 내규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 중이나 동포단체 등은 직접 근거 규정 마련을 요구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

- 일부 지역에 편중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수 확대

○ 정착 우수사례 발굴

- 국내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 사례를 발굴·홍보하는 한편, 성공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1. 7.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7개→ 11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 요건 심사 후 지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실시(’22.12.)

○ 동포정책 주요 현안 설명, 운영사례 공유 및 동포정책 관련 의견 청취

□ 동포체류지원센터 ‘22년도 운영실적

○ 연간 4,389명의 동포가 센터를 방문, 누적 63,122건의 상담 진행

3. ’23년도 추진계획

□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3년 상반기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신규 공모하여 적격단체 적극 발굴 및 센터 지정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센터 지정 확대	5개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동포 특성을 반영한 안내서비스 제작

☐ 과제 내용

○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 발간

- 동포 비자 및 체류제도, 출입국관리법령 주요 위반사례,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를 다국어로 제작·배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0. 안내서 제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례 조사 및 의견조회 → 안내서 제작·배포

2. '22년도 추진 실적

☐ 2022. 1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국어 제작·배포

3. '23년도 추진계획

☐ 안내서 업데이트 및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출입국서비스 접근성 제고	업데이트 자료 배포 여부	1건	-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특정 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기능함에 따라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통합 추진

□ 과제 내용

○ 재외동포 인식 정립 및 동포정책 이해를 위한 홍보·언론대응

- 사업·행사 홍보가 아닌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역할 및 정책방향 홍보

※ 국내 동포 언론사,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동포지원단체, 동포밀집지역 지자체, 언론·SNS 등을 통한 홍보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

- 재외동포재단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과 연계하여 국내 체류 동포 및 국민 대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9. 방문취업(H-2) 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동포지원단체, 관계부처

○ 추진절차 : 홍보사례 발굴→언론 대응, 법무부-타부처 협업 교육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22.3.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 고려인 동포 관련 언론 회신 다수

3. ’23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 및 정책 홍보·언론대응,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협업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4-1-2-1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 출국대기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시설 필요

※ 공항 내 출국대기실은 단기 출국대기자를 위한 시설로, 장기 대기자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의 인도적 처우에는 한계

□ 과제 내용

○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별도의 출국대기소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관계기관

2. '22년도 추진 실적

□ 출국대기소 근거 법령 제정 및 설치 계획(안) 마련

□ '출국대기소'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협의(박주민 의원실)

3. '23년도 추진계획

□ 출국대기소 규모 및 소요예산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관계부처 협의	협의 문서	연 1회	1	검토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 당 자	6급 송방혁	이 메 일	oksong12@korea.kr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보호시설을 개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대

□ 과제 내용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동 개방형 시설로 운영

○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제4차 기본계획 신규과제로 해당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동 개방형 시설로 운영(1/4분기)

□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시설로 운영(4/4분기)

☐ 소요예산 : 총 18,707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8,707	100	
-국 비	▪ 일반회계	0	18,707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 17,722,000,000원

○ 청주외국인보호소 개축 : 985,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2건	2건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9
담 당 자	5급 김준철	이 메 일	kjc5623@korea.kr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관리

□ 과제 내용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관계부처 논의 등

- ('18.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 ('18.12. ~ '19.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 구성, 운영
- ('20.6. ~ 8.) 연구용역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태국, 베트남)
- ('21.2.)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3.) 제도 도입 관련 실무 회의(법무부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1.4.)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4. ~ 10.) 법원행정처, 관련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의견 수렴

○ 법률안 발의

- ('22.6.28.)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인숙 의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법률안 통과 → 제도 세부사항 마련 →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익숙 의원 대표발의) 입법 지원

3. ’23년도 추진계획

□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보편적 출생등록제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회의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648, 4110
담 당 자	5급 김도연 5급 박지원	이 메 일	kdy927@korea.kr jikim433@korea.kr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피해자 발견과 보호

□ 과제 내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 업무처리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 식별지표 활용 및 교육실적 제출을 지침에 명확화

○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직무 관련 공무원 실무교육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4. 20.)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23. 1. 1.)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소속기관)

○ 추진절차 :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요청(여성가족부) → 종합(시행)계획 수립(법무부 본부) → 식별지표 활용(소속기관)

2. '22년도 추진 실적: 해당사항 없음

※ '23. 1. 1.「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23년 신규과제임

3. ’23년도 추진계획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시 (연중)

○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 및 소속기관 방문교육(간담회) 실시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제46조의2(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유예 또는 보호 일시해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 (4분기)

○ 인신매매 등 방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방법 등 제시

※「인신매매방지법」이 ’23. 1. 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주관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상황 등 정책환경 고려 필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5회	관련 공문
		지침 제정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	1건	1건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이종현	이 메 일	jhl912@korea.kr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평가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인정 심사제도 구축

□ 과제 내용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평가·관리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난민전담공무원

- (’21년)「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 연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훈련 계획 및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 (’20.~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실시(연 1회)

- (’21.~현재)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연 4회)

- (’22.~현재)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연 2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난민전담공무원 : 교육계획 수립, 사무소별 참석자 취합 →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과 협의를 통해 교육 컨텐츠 선정 및 제작(수정)

- 난민(전문)통역인 :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통역평가) 평가계획 수립 → 평가 실시, (보수교육) 교육계획 수립 → 보수교육 실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난민전담공무원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 회차별 교육내용 다양화 및 주제별 심화교육 실시(연 6회)

-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등과 협력하여 난민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 상시 운영

- 난민소송 관련 주요 판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난민판례 및 케이스스터디」 사이버 교육 과정 신설

○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통역능력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외부 전문기관의 통역능력 선별시험, 능력별 맞춤형 교육, 최종 인증평가, 보수교육 등 인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인 160명(30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외부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능력을 평가하여 소속기관 등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및 위크숍 개최

○ 연간 6회 이상 국제기구 관계자·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프로그램 주기적으로 운영

○ 난민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균형있는 난민정책‘개발 및 난민심사 적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통역능력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인력풀(Pool)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지속 추진

○ 외부전문가를 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유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난민통역 품질 제고

□ 소요예산 : 총 213.6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6	213.6	281.4	
-국 비	▪ 일반회계	56	213.6	281.4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워크숍은 혁신행정담당관실, ’23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예산 중 일부 활용(605만원)

□ 산출내역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 교육 진행 및 교재 발간 등 15,60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 난민통역 인증제 79,600,000원
- 난민통역인 교육 78,44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 통역능력 평가 4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10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담 당 자	5급 김정욱	이 메 일	kimjw123@korea.kr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히 보호하고,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 과제 내용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 난민위원 제척·회피 근거 신설(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기반 강화 등

○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 제고

- 난민조사관 심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난민심사 지위 안내서 및 이민·난민 용어사전 발간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7.) 난민위원회 구성

○ ('20.2.) 난민위원회 심의 지원 전담부서 '난민심의과' 신설

○ ('22.1.)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신청제도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시행계획 수립 → 관계 기관·업체 선정(필요 시) → 과제 이행(교육, 지침 개정, 발간 등) → 결과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난민위원회 개최(연중)

○ 난민위원회(7회), 분과위원회(44회) 등 총 51회 개최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약 3,100건 심의

□ 특정 주제 난민 심사 매뉴얼 제정(‘22.4.)

- 특정 주제(젠더 편)와 관련된 국내·외 심사·결정례를 수집·분석하여 난민 심사 매뉴얼 제정특정 주제 난민 심사 매뉴얼 제정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공개(‘22.10.)

-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3. ’23년도 추진계획

□ 난민위원회 개최(연중)

○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개최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23년 2/4분기)

○ 난민조사관 필수 이수 교육 의무를 구체화하도록 지침 개정

□ 이민·난민 용어사전 발간(‘23년 2/4 분기)

○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를 통해 정책의 통일성과 신뢰도 제고

□ 이의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강화(연중)

○ 의견진술 청취 대상자 선정 회의 도입, 추가 사실 조사 확대 등으로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

□ 소요예산 : 총 38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8	38	0	
-국 비	▪ 일반회계	38	38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위원회 운영비 4,000,000원

○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관련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 당 자	5급 박병건	이 메 일	okkev813@korea.kr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 이의신청 심사 시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정황정보의 수집·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과제 내용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난민신청 다발국, 정세급변국 등에 관한 정황 자료집 지속 발간 및 기존 발간 자료 현행화

- 난민심사 및 소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인용하는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 자료를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집 발간

○ 국가정황정보 관리·활용 체계 강화

- 국가정황정보 DB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검색 기능 개선, 게시물 분류 체계 정비 및 품질 관리 강화 등

- 난민심사 담당자의 국가정황 조사·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정황정보 순회 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7.) 국가정황조사 전문 인력 채용(5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채용 → 국가정황조사팀 운영

2. '22년도 추진 실적

☐ 국가정황 자료집 발간

○ 난민신청 다발국에 관한 난민신청 사유별 국가정황정보를 통합한 국가보고서(중국,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발간

3. ’23년도 추진계획

□ 국가정황 자료집 발간

○ 난민신청 다발국(이집트)에 대한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2/4 분기)

□ 해외 국가정황보고서 번역 사업

○ 난민심사 및 소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인용하는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 자료 번역 사업 실시(4/4 분기)

□ 소요예산 : 총 192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92	100	
-국 비	▪ 일반회계		192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가정황정보 번역·감수비 192,2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23년 신규 과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 당 자	5급 박병건	이 메 일	okkev813@korea.kr

4-3-2-2	난민 처우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난민 처우 지원 방안을 통해 국내 체류 난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협업방안 마련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난민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을 위해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7. ~ '22.) 학술포럼 및 간담회 개최

○ ('14년) 난민처우협의회 구성, ('23.7.)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중앙부처(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등 협업

○ 추진절차 : 행사계획 수립, 부처별 의견 취합 → 행사 개최

2. '22년도 추진 실적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 관련 행사

○ UNHCR 한국대표부 등 외부전문가 초빙한 학술포럼 개최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체류 및 정착 지원 강화

○ 재정착난민 신규 정착지 선정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재정착난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및 사무소별 난민인정자 멘토링 및 모니터링 지속

3. '23년도 추진계획

□ '세계난민의 날' 기념 행사 실시(2분기)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대상으로 난민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3분기)

○ 난민인정자 등의 적정한 처우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협업방안 마련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난민신청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난민신청자 등을 위한 정책 홍보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특수 외국어로 추가 번역하여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 외국인정책과에서 시행 중인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예산 중 일부 활용(일반수용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의 처우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 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2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on.park@korea.kr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착난민 제도의 다변화 시도

□ 과제 내용

○ 해외 난민 수용계획 수립

○ (재정착난민 제도)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제공

- 수용 대상, 규모 등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후, 수용계획 확정

- 서류심사, 현지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수용 대상 선발 및 수용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초기 정착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정착 후, 정착 지원 지속 및 정착 상황 모니터링

○ (학생난민 프로그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후보자 발굴 및 지원 기관 선정

-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재정착난민 제도

- ('14.10.)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5. 4.)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1차 시범사업('15년~'17년)으로 총 86명 수용

- ('18.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차 시범사업('18년~'20년)으로 총 80명 수용

- ('20.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3차 시범사업('22년)으로 총 67명 수용

○ 학생난민 프로그램

- ('22.6.) 「학생난민 민·관 후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2.8.)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최종 선발 대상자 확정
- ('22.7.)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22.12.) 최종 대상자 입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2. '22년도 추진 실적

□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및 학생난민 민관후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연된 재정착난민 수용사업('20년)을 재개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및 2022년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마련

○ 기존의 난민 수용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난민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계획(안) 마련

☐ 재정착희망난민 정착 지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수용된 재정착난민 6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후, 생활 멘토링 사례관리 등 정착 지원 지속

☐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관련 정보교류

○ 재정착난민 수용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제73차 UNHCR 집행이사회* 참석

* 1985년 유엔총회의 요청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회원 25개국으로 최초 설립된 후 현재 10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며, 국제보호에 대한 조언 등을 주제로 매년 1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기총회 개최

3. '23년도 추진계획

☐ '23년 해외난민 수용 사업 추진 계획 수립 (1분기)

○ '15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재정착난민 사업과 '22년부터 시범 도입한 학생난민 프로그램 관련, 종합계획 수립

☐ '23년도 해외난민 수용사업 중 재정착난민 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 마련 (2분기)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개최 일정 미정에 따라 '23년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안 마련

*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난민의 수용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 지원 (3~4분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초기 정착 지원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재정착난민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시작

□ 소요예산 : **총 463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46	463	3.7	
-국 비	▪ 일반회계	446	463	3.7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보증 110,000,000원

○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125,424,000원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103,200,000원

○ 재정착난민 수용 IOM 위탁 100,000,000원

○ 재정착난민 선발 국외여비 24,164,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추진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3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on.park@korea.kr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

□ 과제 내용

○ 난민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관련 논의, 재정착 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재정착에 관한 연례 3자 회의(ATCR), 글로벌난민포럼(GRF) 등 난민 관련 국제회의 및 협의체 등

○ UNHCR, IOM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과제 추진

○ ('23.12.) 제4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UNHCR, IOM 등 난민관련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2. '22년도 추진 실적

□ 난민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전문교육 협력

○ UNHCR 집행이사회('22. 10.) 난민 관련 국제회의 참석, UNHCR을 통한 국외 위탁교육('22. 12. ~ '23. 6.) 참여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심사관 전문교육 2회 실시('22. 6.~7./10.)

○ 난민 관련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교류('22. 11.)

3. '23년도 추진계획

□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속(상시)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교류 지속

- 난민심사관 전문교육 지원, 국가정황정보 수시 제공을 위한 교류

- 난민제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각국 정부와의 협력 지속

- 국제적 기준에 맞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제회의 등 참석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3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 당 자	5급 박정원	이 메 일	jwon.park@korea.kr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위기, 지방소멸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

□ 과제 내용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8.) 국민, 각계 전문가 대상 세미나, 토론회 등 공론화 실시

○ ('22.11.) 법무부 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안 발의 → (통과 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2. '22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관련 공론화 진행(8월~)

○ 국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

※ ▲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22. 8~9.) ▲ 이민정책위원회('22. 11.,)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2. 12.) 등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수립

○ 청 신설 준비를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11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마련 중

3. ’23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마련(연중)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수립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 「출입국관리법」·「국적법」·「난민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청 신설방안 마련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5급 김명훈	이 메 일	mhkim2920@korea.kr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비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시

○ 외국인정책 관련 체계적·효율적 관리(중복, 사각의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증진 및 정책 조정 기능 마련

□ 과제 내용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기본법‘으로 개정

○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논의 및 연석회의 시행 등 타 위원회와 협력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가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정책위원회 통합 논의

- (’15.12.) 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논의
- (’16.05.) 외국인·이민정책 T/F에서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 연계를 통한 통합방안 검토
- (’18.02.) 외국인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 연석회의 개최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 (’18.05.) 부처 간 견해 차이로 통합 논의 중단, 외국인·이민정책 TF 해체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 추진절차 : 국조실 주관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및 통합(안) 마련 → 관계 부처 의견 조정 →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및 통합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없음 (’23년 신규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실시(연중)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방안」연구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연구

□ 소요예산 : **총 9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91	100	
-국 비	▪ 일반회계	0	91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이민법제 개편방안 연구용역비 50,000,000원

○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비 40,909,09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연구용역 실적	2	2	연구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6 / 4113
담 당 자	6급 이은주 6급 오명수	이 메 일	aabir097@korea.kr kyebaeg@korea.kr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외국인정책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외국인정책의 기본원칙·방향·과제에 대한 정례적 논의

☐ 과제 내용

○ 이민자 비자, 체류, 쿼터,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단기 관리방안 논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를 통한 지자체와 소통·협력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 위원 부처(기재부 등 19개)

○ 추진절차 : 외국인정책 관련 안건 수요조사 → 관계부처 등 실무자 회의 개최 → 관계부처 대상 심의안건 의견 조회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2. '22년도 추진 실적

☐ 제2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30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자 : '22.3.22. ~ 3.25.(서면회의) / '22.2.25 ~ 3.3.(서면회의)

○ 내용 : '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 등 2개 심의안건 확정

□ 제31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자 : ‘22.11.2. ~ 11.7.(서면회의)

○ 내용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 전문인력유치지원 및 이주민 거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 개최(연석회의)

○ 일자 : ’22.11.22.(온라인 화상회의)

○ 내용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 국경·체류·안전 및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연석회의)

○ 일자 : ’22.11.24.(온라인 화상회의)

○ 내용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개최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연중)

○ 관계부처와 지자체 참여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정례적 추진(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6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 당 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마련

□ 과제 내용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및 배정인원 결정 등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공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12.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

※ 19개 시·군, 19개소 선정,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990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간 협의 → 계절근로 인력 선발·도입·관리 등 운영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 허용업종 추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등 결정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 부처간 협력체계 유지 및 상시 소통창구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계절근로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5회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5
담 당 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신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다문화사회 전문가* 를 양성하여 고품질 이민행정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을 취득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 과제 내용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연 2회)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연 1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1.)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신설

○ ('13.1.) 같은 법 시행규칙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 등 조항 신설

○ ('14.11.)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마련

○ (‘20.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

○ (‘21.9.)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기관

○ 추진절차 : 교육수요 파악 →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결과 보고

2. ’22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2.3. / ‘22.9.)

□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2.12.)

3. ’23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3.3. / ‘23.9.)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3.12.)

☐ 소요예산 : 총 113백만 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5	113	50.7	
-국 비	▪ 일반회계	75	113	50.7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강사료 103백만 원, 운영비 10백만 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실시 횟수	3회	3회	계획,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 당 자	5급 신하균	이 메 일	lastsin@korea.kr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인 「국제법」을 「이민법(학)」으로 대체함으로써 신규 직원의 업무 이해도와 직무 수행 역량 제고

☐ 과제 내용

○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으로 「이민법(학)」 도입

※ '76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 「국제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후 상당한 시간 경과 및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12. ~ '19.11.)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협의

○ ('19.12.) 「출입국관리직 전문시험 도입에 관한 연구」 실시

○ ('21.10. ~ '21.12.)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 수렴',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공청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인사혁신처, 관계 기관(전문가)

2. '22년도 추진 실적

○ ('22. 4. ~ '22.12.) (연구용역)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법령·정책 연구」

- 「국제법」을 「이민학」으로 대체, '이민학' 표준체계 구성 등 출입국관리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방안 제시

3. ’23년도 추진계획

□ ’22년 연구용역 활용방안 제출 및 결과 공유 (1분기 ~ 2분기)

○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을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제출하고, 본부 각 부서와 공유하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도모

□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3분기 ~ 4분기)

○ 개편 필요성 설명 및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과제 논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제출 및 공유	결과 공유 및 활용	1건	1건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업무협의 실적	1건	1건	출장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이종현	이 메 일	jhl912@korea.kr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출입국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단위 이민정책 수요발굴·자문 및 이민 행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과제 내용

○ 이민행정 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운영, 지자체 이민전담부서 설치 지원 등

- 지방 출입국관서와 시·도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신설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연구용역 수행 →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구축(안) 마련 → 지자체 협의 → ‘(가칭)지역이민 주민위원회’ 구성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광역 단위의 이민정책 협력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논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광역단위 이민 협력 회의	1회		개최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을 통한 이민정책 개발

-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민간전문가, 지역연구원 등 연구계,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이 협력하여 이민정책 연구 저변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럼・간담회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연구 결과 정책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등 총 46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단체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및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 추진절차 : 네트워크 구성 →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연구총서 발간 → 정책화(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실무분과위원회 상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 합동 연구 플랫폼 마련

○ 중앙-지방-학계-연구계로 구성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3분기)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4분기)

□ 소요예산 : **총 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	100	
-국 비	▪ 일반회계		1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홍보물(1,045,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출범식 개최	1회		개최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추진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기능)에 따라 이주·이민 관련 조사·연구·자문 및 교육훈련 수행

□ 과제 내용

○ (연구) 저출생·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단위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수립·활용을 지원하는 종합·체계적 연구 수행

- 주무부처(법무부) 정책현안 및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증거기반의 연구과제 수행

○ (교육) 지방소멸 위기 및 지자체 외국인 주민 수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협정」 이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의 전문가 교육

○ (협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민정책 관련 학술활동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1958호)」 발효

○ ('09.12.) IOM이민정책연구원 개원(경기도 고양시)

○ ('14.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조약 제2196호)」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민간경상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으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교육・협력사업 등 수행

○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4건, 워킹페이퍼 4건, 이슈브리프 10건 등

○ (교육)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서울시 공무원 교육" 등 수행

○ (협력) 국회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등 수행

3. '23년도 추진계획

□ 데이터(증거) 기반 이민정책 연구 역량 강화

○ (이민정보통계분석센터 신설) 인구정책 관점에서 중장기적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기반의 연구・조사 역량 강화

□ 소요예산 : **총 2,004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004	2,268	13.2	
-국 비	▪ 일반회계	2,004	2,268	13.2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23년 예산증액 264백만원)

○ (이민정보통계분석센터) 통계DB 구축 및 정주형 이주배경인구 대상의 실태조사 수행을 통한 제4차 외국인정책 효과 분석 등 실시

○ (이민자 인식개선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166점	190점	(A×10)+(B×7)+(C×5)+(D×3) ※ 연구유형별 A: (기본/수탁)연구보고서 B : 정책보고서/통계시리즈 C : 정책브리프/워킹페이퍼 D : 이슈/통계브리프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91.3점	$\frac{\sum_{k}^{K}(\sum_{i}^{I}\frac{score_i}{I})}{K}$ score: 외부평가점수(100점 만점) I : 연구성과물 1건당 외부 평가자 수 k : 평가대상 연구성과물의 수 ※ 연구성과물 외부평가점수 기준 평가대상: 연구, 정책보고서, 정책브리프, 워킹페이퍼 ※ 내부지침: 80점 이상 발간승인
'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183점		상동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성지표)	80점		상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 당 자	7급 윤동운	이 메 일	headrock999@korea.kr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 정책·법령 개선 방향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설치

※ 2011년부터 운영된「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

□ 과제 내용

○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2.) 이민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406호)」

○ ('22.11.) 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2. 11. 25. ~ '24. 11. 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장관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개최

2. '22년도 추진 실적

□ 이민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11월)

○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및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 추진 방향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정책 자문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연중)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자문 필요 시,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전화번호	02-2110-4219
담 당 자	5급 김명훈	이 메 일	mhkim2920@korea.kr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출입국 민원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사증 신청부터 입국 후 국내 체류, 국적취득 등 전반 과정에서 단일 경로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기반으로 실현

□ 과제 내용

○ 전자민원 서비스 혁신

- 일원화된 민원 사이트를 통한 민원 통합신청과 심사 전문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맞춤형 민원안내, 본인인증 강화 등 민원업무의 질적 혁신)

○ 지능형 모바일 대민 서비스

- 혁신적 모바일 기술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도입하여 대민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을 활성화

○ 효율적인 업무현장 지원

- 민원 업무 매뉴얼의 전자화 및 관리, 제출 서류의 전자화, 사회통합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온라인 상륙허가 서비스 확대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 지속성장 기반 확보

-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및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 인프라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및 전사 통합된 관점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0.) 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22.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2.12.)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법안 발의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법령

3. ’23년도 추진계획

□ 예산 신청(1분기)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 여부	선정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 당 자	7급 김순일	이 메 일	soonil52@korea.kr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시스템 노후화로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통합정보망을 재구축하여, 신규 사회통합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향후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온라인 평가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 도입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정보망 개편

- 모바일 사회통합정보망 구축, 다국어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 전자민원으로의 전환 등 포털 전면 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3.)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업자

○ 추진절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22. 7.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3. ’23년도 추진 계획

○ ’23. 연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과제번호 : 5-3-1-1)에 포함시켜 추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외국인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이용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외국인 신분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모바일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전자민원 활성화

□ 과제 내용

○ 공통 플랫폼 개선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수용 운영을 위한 기반 증설

○ 발급・카드관리・연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의 발급 관리, NFC R/W 장비 도입, 공통 플랫폼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구축

○ 민원 알림 서비스 구축

- 민원 알림 정보의 제공 및 국가 재난 상황의 외국인 대상 알림 강화를 통한 필요 정보 적시 전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10.) 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22.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2.12.)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법안 발의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법령

3. ’23년도 추진계획

□ 기재부 예산 신청(1분기)

□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절차 진행(2분기)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 당 자	7급 김순일	이 메 일	soonil52@korea.kr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비대면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도 국민과 같이 계좌개설 등의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시 이에 대한 결과 회신 근거 마련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출입국관리법」 개정, ('23.5.) 시스템 구축 완료, ('23.9.) 서비스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관리법」 개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88조의4)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23년도 1,2분기)

○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①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②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시스템 구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23년도 3분기)

○ 제1금융권 중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은행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행(’23.9.18.)

□ 소요예산 : <u>총 481백만원</u>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481	100	
-국 비	▪ 일반회계	0	481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개발용역비(147백만원), 장비구입비(334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만족(80점)이상 점수 획득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설문조사 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7
담 당 자	부승용	이 메 일	bug9795@korea.kr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통해 수집된 방한 외국인의 국적・연령대・성별・국내 체류 예정지・여행목적・출발지 공항・도착지 공항 등을 분석

○ 외국인 입국자의 지역별 방문 추이 등을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지자체 및 관광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과제 추진연혁(경과)

○ 법무부-한국관광공사 간 데이터 분석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한국관광공사, 법무부(MOU) → 지방자치단체, 주무 부처

○ 추진절차 : 관광공사, 법무부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제공

2. '22년도 추진 실적

□ 우리동네 방문객 일일현황 시각화 자료 분기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제공

○ '22년 1분기(4.25.), '22년 2분기(5.23.), '22년 3분기(8.31.), '22년 4분기(10.4.)

3. ’23년도 추진계획

☐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본격 운영(’23. 상반기~)

☐ 외부 데이터 결합 및 분석 항목 확대 검토(’23. 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100%	100%	홈페이지 게시

※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한시 면제함에 따라 분석 일시 중단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 당 자	5급 김창규	이 메 일	keguri99@korea.kr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 관리와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인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 과제 내용

○ 관련법률·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국경 및 체류 관리, 이주자 인권보호 등 23개 GCM 목표의 주기적 점검 등 이행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9.) 유엔 총회, 「인간 이동의 국제협력을 위한 뉴욕 선언」을 통해 GCM 수립 약속

○ ('18.12.) 유엔 총회, GCM 승인 결의 채택

○ ('21. 3.)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점검 회의 개최

※ '20년부터 4년 주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24년 2차 회의 예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유엔 이주네트워크(UNNM)*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관계기관(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

* **UNNM**(**UN** **N**etwork on **M**igration)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GCM 이행 지원 기구로, 국제이주기구(IOM)가 **사무국 역할**

2. '22년도 추진 실적

○ ('22.1. ~ '22.3.)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 자발적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2. 5월 「제1차 국제이주점검포럼(IMRF)*」의 국가별 자발적 GCM 이행실적 점검, 모범사례 공유 및 관련 정책 논의자료로 활용

* ’22년부터 UN 총회 의장 주재로 4년 주기 개최(2회 포럼 ’26년 예정)

3. ’23년도 추진계획

☐ UNNM 등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연중)

○ ’24년 개최 예정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점검 회의」 대비 UNNM의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등 GCM 이행 관련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강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대응(이행) 방안 마련	1건	1건	관련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 당 자	6급 이종현	이 메 일	jhl912@korea.kr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과제 내용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국으로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기초 자료 제공 등 협력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매년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통계, 주요 정책 현황) 제출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2분기

-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4분기

-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참석

-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제이주부 전문가 방문, 회의·토론회 등 개최

□ 소요예산 : **총 13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3	100	
-국 비	▪ 일반회계	0	13	10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외여비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국외출장비(350만원 × 2명 = 7,000,000원)

- OECD SOPEMI 회의 참석 국외출장비(300만원 × 2명 = 6,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 당 자	6급 김지연	이 메 일	jikim433@korea.kr

5-4-1-3	UN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대테러 등 관련 정보공유 확대, 테러 분자의 입국 사전 차단 등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통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테러 방지

☐ 과제 내용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업무 공조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에 출입국관리공무원 파견 등 협력 방안 논의(연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위한 고용휴직 직위 신설 및 직원 파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22
담 당 자	6급 전홍근	이 메 일	jeonhg94@korea.kr

5-4-1-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협력 강화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해외 이민정책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주요 현안 발생 시 국제다자 협력체제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채널 구축

□ 과제 내용

○ UNHCR, IOM 등 국제기구 주관 워크숍·세미나 참석 및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 주관 회의 참여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ANDEX, APEC 등 글로벌 협력체 워크숍 및 세미나에 지속 참석

○ UNHCR, IOM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출입국·이민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교류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국제회의 참가) : 국제회의 일정 사전 조사 또는 국내외 초청장 수신
- 주제에 따른 참석 여부 결정 - 회의 참석 -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내부 공유
- (고위급 회의 개최) 정책수요 및 대상국가 선정 - 회의 의제 선정 - 회의 실시 - 결과 보고 - 보고서 내부 공유

2. '22년도 추진 실적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참석(총 2회)
(1차 : 2.18.~2.19. / 2차 : 8.19.~8.24.)

- ABT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도 도입 회원국들의 시행 관련 보고 및 공통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 APEC 회원국간 인적 교류 증진 및 이민, 국경관리정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확대로 국제협력체제 강화

○ ANDEX 지역협의회 참석(6.7.~6.8.)

- 세계 각국의 위변조 동향 및 초국경적 조직범죄 대응 사례 공유

○ APT 이민청장회의(아세안+한중일 3개국) 참석(8.24.~8.26.)

- 출입국, 영사업무, 국경관리와 관련한 의견 교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IOM 총회 참석(11.28.~12.3.)

- 기후 변화, 식량안보, 국내외 이주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보 공유

○ ICAO 워킹그룹회의(12.5.~12.6.) 및 IOM 국경관리 회의 참석 (12.7.~12.9.)

- 전쟁/기후 난민, 국경 관리,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제2회 도쿄 출입국포럼 참석(12.11.~12.14.)

- 각국의 우수인재유치, 외국인력 도입 사례 등에 대해 정보 공유

○ 몽골 이민청장 면담(6.28.)

- 한·몽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 관계 구축

○ 국제이주기구(IOM) 부사무총장 면담(10.12.)

- 법무부·IOM 간 협력관계 강화

○ UNHCR 최고 대표 면담(11.11.)

- 난민정책관련 상호 의견 교환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면담(11.28.)

- 양국 간 현안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면담(12.12.)

- 제2회 도쿄 출입국포럼 계기 한·일 출입국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현안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3. '23년도 추진계획

○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이민정책과 직접 연관성 있는 OECD, APEC, IOM, UNHCR 주최 국제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역적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적 현황 파악 및 위변조 동향, 국제 이주동향 파악을 위해 지역 국제회의체 참여

※ APT 이민청장 회의, 도쿄 출입국포럼, ANDEX 회의 등

○ 교류 협력 대상 국가의 다변화를 통해 이민행정 사례 연구의 내실화 및 이민·출입국 분야에서의 국가 간 이민정책 정보교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소요예산 : **총 218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28	218	4.4	
-국 비	▪ 일반회계	228	218	△4.4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본부기본경비-국제회의 참석-여비

○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개발지원-여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02-2110-4018
담 당 자	7급 오정음	이 메 일	oje0622@korea.kr

5-4-2-1	이민과 개발(Migration&Develpoment)의 정책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DA와 이민을 접목하여, ODA 수원국 국민 및 한국과 수원국의 상호 발전(개발) 방안을 정책화

□ 과제 내용

○ 법무부와 KOICA가 협력, 한국의 ODA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국내 이민자 수가 가장 많으면서 ODA 대상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우선 시작 후 확대

※ <예> 해외 현지 직업훈련원의 우수 수료자에게 한국으로 취업·진학 기회 제공, 귀국 시 본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0.) 4차 외국인 기본계획 「국민참여단 대면 토론회」 당시 시민참여단의 'ODA 활용' 의견 제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법무부 - KOICA 이민과 개발 정책화 관련 업무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타부처 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관련부처 논의 개시	관계기관 간 회의 실시	1회		회의 참석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9
담 당 자	5급 박지원	이 메 일	jiwon093@korea.kr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공사·이민청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 출입국 기관과 우호적 관계 조성

□ 과제 내용

○ 한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 해외 현지화 및 이식

- Hi-Korea(외국인온라인민원종합안내), K-ETA(전자여행허가)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우수행정 프로그램을 현지화 및 이식, 현지 이민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현지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출입국 연수 기회 제공

- 국내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출입국 공무원에게 행정 관련 연수 기회 제공, 각국 출입국공무원과의 교류 확대 및 행정능력 제고

□ 과제 추진 경과

○ ('19.11.) KOICA 요청, 미얀마 출입국 현대화 ODA 사업 현지 예비조사 참석 (2020년 미얀마 내부 상황으로 사업 중단)

○ ('20.2.) 코로나19 발생으로 ODA 현지 사업 중단('22년 하반기 재개)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신규 계획

3. ’23년도 추진계획

□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에 법무부 사업 2건 예비선정, 페루 및 파라과이 출입국현대화 ODA 현지 예비조사 실시 (‘23 10~11월)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페루 이민청의 이민행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바이오정보 데이터 표준화

○ 파라과이 이민청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민행정 현대화 사업

- 파라과이 이민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종이 기반 행정작업의 디지털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페루·파라과이 ODA 사업 추진	예비조사 시행	1건		사업기획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9
담 당 자	5급 박지원	이 메 일	jiwon093@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326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32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328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32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④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 ····· 329

1-3-3-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 331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 333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③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 335

행 정 안 전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4	100%		35	100%
1. 경 제	3	75.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25.0%		35	1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주요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시 기준이 되는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수,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
- 국민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시스템 개선
  -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 재난안전 정보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재난문자 및 재난안전 정보 외국어 제공
  - Emergency Ready App 자료 현행화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4개		35	10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개)				
1-3-1-4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				비예산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비예산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비예산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개)		35	100	
4-1-1-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35	100	신규과제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2년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장기적 증가세

- 총인구 대비 4.4%로 2006년 외국인주민 수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15) 171만명→('17) 186만명→('19) 222만명→('22) 226만명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주민으로서 자립 등을 위한 정책 여건 필요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4개 사업을 선정, 국비 28억원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굴·확산('22.11.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신규 8건 발굴, 사례 공유·확산)

-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지역별·유형별 등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작성하여 지자체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22.11.)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착 지원 및 내국인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정책개발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책 확산·공유 지원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 지자체 외국인주민 행정수요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담당자 워크숍 운영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1	외국인주민 지여사회 정책 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1-4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	행정기구 설치 시 기준이 되는 인구 수에 외국인 포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운영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운영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운영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3-1-4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현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을 고려한 행정 여건 확대

□ 과제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시 외국인 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시 기준이 되는 인구 수에 등록외국인 수,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기구설치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 수 고려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신규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23.1분기)

○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개정안 시행('23년 2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현황 반영	관계 법령 개정	관계법령 개정	100%	-	개정법령 시행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479
담 당 자	6급 박은제	이 메 일	eunje333@korea.kr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결정 시, 외국인주민 참여기회 확대

□ 과제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 지역 내 자조모임, 나라별 모임 등의 대표들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의견 정책 반영

□ 과제 추진 연혁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통보 : '13. 6.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구축·운영 현황 조사 : 매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 운영지침 마련 →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22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3.3.)

- 188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운영

* 지원협의회 총 위원 2,193명 중 외국인주민 284명(12.9%) 참여, 자문회의 총 위원 154명 중 외국인주민 66명(42.8%) 참여('22.12.31. 기준)

- 조례에 근거한 지원협의회, 자문회의 외에도 대표자회의,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주민 참여기구 구성·운영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4. 3.)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현황조사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 당 자	6급 최유정	이 메 일	youth2030@korea.kr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시책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최 → 지방자치단체 참여

2. '22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 법무부 주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추진, 행안부 참여(권역별)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중앙-지방 외국인주민 업무 소통 강화를 위해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권역별 설명회(워크숍) 운영(총 3회)

□ 소요 예산: 비예산

※ 법무부 예산 소요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 당 자	6급 최유정	이 메 일	youth2030@korea.kr

4-1-1-3	재난 · 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신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안전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앱(Emergency Ready App) 운영

☐ 과제 내용

○ 외국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시설물 정보 등 77종의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재난문자(영어·중국어), 대사관, 대피시설 등 36종의 재난안전 정보를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Emergency Ready App(영어) 서비스 개시('14.3월)

○ Emergency Ready App(중국어) 서비스 추가('17.1월)

○ Emergency Ready App에 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제공('18.1월)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영문 서비스 실시('20.8월)

○ Emergency Ready App(일본어) 서비스 개시('22.8.1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유지관리업체(유큐브)

○ 추진절차 : 사업발주 및 재난정보제공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재난정보 현행화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 DB서버 등 장비 증설 및 WEB/WAS 설정값 최적화, 과부하 요인 제거

○ Emergency Ready App 자료 현행화

- 대사관 및 대피시설, 의료시설응급 시설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

□ 소요예산 : **총 35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35	100	
-국 비	▪ 일반회계		35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국민재난안전포털(영문) 유지관리 : 35백만원

- 326,458,000원*10%*1.1-910,000=35,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최근 5년 평균)	12,100건		운영결과 업무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센터 재난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44-205-5388
담 당 자	6급 차진호	이 메 일	cjh1288@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340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341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345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34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1-①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348

1-4-1-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 ····· 351

1-4-1-⑤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354

1-4-2-③ 외국인 유치 활성화 ····· 356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2-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359

3-2-2-②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361

3-2-2-③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364

3-3-1-③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367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8	100%	25,000	26,074	4.3%
1. 경 제	4	50%	24,228	24,801	2.4%
2. 안 전					
3. 통 합	4	50%	772	1,273	64.9%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K-컬처 융합형 한국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방한 크루즈관광 유치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 다양화에 따른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주요 사업내용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여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K-팝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 한류관광 상품화 지원 설명회 개최 및 운영 지원,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연계 상품 개발 및 해외 현지 홍보,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최
- 방한 관광객 유치지원 전담부서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 조성 및 크루즈 상품 개발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외국 선사 등 대상 세일즈콜 실시,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 주기) 추진 및 결과 분석
-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 주간(5.21.~27.)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8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4)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4)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8개	25,000	26,074	4.3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4)	24,228	24,801	2.4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9,010	8,000	△11.2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867	570	△34.3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	-	비예산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4,351	16,231	13.1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772	1,273	64.9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150	200	33.3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122	504	313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500	500	-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69	100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전 세계인이 K-컬처와 한류에 열광하며, 한국방문의 주요 이유*로 K-컬처가 부상하는 등 한국 여행관심도 증가 추세

※ 한국방문 이유 1순위 문화체험·즐길거리 (K-pop, 한류 관련 포함) (잠재방한 여행자조사 2021/한국관광공사)

※ 음식, 뷰티, 음악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상승(해외한류실태조사 2022)

□ 크루즈 입항 재개('23.3~)로 인한 기항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제적 홍보마케팅 확대 필요

○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 및 신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 필요

□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등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과제 신속 추진을 통한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안시장 조기 회복 지원

□ 포스트 코로나 및 방한관광 재개에 대비한 의료·웰니스관광 육성사업 활성화 및 지역별 의료·웰니스관광 융복합 거점 조성 필요

○ 의료관광 유치업체 및 추천 웰니스관광지 등 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유통체계 복원, 지자체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 및 서비스 기반 등 재도약 위한 성장 필요

□ 이주배경주민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구성 다변화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여 타문화 이해도·포용도 증진 필요

○ 체류외국인 증가('22년 225만명, 전체 인구의 4.37%), 저출생·고령화 심화('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22년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치), 국제이주 증가 등으로 인구구성이 급변하면서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점차 다양화

○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전 세계적인 생산 인구 감소,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116만명(’ 08) → 300만명 초과 예상(’ 30), 158% 증가) 등 국내외적 인구 환경 변화 지속

○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체계를 적시에 수립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사회통합 추진

-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 방한 인바운드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메가 이벤트(한국여행 페스타) 연계 크루즈박람회 개최

- 크루즈 관광 재개 대비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 크루즈 업계·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 뉴노멀 관광 트렌드 변화(안전, ESG, 체험형)를 반영한 여행자 중심의 기항지 특화 콘텐츠 발굴

○ 지역 의료·웰니스관광 거점 육성지원 및 해외마케팅 추진

- 지역 의료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평가·지원(각 4개 지역) 및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 선정(‘21년 51개 → ’22년 58개)

-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해외 언론인·여행업자 팸투어 및 해외 광고 실시(8개국 11개 관광공사 지사 거점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서울, 인천, 부산 등 안내센터 3개소)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행사 프로그램 추진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전국 단위 주간행사 개최
- 교원·문화기관·방송종사자 등 대상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운영(각 1식) 및 문화다양성 교과서 활용학교 지원(3개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K-팝 콘서트 등 대형 이벤트 연계 한류 관심층을 관광수요로 전환

○ 전국 공공·민간의 문화·예술·스포츠·게임·도서·환경·음식·생활 분야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및 홍보

○ 뷰티 및 유관업계 등이 참여하여 K-뷰티 특별 프로모션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코리아 서머뷰티세일' 개최

□ 방한 크루즈관광 유치 및 홍보마케팅 강화

○ 크루즈 거점지사* 운영을 통한 해외 동향정보 파악 및 해외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 미국(뉴욕), 대만(타이베이),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등 6개소

○ 한국 테마 크루즈 등 크루즈관광 상품 개발 및 기항지 관광 콘텐츠 확대

□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산업의 무기인 K-컬처 활용으로 성공적인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으로 K-컬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전담 추진부서 신설 및 운영

□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

○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및 선제적 홍보마케팅 강화

○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지원 및 웰니스관광 체험기회 확대

○ 웰니스·의료관광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 다양화에 따른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5.21.~27.) 및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11.) 기반, 취업· 한국어문화 통합 교육과정(총론, 내용 체제,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활용 등) 및 교재·학습 콘텐츠 등 개발 전략계획 수립 포함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지원대상 콘서트 선정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마케팅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선정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한류관광 상품화 지원 설명회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관광상품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최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관광 유치경쟁력 강화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 행사 개최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관광상품 모객 및 해외 홍보마케팅 ▪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최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 개발 및 기항지 홍보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관광상품 모객 및 해외 홍보마케팅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행사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	문체부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행사 개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 보완계획 수립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추진	문체부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결과 환류	문체부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콘텐츠 확충

○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특별하고 희소한 경험 발굴

□ 과제 내용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K-팝 콘서트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지원 및 K-드라마·영화 등 주제로 한 한류테마 대표코스 개발

- 민간 및 지자체 K-팝 콘서트 지원(5개) 및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 한류테마 대표코스(51선) 가이드북 배포 및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 지원, 신규 코스 개발(40선)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연중 상시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현장 체험형 국내 개최 이벤트 100선 선정 및 홍보('23.1월~)

- 해외지사 활용 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 각 이벤트 소개 리플렛 배포 등

○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민간협력형 뷰티 이벤트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최('23.6~7월)

- K-뷰티 테마 방한 관광상품 연계 프로모션, K-뷰티 체험프로그램, 지역·축제(양양 라구나 비치, 보령 머드축제 등) 연계 행사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문체부→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
-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문체부→(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추진절차

- (K-팝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직접 수행
- (코리아서머뷰티세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23년 신규 추진)

3. ’23년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K-팝 콘서트) 지원대상 콘서트 선정(~’23.3월), 콘서트 연계 상품화 및 홍보(’23.5~11월)

○ (한류테마 대표관광코스) 한류관광 상품화 지원 설명회 개최(~’23.4월) 및 운영 지원(3~4분기)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23년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1월), 100선 연계 관광 상품개발 및 해외현지 홍보(2~4분기)

○ (코리아서머뷰티세일) 개막행사('23.6.20.), 거점센터 운영(명동/'23.6.20.~7.20.), 민간협업 K-뷰티 테마 특별 프로모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연계 등(6~7월)

□ 소요예산 : **총 8,00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010	8,000	△11.2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9,010	8,000	△11.2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한류관광 활성화

- K-팝 관광활성화 : 4,000백만원×1식

- K-드라마 관광활성화 : 4,000백만원×1식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신규)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0,000	-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	전화번호	044-203-3338 044-203-3337
담 당 자	주무관 류덕호 사무관 김영은	이 메 일	gaon38@korea.kr minor10@korea.kr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전화번호	044-203-2783 044-203-2782
담 당 자	주무관 김기강 사무관 김규영	이 메 일	nefu0220@korea.kr kgy0328@korea.kr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운·관광·레저가 결합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과제 내용

○ 항만·관광·출입국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강화

- 항만 인근 복합관광시설·안내센터·대중교통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지원으로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고

- 크루즈 개별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한국형 테마상품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크루즈발전협의회 해수부 공동 추진·개최(2016년~)

○ 크루즈 거점 지사 운영(2018년~, 6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관광산업 기반조성

○ 크루즈관광 재개에 따른 국내 크루즈업계 현황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8.18., 서울)

○ 크루즈관광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정보 제공(2개 중소항만 대상 체험형 콘텐츠 발굴 및 30개 테마 코스 개발)

○ 크루즈 거점지사 6개소 운영을 통한 해외 동향정보 파악 및 해외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뉴욕, 타이베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상하이)

○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개최

- 53개 기관·업체 참가(국내 29개, 해외 24개사), B2B상담 168건 진행(전년 대비 130% 증), 예상매출액 약 150억원

3. '23년도 추진계획

□ (연중)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외국 선사 등 대상 세일즈콜 실시

□ (2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3분기) 크루즈 상품개발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 (4분기)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제10회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소요예산 : **총 57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67	570	△34.3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867	570	△34.3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470백만원

○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80백만원

○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기항지 전반적 만족도	기항지 전반적 만족도	4.20	- *코로나로 인한 입항 금지기간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23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 전년도 체류자수	5	집계중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 코로나 기간 이후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미실시, '23년부터 성과목표 기준 재설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73 044-203-2885
담 당 자	주무관 정다희 사무관 노학래	이 메 일	dada6008@korea.kr rhl0095@korea.kr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관광수출산업의 무기인 K-컬처 활용으로 성공적인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K-컬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전담 추진부서 필요

☐ 과제 내용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

- (소속 및 직제) 문체부 관광정책국 내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 (직제 성격 및 근거) 별도정원 조직으로 운영, 국무총리 훈령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근거 마련
- (규정 제정)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5.8)
- (기간) 훈령 시행일(5.8)로부터 2년(한시조직, 별도정원)

* 총리훈령 제정 시행일로부터 조직 운영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관련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23.3.2)

☐ 추진체계

○ 해당없음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23.5.8)

○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운영(’23.5.8~)

□ 소요예산 : 해당없음(비예산)

□ 산출내역 : 해당없음(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관광수출전략 추진단 신설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운영(회)	1	-	-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전화번호	044-203-2783 044-203-2782
담 당 자	주무관 김기강 사무관 김규영	이 메 일	nefu0220@korea.kr kgy0328@korea.kr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의료·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 및 홍보마케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관광 경험 제공,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및 국내 수용여건 개선, 유치업체 육성 등

○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콘텐츠 발굴 확대, 웰니스관광 체험지원 등

○ 지역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제12조의2)

○ 2010. 의료관광 육성 사업 추진, 2017.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 추진

○ 2014. 의료관광 클러스터 지원, 2018.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지역 의료·웰니스관광 거점 육성지원 및 해외마케팅 추진

○ 지역 의료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평가·지원(각 4개 지역) 및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 선정('21년 51개 → '22년 58개)

○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해외 언론인·여행업자 팸투어 및 해외 광고 실시(8개국 11개 관광공사 지사 거점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서울, 인천, 부산 등 안내센터 3개소)

3. '23년도 추진계획

□ (연중)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의료관광 주요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의료 및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선정

○ 추천 웰니스관광지 발굴 및 선정

□ (2분기) 의료관광 유치경쟁력 강화

○ 의료관광 유치업체 상품개발 공모전 개최 및 선정

□ (3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웰니스관광 협의체 운영

□ (4분기)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 및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 소요예산 : **총 16,231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4,351	16,231	13.1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11,951	13,231	10.7	문체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2,400	3,000	25	광역지자체6개소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의료관광 육성 5,051백만원

○ 웰니스관광 육성 5,180백만원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지원 6,0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5만명	24.8만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23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7만명	(집계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이동제한으로 의료관광객 방한 곤란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87 044-203-3480
담 당 자	주무관 이예은 사무관 노학래	이 메 일	yenerge20@korea.kr rhl0095@korea.kr

3-2-2-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10년)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4년)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다양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민의식, 문화향유 및 창조의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실시

○ ('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실시

○ ('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시범실시

○ ('18년) 정책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실시

○ ('20년)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2년) 202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연구기관

○ 추진절차 : 조달청 공공입찰 통한 용역기관 선정 → 계약 체결 및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지표체계 보완 및 유사통계 분석 등 시범조사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1분기) ‘23년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국가통계 승인신청을 위한 유사 조사·통계 분석 등 조사방향 수립

☐ (2-4분기) 조사 추진 및 결과 분석

○ 202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체계 보완 및 실태조사 추진

☐ 소요예산 : **총 20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50	200	33.3	
-국 비	▪ 일반회계	150	200	33.3	문체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0백만원(1식×2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	연구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양성미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mymariah20@korea.kr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 과제 내용

○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 개최(1회)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공연, 전시, 강연, 포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이후 매년 추진(~'15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60호)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문체부·예술위) → 수행기관 선정(예술위) → 주간행사 추진(주최: 문체부, 주관: 예술위) →정산 및 성과 보고(예술위) →정산 확정(문체부)

2. ’22년도 추진 실적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전국 단위 주간행사 개최(5.21.~5.27.)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제포럼 개최(5.24.)*, 문화다양성 콘텐츠(영화, 음반, 도서) 온라인 전시 운영(왓챠, 지니뮤직, 교보문고 연계), 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521보 걷기 도전’ 등),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64만여명 참여)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 국제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 포럼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 등 국외 전문가 방한)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전국 24개 지역주관기관별 포럼, 교육, 전시, 체험 등 40여개 프로그램 추진(17.5만여 명 참여)

3. ’23년도 추진계획

□ (1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 (2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 (3~4분기)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총 504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22	504	313	
-국 비	▪ 일반회계	122	504	313	문체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문화다양성 주간 대국민 캠페인 추진 504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23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손지은 사무관 양성미	이 메 일	sjn912@korea.kr mymariah20@korea.kr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과제 내용

○ (교과연구 지원) 중·고교 문화다양성 교과서 활용지원 등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활동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콘텐츠제작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지침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 ('16년~'17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1기, 4개교),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8년~'19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2기, 4개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년~'21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3기, 3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2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4기, 2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절차: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교과연구 지원(2개교, 연구회 1개교)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4종) 운영에 1,864명 참여

○ (교과연구 지원) 교과연구학교·교과연구회 선정 및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지역문화재단 등)·문화콘텐츠제작자(감독·작가 등) 대상 직무연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온·오프라인 연수), 성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

3. ’23년도 추진계획

☐ (1분기) 교과지원 및 전문인력 연수 운영 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 (2-3분기) 旣 개발 교육과정 운영 및 신규 개발 추진

☐ (4분기) 운영 결과 환류 및 신규과정(성인) 시범운영

☐ 소요예산 : **총 50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00	500	0	
-국 비	▪ 일반회계	500	500	0	문체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460백만원

○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4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3.4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6
담 당 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양성미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mymariah20@korea.kr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1. 과제의 개요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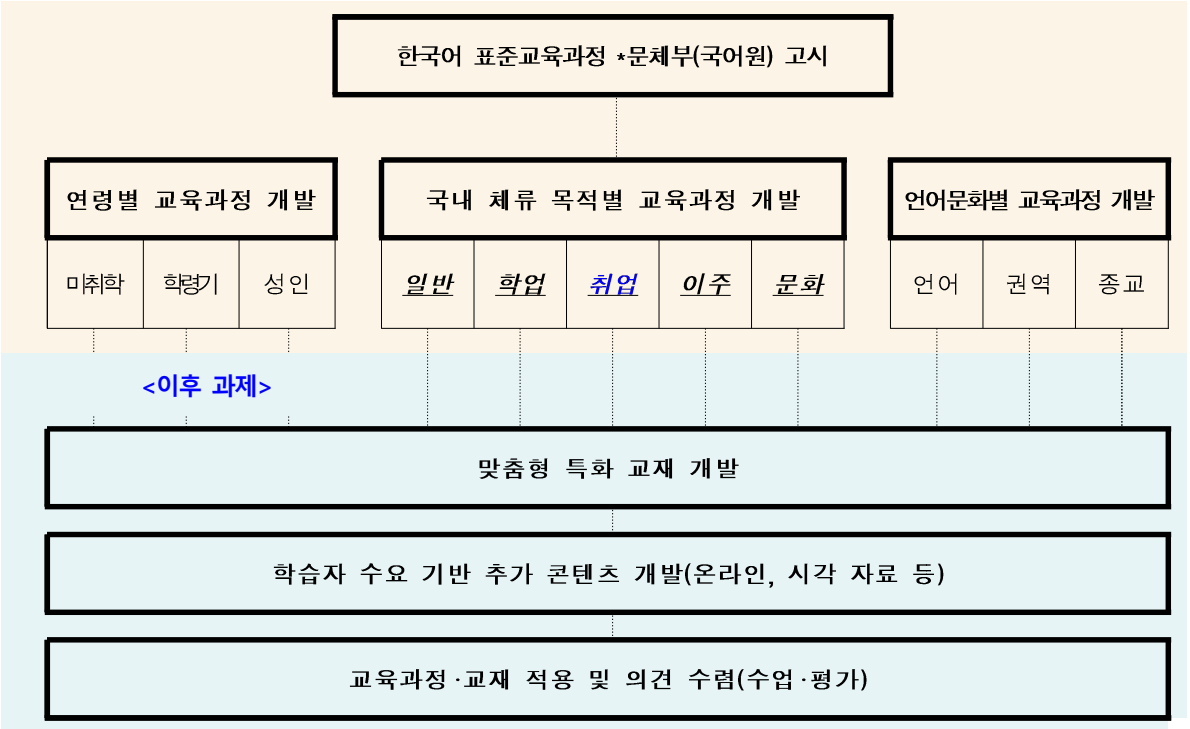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 증가, 구성 다변화에 따라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 한국어 취약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를 통하여 사회통합 연착륙을 도모하는 초기 시스템 정립

☐ 과제 내용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11.) 기반, 취업· 한국어문화 통합 교육과정(총론, 내용 체제,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활용 등) 및 교재·학습 콘텐츠 등 개발 전략계획 수립



- 입국 전후별·체류 외국인 체류 경로 및 생애 주기 등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장기체류 목적의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내용* 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의 공통 직무 분석을 통한 직업 (기초) 능력 향상 목적 한국어, 근로자의 생애 주기별 상황에 적합한 교육 내용의 최적화 모형 구축

○ 외국인 근로자 교재 개발

- '23년 1차 연도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교재 개발 요구 조사 및 대표 표본 단원 만족도 조사 포함)

- 입문, 기초, 심화의 단계별 교재 개발 및 자문·감수 진행

□ 과제추진 연혁(경과)

○ 2023. 6.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착수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무부(협업)→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23년 신규 추진)

3. '23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계획

○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계획 수립

○ 2/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착수

○ 3/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추진

○ 4/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완료

□ 소요 예산: 총 69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0	69	100	
-국 비	▪ 일반회계	0	69	100	문체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 내역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1식×69,000,000원

- 교육과정 및 운영 방안 개발, 수요조사 등 기초 연구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 근거
'2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건수(종)	1	-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번호	02-2669-9742
담당자	연구관 구지민	이메일	gujm@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373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37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37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37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2]-②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378

1-2-[3]-② 농어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380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1]-③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38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1]-②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강화 ····· 384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2]-①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387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5	100%	1,333	1,951	46.4%
1. 경 제	3	60.0%		618	100%
2. 안 전					
3. 통 합	1	20.0%	1,333	1,333	0%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20.0%			

추진 방향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 **영농 후계인력으로 육성 및 지역 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역량 강화**

주요 사업내용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日)’ 단위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 ’22년 시범 5개소, 190명 → ’23년 19개소, 990명

- 결혼이민여성의 요구 및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영농정착지원’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부처 추천제 운영 효율화 및 제도 홍보 강화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장기취업 및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운영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5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5개	1,333	1,950.5	46.4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	-	617.5	-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	-	비예산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	-	비예산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617.5	-	신규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	1,333	1,333	0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333	1,333	0	계속사업
소계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	-	-	-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	-	비예산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농업분야 숙련기능 인력 부처 추천제 운영 효율화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강화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를 위해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숙련기능인력 제도개선 추진 정책 마련 필요

□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자녀세대의 성장에 따라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영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

○ 영농의지가 있는 농촌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지원 정책 수립필요

* 국제결혼 비율(전국/농림어업종사자 남성) : ('20) 5.2%/13.3% →('22) 6.3%/16.7%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지역 내 이해도 증진을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수/비율 : ('20) 39,658/22.9 →('21) 39,725/22.8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 추진(5개소, 190명)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도 최소 ' 日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 소규모 농가, 단기인력 필요 농가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외국인력 수급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가능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 및 영농지식 수준에 따라 농업교육을 단계별(기초-심화과정)로 세분화하여 운영

-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맞춤형 1:1 농업교육 및 생활상담 등을 통해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

○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지원 과정 운영

-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원 간 이해도 향상, 지역주민과의 교류확대 및 농업농촌 가치 이해교육 운영

- 청소년 전문교육기관(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과 협력하여 청년농업인과의 대화, 농업분야 진로탐색 과정 등을 운영하여 농업농촌 차세대 주역 양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22: 5개소, 190명 → '23: 19개소, 990명)

□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 및 지역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요구 및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 운영

- 재배작물의 종류확대 및 실습교육 확대 등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확대 추진

-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수준을 고려하여 교재 내 어려운 용어 변경, 한국생활에 대한 내용 및 양성평등·다문화 정책 내용추가 등 교재개편

- 결혼이민여성 및 멘토의 교류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 역량강화 추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청소년의 농업농촌 정착지원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 청소년과정 운영을 통해 진로상담 및 교류확대 지원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방안 수립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지침 마련('23.1월~)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3.1월~) ▪ '23년 사업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23.1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 (~23.2월) ▪ 교육 운영 기관 선정 및 교육 대상자 모집(~23.3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3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심사협의회('22.12월) ▪ '23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운영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3년 상반기 현장점검 ('23.6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지역별 업무 담당자 및 멘토 사전교육(~23.4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 농업 및 정착지원 교육과정 진행(23.4~10월)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3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 심사협의회('23.5월)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23.6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협의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 현장 점검('23.6~9월) ▪ 교육 만족도 조사('23.9~10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3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3년 하반기 현장점검('23.11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완료 및 워크숍('23.11월) ▪ 교육결과 및 정산보고('23.12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3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 '24년 계절근로자 배정규모 검토·협의('23.12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1. 과제 개요

□ 목적

○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H-2 등)를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국내 정주유도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부처추천제 운영 효율화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강화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을 위해 농업·어업·제조업·뿌리산업·건설업·조선업 등 산업별 별도 쿼터 운영 중(법무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농업쿼터 : ('19) 50명 → ('20) 50 → ('21) 50 → ('22) 150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등(협조)

○ 추진절차 : 쿼터배정(법무부) → 부처추천제 운영(각 부처)

2. '22년도 추진 실적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 운영('22년 추천실적 : 223명)

3. ’23년도 추진계획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부처추천제 운영 효율화 및 제도 홍보 강화

○ ‘23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운영방안 수립

○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부처추천‘ 신청·추천방식 개선(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신속한 비자전환 지원(9월~)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 비자 전환을 위한 근로소득 신고 안내 등 리플렛 배포, 홍보 문자발송

- 지자체, 농업인단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력 추천 방식 개선을 통한 신속한 비자전환 지원	숙련기능인력 온라인 추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100%)	(‘23신규)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 당 자	5급 김혜정	이 메 일	aramaro@korea.kr

1-2-3-2	농 · 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협조)

1. 과제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체류를 위해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숙련기능인력 제도개선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농업쿼터 : ('19) 50명 → ('20) 50 → ('21) 50 → ('22) 150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 및 해수부(협조)

○ 추진절차 : 개선방안 검토(각 부처) → 체류제도 총괄(법무부)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23년 신규 협조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농업분야 장기취업 및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운영(2월~)

○ 농업부문 외국인 체류제도 현황 및 장기체류 가능성, 해외사례 분석, 숙련근로자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농업분야 소득요건* 완화 등 농업 특수성을 반영한 점수제 개선안 마련, 법무부 협의

* 근로시간, 휴일 등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됨에 따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차이로 농업분야 임금은 타 산업 대비 20% 낮은 수준

□ 소요예산 : 비예산

□ 산출내역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취업 및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개선	농업분야 외국인 장기체류 방안 마련	제도개선안 마련	100%	('23신규)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 당 자	5급 김혜정	이 메 일	aramaro@korea.kr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과제 내용

○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日'단위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2: 시범 5개소→ '23: 19)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5개소),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추진(15개소), 20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70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협업)→ 지자체, 농협중앙회

○ 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사업 신청→ 사업 선정→ 사업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도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 추진(5개소, 190명)

<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요 >



3. ’23년도 추진계획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지침 마련(’23.1.~)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3.1.~) → ‘23년 사업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23.1.) → ‘23년 상반기 현장점검(’23.6.) → ‘23년 하반기 현장점검(’23.11.)

□ 소요예산 : **총 1,235백만원**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	1,235	순증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농특회계)		617.5	100	농림축산식품부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617.5	100	
-기 타					

□ 산출내역

○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개소당 65백만원×국비 5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19개소	19개소	지자체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 당 자	4급 김동일	이 메 일	mymy@korea.kr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촌 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10~)

- 농업종사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영종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실습, 농촌역사·문화 등을 교육

○ 1:1 맞춤형 농업교육('09~)

-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실습 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영농정착지원('09~)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농촌·농업의 이해과정,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1. 과제 추진

○ 2010. 1. 예산 및 교육인원 확대

○ 2019. 1. 청소년 과정 신규 운영

○ 2020. 1. 단계별 농업교육 세분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지원

○ 기초농업교육, 농기계 사용법,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교육, 가공 실습 등 6차 산업교육 등을 통해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871명)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전과정, 마케팅 및 선진 재배농법 견학 등을 통해 전문 농업교육 제공(570명)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지역 내 이해증진 프로그램 및 농촌·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체험 교육(784명)

3. '23년도 추진계획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1,900명)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소요예산 : **총 1,333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333	1,333	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농특회계)	1,333	1,333	0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1,984명 교육 × 672천원 × 국비 1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교육 인원 확대	교육수료 인원(명)	1,984	2,200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4-201-1568
담 당 자	5급 김문석	이 메 일	kms4492@korea.kr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1. 과제 개요

□ 목적

○ 농업 경영 형태는 규모화되는 반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지속되어 농업분야 근로인력 부족 문제 심화

- 농업분야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C-4, E-8)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과제 내용

○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운영상황 점검, 개선안 발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매년), 2023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 추진절차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지침 마련 등 운영 총괄, (농식품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협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 계절근로자 도입, 교육, 관리 등 운영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22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21: 6,216명→ '22: 16,924명), 단기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22년 시범 5개소)

3. ’23년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2.12월) → ‘23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 ’23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3.5월)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23.6월)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34,614	34,614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 당 자	4급 김동일	이 메 일	mymy@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392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39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395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396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2]-④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396

1-2-[4]-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399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2	100%	160	190	18.8%
1. 경 제	2	100%	160	190	18.8%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 제고**
-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여율 제고**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22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구인기업 115개사, 구직자 2,033명 참가

- 뿌리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양성

  -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운영
  -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량 검증*을 통해 기술인력 선발

  * 면접·실습 평가를 통해 전공 뿌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 평가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2개	160	190	18.8	
소계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160	190	18.8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비예산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60	190	18.8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라 제조업 인력난 확산

○ 생산연령인구(15~64세) '30년 3,381만명(2020년 대비 357만명 감소) → '40년 2,852만명(2020대비 886만 명 감소)

○ 1인 이상 사업체 부족인원 54만명, 이 중 제조업 부족인원 13.7만명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2023.10월 기준)

□ 신산업·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숙련 기술 분야의 인력수요도 증가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해외전문인력 유치활동

- 224개 기업 297명 해외우수인력 채용지원

·(학력별) 학사후 경력 1년이상 167명, 56%, (직종별) 엔지니어 121명, 41%

-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115개사 2,033명 참가, '22.10월)

○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뿌리산업 6대 분야의 균형적인 기술인력 배출을 위하여 추가선정 공고를 통하여 뿌리산업 업종 특화 대학 및 학과 모집

-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을 시행하여 우수한 기술인력 선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 제고

○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성, 뿌리산업 전공 위주 교과과정 구성 및 실습, 기업 현장체험 등 진행 추진

□ (유학생 취업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 일자리대전을 통합 개최하여 홍보, 기업·유학생 참여율 제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3년도 운영계획 협약 체결 ▪ '23년도 상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3년도 운영현황 중간점검	산업부 뿌리산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0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3년도 하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1-2-4-2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4년도 양성대학 연차평가	산업부 뿌리산업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뿌리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을 선발·양성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하여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 공급

□ 과제 내용

○ (대학 선정·운영)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운영

○ (기술 인력 선발)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통해 기술인력 선발

※ 기량검증 : 면접·실습평가를 통해 전공 뿌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 평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4. 10. 양성대학 3개(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대학 선정

○ 2015. 10. 양성대학 5개(거제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전주비전대) 대학 추가 선정

○ 2016. 9. 뿌리산업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지표 개발

- NCS 세분류,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활용

○ 2017. 1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추가 선정

○ 2018. 1. 양성대학 2개(조선대, 인하공전) 선정 취소

○ 2019.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선정 취소

○ 2020. 1. 경기과학기술대학교(표면처리), 영남이공대학교 선정

○ 2022. 12. 양성대학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추진절차

- (양성대학) 양성대학 선정 → 협약 체결 → 양성대학 운영

- (기량검증) 기량검증 공고 → 외국인유학생 신청 → 기량검증 실시 →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2. '22년도 추진 실적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3개교 선정평가위원회 통과

○ 뿌리산업 6대 분야의 균형적인 기술인력 배출을 위하여 추가선정 공고를 통하여 뿌리산업 업종 특화 대학 모집(경기과기대, 서정대, 조선이공대 등 접수)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유학생 양성

○ 졸업생 224명, 기량검증 합격자 수 166명

□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실시(2회)

○ 2022년 2월 졸업자 대상 7개교(거제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경기과기대, 아주자동차대, 영남이공대, 조선이공대) 기량검증 실시

○ 2022년 8월 졸업자 대상 6개교(거제대, 군장대, 계명문화대, 아주자동차대, 영남이공대, 전주비전대) 기량검증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2023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 체결(1분기)

○ 2022년말 연차평가 결과(입학 정원 등)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

□ 2023년 2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1분기)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운영 대학 중간점검(2분기)

□ 2023년 8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3분기)

□ 2023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연차평가(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뿌리산업의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23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뿌리산업의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전화번호	044-203-4906 044-203-4907
담 당 자	5급 이미진 6급 정서란	이 메 일	mijin8@korea.kr rani123@korea.kr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수요 대응 및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추진 경위

- 2009.1.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제10조(사업)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사업 명시, 추진근거 마련
- 2009.11.20. : Global Talent KOREA(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022.10.21.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14회차 개최

☐ 추진체계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국제교육원, 서울시

2. '22년도 추진 실적

☐ 2022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 일자/장소 : 2022.10.21.(금)~10.22.(토) / COEX C홀

○ 결과 : 구인기업 115개사, 구직자 약 2,033명 참가

○ 채용 : 31명(2021년~2022년 참가기업 중 22年內 실적)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일자/장소 : 2023.8.21.(월)~8.22.(화) / COEX C홀

○ 규모 : 구인기업 100개사, 구직자 약 2,000명

□ 소요예산 : 총 19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0	190	18.8	
-국 비	▪ 일반회계	160	190	18.8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장치, 운영비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7
담 당 자	5급 이혜숙	이 메 일	hyesook724@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404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405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0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07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2-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407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③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411

보 건 복 지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2	100%	4,864	4,864	0%
1. 경 제	1	50%	4,864	4,864	0%
2. 안 전	1	5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확대 및 환자 권익·편의 증진
  - 외국인 의료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 운영('22년 총 31개국 108명)
  - 우수 의료기관 인증
  -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영어 등 7개 언어 총 222명 응시, 58명 최종 합격('22년)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에 최소거주 기간(6개월)을 추가,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같이 즉시 가입토록 건강보험법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2개	4,864	4,864	0.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	4,864	4,864	0.0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864	4,864	0.0	-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	-	-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비예산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확대·성장*에 따라, ' 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를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20) 710억달러 → ('25) 1,820억달러 (Glasgow Research & Consulting Report, '22)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 '22년 24.8만명 유치하여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

< 2009-2022년도 연도별 외국인환자 및 방한 관광객 수 (단위 : 천명) **>**



* 외국인 환자수 : 복수 진료와 재방문을 포함하지 않고 환산한 실제 환자 수 (실환자 기준)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확대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성실 납부, 직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 발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복지부 보험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복지부 보험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실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복지부 보험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제8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복지부 보험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과제 내용

○ **(유치채널 확대)** 주요국 정부 간 협력 및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를 통한 환자 유치채널 발굴・확대

○ **(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외국인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의료통역 지원 강화 등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 이용 편의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 ('16.6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6.10월) 제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17.1월) 1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시행

○ ('18.10월)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 ('22.3월)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2.6월) '2022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2.9월) 제7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22.12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4주기 기준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민간위탁)

○ 추진절차 : 사업계획보고(진흥원·개발원)→ 사업계획 승인(복지부)→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21년 외국인환자 15만명 유치

○ **(유치채널 확대)** 해외 의료인 국내 연수 다각화를 통해 대외에 한국의료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의료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Medical Korea Academy e-class) 운영('22년 총 31개국 108명, 238건 수료)

○ **(유치기관 관리 강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수준 향상을 견인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정제 개선 추진

*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4주기 ('22~'25) 기준 개정 공표('22.12월)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 총 222명 응시, 58명 최종 합격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 (유치채널 확대) 중동 국비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연중, 3분기)

-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한 13개 교육과정 운영(3분기)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활성화(4분기)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 지정(심사면제)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연중)

- 2023년 제8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필기, 실기) 실시

- 디지털 체계 전환에 따른 신기술 콘텐츠 교육과정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인력 양성 과정에서 실무역량 강화(4분기)

* 가상현실(VR) 기반 교육 인프라 도입 및 교육 과정 개발로 실습 교육 접근성 확대

☐ 소요예산 : **총 4,864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4,864	4,864	0	
-국 비	▪ 일반회계	4,864	4,864	0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2,369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지원 : 1,327백만원

○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 1,000백만원

○ 사업관리 기본경비 : 168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18만명	25만명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보고
'23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27만명	34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표본조사 가집계 추정치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전화번호	044-202-2982
담 당 자	5급 김광수	이 메 일	516kks@korea.kr

2-2-1-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수의 외국인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이용하고 있으나, 건보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부 제도악용 사례 방지 필요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이미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건강보험이 적용 중('19.7.~)이므로,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자격 정비 필요

□ 과제 내용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에 최소거주 기간(6개월)을 추가,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같이 즉시 가입토록 건보법 개정

※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까지 거주 요건(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예외를 둘 필요 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도 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	개정 여부	개정	개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706
담 당 자	5급 안정습	이 메 일	yesahn@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416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41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19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21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2-② 취업이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421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3-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423

1-2-3-③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425

1-2-3-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427

1-2-3-⑤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429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433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1-①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435

3-3-2-①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43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①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441

4-1-1-②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443

고 용 노 동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0	100%	1,892	1,986	5.0%
1. 경 제	5	50%			
2. 안 전	1	10%			
3. 통 합	2	20%	1,892	1,986	5.0%
4. 인 권	2	2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 **합리적 고용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

주요 사업내용

-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베트남 등 3개국 용접분야 기능인력 281명 훈련('22년)
-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계획 마련, 인력난 심화 업종 대상 비전문취업(E-9) 고용 확대 및 방문취업(H-2)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주거실태 및 산업안전관계법 지도·점검
-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 갱신제 도입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0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2)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10개	1,238,782	1,408,113	13.7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	-	비예산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	-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	-	비예산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	-	비예산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오에 신속·탄력 대응	-	-	-	비예산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	-	비예산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238,782	1,408,113	13.7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236,890	1,406,127	13.7	전체예산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892	1,986	4.97	-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	-	비예산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	-	비예산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출생아 수 감소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구인난 증가 등 국내 노동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 운영 필요

○ 인력난 심화와 맞물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확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등 제도 유연화 요구 증가

2. '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원의 빠른 회복으로 구인난 해소 기여

*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27.7만명)의 97%까지 회복

○ 외국인근로자 입국 규모를 확대('21년 10,501명 → '22년 88,012명)하여 사업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미입국 대기인원을 대부분 해소

○ '23년 쿼터 11만명으로 역대 최대규모 결정

○ 건설현장별 이동제한 완화,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도입규모 확대 등 연중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그간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구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발표(12.29)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쌍방의 제도개선 요구 지속

- 취업활동기간 확대,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축소 등 요구

- 사업장변경 확대, 숙식비 징수지침 개정 등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요구 지속

○ (개선방안)

-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에 대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체류기간 등 우대하는 방안 검토

- 업종의 구분 없이 외국인고용법 제13조의4제2호에 따른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개정 검토

- 사업장변경, 숙식비 징수지침 개선안 마련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 경기 전망, 인력 부족률, 외국인근로자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저출생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활용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합리적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제고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현지 훈련기관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발된 인력을 뿌리산업 사업장에 알선(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연중계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훈련참여 확대(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 간 정보연계 추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상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현장 수요조사, 해외사례 분석 및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계획 마련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대상 외국인력(E-9) 허용 확대 검토(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검토 (연중계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세부 사업 추진방안 협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하반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갱신제 도입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 외국인력 선발

- 한국어 교과 및 전공 교과(용접 등)로 훈련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송출국에서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알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 베트남·우즈베키스탄 56명 훈련 실시

○ ('20) 베트남 23명 훈련 실시

○ ('22) 베트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281명 훈련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생 모집 신청·선정 →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접수 → 훈련대상자 확정 → 훈련 실시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최종 합격자 선정 → 구직자명부 작성·관리 → 뿌리기업 우선 알선

2. '22년도 추진 실적

□ 3개 국가* 제조업(용접) 분야 기능인력 281명 훈련 실시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3. ’23년도 추진계획

□ 송출국 현지 훈련기관에서 직종별 기능훈련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발된 인력을 뿌리산업 사업장에 알선

○ 훈련 시간 80% 이상, 훈련 이수 평가 60점 이상, 한국어 능력시험 80점 이상(200점 만점 기준) 적격 E-9 선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3개 국가 300명 이상 훈련 실시	3개 국가, 281명 실시	내부 자료
’23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3개 국가 400명 이상 훈련 실시	-	내부 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활용

□ 과제 내용

○ 「가사근로자법」 상 정부인증기관이 가사관리사(E-9)를 고용하여,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외국인력의 활용방식 다양화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인증기관 선정 → 시범사업 수행 → 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 검토

2. '22년도 추진 실적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12.29) 시 탄력적 인력공급 검토 계획 포함

○ 비공식 일자리에 대하여 외국인력의 활용방식 다양화 검토하되, 가사·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 인증기관 방식의 인력 공급방안 검토

3. '23년도 추진계획

□ 현장 수요조사, 해외사례 분석 및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계획 마련

□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세부 사업 추진방안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 검토	사업 추진 계획 발표	사업추진 발표 여부	발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12.29)
'2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선정	계획 수립 및 참여자 선정 여부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5
담 당 자	4급 이재인	이 메 일	urgeelee@korea.kr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과제 내용

○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E-9) 신규 허용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 항공·육상화물취급업(식육운반 업체) 등 H-2 허용

○ ('21) 광업 및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H-2 허용

○ ('22) 항공·육상화물취급업(택배업) 등 H-2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주관), 신규 허용 업·직종 관련 주무부처(협업)

○ 추진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정·의결 → 외국인력 선발·도입

2. '22년도 추진 실적

□ ('2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12.29.)을 통해 H-2 허용업종을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 제외업종* 지정(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용범위 확대 결정

* 광업·서비스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등 2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업종은 H-2 취업 전면 허용

3. ’23년도 추진계획

□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대상 외국인력(E-9) 허용 확대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H-2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3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E-9 7개 신규 업종 허용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 과제의 개요

□ 목적

○ E-9 근로자 해외 도입 방식 외에 국내 체류 중인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여 뿌리기업 등 현장의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하여 인력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유학생 특례 신설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외국인고용법」 개정 → 사업계획 마련 → 사업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20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유학생 특례 신설 포함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활용 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시 포함	유학생 활용 계획 발표	계획 발표	내부자료
'23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법 개정 추진	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여부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5
담 당 자	4급 이재인	이 메 일	urgeelee@korea.kr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과제 내용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직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주무부처 협업)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 모색

□ 과제 추진 연혁

○ 20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외국인력의 활용방식 다양화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주관), 신규 허용 업·직종 관련 주무부처(협업)

○ 추진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정·의결 → 외국인력 선발·도입

2. '22년도 추진 실적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12.29) 시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계획 포함

○ H-2 허용업종을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 제외업종* 지정(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용범위 확대('23~)

* 광업·서비스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등 2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업종은 H-2 취업 전면 허용

○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적시·적소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도입 허용('23~)

3. ’23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력난 심화 업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지속 검토·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	허용 업종 확대 여부	발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12.29)
’23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E-9 7개 신규 업종 허용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 당 자	5급 이정석	이 메 일	matrix93@korea.kr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의 입국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주 만족도 제고

□ 과제 내용

○ 사업현장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간 추가 정보 연계를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비자 발급 시스템 연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정책 결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사업 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해당 사항 없음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노동부 EPS 시스템 간 전산 연계 추진

○ 관계부처(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지속적인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23	전산 연계 추진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	분기 1회	내부자료
	관계 부처 간 협의	관계 부처 간 협의	전산 연계 관련 관계 부처 협의	3회 이상	공문 및 출장내역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추진

☐ 과제 내용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 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근로감독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할 관서별로 감독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23년 신규)

3. '23년도 추진계획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업종

☐ **(세부 추진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 **(기초노동질서 준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 분기 특정 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48개소)에서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사업주에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 부여하여 사업주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통해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 **(수사 활성화)** 균등처우, 강제근로 등 근로조건 관련 위반 사항 발생시 시정 명령 및 수사 활성화 통해 외국인 권리구제 지원

□ (추진일정) 연중 실시

○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수립(1월) → 근로감독 추진(~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528
담 당 자	5급 최충운	이 메 일	choi1974@korea.kr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창업 촉진 및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

☐ 과제 내용

○ 결혼이민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의 45%~85% 지원(5년간 300~500만원 한도)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 시 훈련비 전액 지원(단, 취업률 40%미만 직종은 80% 지원)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시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지원(1회는 자부담 면제, 2회부터는 자부담 부과)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8. 1. 과제 추진

○ 2018. 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 ①구직신청(훈련생, 고용센터) ⇨ ②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 ③훈련상담(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 ④훈련과정 수강(훈련생, 훈련기관) ⇨ ⑤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2. '22년도 추진 실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470명에게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22.12월말 기준)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여 참여 독려

3. '23년도 추진계획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의 이·전직 등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훈련 수시 공급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및 심층 경력설계 지원

□ 소요예산 : **총 1,406,127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236,890	1,406,127	13.7	
-국 비	▪ 일반회계	438,794	518,815	18.2	고용노동부
	▪ 특별회계				
	▪ 기금 (고용보험)	798,096	887,312	11.2	고용노동부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 예산으로 작성

□ 주요 산출내역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일반회계>

- 416,260백만원(훈련비·훈련장려금 36,580명×11,345천원 등)

○ 일반고 특화훈련(비진학 일반고 3 대상 훈련)<일반회계>

- 54,067백만원(훈련비·훈련장려금 6,800명×7,951천원)

○ 평생크레딧(K-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훈련)<일반회계>

- 25,000백만원(K-디지털 크레딧 50,000명×500천원)

○ 일반직종훈련(실업자, 재직자 등 훈련)<고용보험기금>

- 344,708백만원(실업자 193,550명×1,341천원, 재직자 194,676명×437천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중요 산업분야 인력 양성 훈련)<고용보험기금>

- 464,833백만원(70,650명×6,579천원)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지역고용위기산업 대응 훈련)<고용보험기금>

- 76,610백만원(훈련비 20,000명×3,548천원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470명	전년수준
'23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전년수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참여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이주청소년의 참여실적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목표 및 실적에서 제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으로 목표 및 실적 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18/7320
담 당 자	5급 김신영, 6급 강윤주	이 메 일	newmodel@korea.kr, 6256dbswn@korea.kr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 과제 추진 연혁

○ '11.7월, 경기 안산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책 수립 ○ 사업 목표 설정 및 예산 계획 승인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실적

○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화상담, 내방상담, 번역지원 등 전반적인 상담 실적이 증가

(단위 : 건)

구 분	계	전화상담	3자통화	내방상담	번역지원
2022년	365,524	316,833	33,881	13,696	1,114
2021년	331,858	285,156	35,000	10,422	8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역량강화

○ 언어별 상담원 인력 운용을 통한 상담실적 및 응대율 제고

- 언어별 상담원 정원 조정 및 상담량에 따른 상담원 채용으로 상담수요에 탄력적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실시

- 상담원 역량 강화 및 월별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 고객 응대율 지속관리 및 해피콜서비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홍보 활성화

☐ 소요예산 : **총 1,986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892	1,986	4.97	
-국 비	▪ 일반회계	1,892	1,986	4.97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상담센터 인건비

- 현지원상담원(52명*2,388,703원*12월)

- 분야별 전문상담원(5명*2,507,380원*12월)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2명*2,507,380원*12월)

○ 상담센터 운영비

- 건물관리비(7,000,000원*12월)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6,000,000원*12월)

- 공공요금(5,000,000원*12월)

- 물품구입(750,000원*12월)

- 안내사업(100원*200,000장)

- 고객만족도 조사(20,000,000원*1회)

- 고용허가제 등 실태조사(20,000,000원*1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38만회	-	전년 대비 5% 증가 (내부 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9
담 당 자	5급 이동현	이 메 일	ldh1996@korea.kr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숙소 실태조사

○ 고용허가 외 임금·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 수칙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4.8.부터 과제 추진 (매년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방관서 별로 점검 실시

※ 계획수립- 자가진단(점검 대상 3배수) - 현장점검 - 위반사항 조치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고용사업장 총 3,021개소 점검

※ 점검사업장 3,021개소 중 1,365개소 위반업체 적발

3. ’23년도 추진계획

□ (대상)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한 사업장 3,000개소

□ (추진내용) 외고법 및 주거 실태, 노동관계법, 산업안전관계법 등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어업을 집중점검(점검 물량의 40% 배정)

○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위반 및 성희롱 발생, 불체자 및 미허가 외국인 고용, 기숙사 기준 위반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 임금체불, 휴일 및 휴게 부여, 근로시간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등

○ 주거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주거시설 형태(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등),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 여부 등 확인

※ 「’21년 주거환경 개선 지침」 등에 따라 주거시설 제공 여부 등 실태조사

□ (추진일정) 상·하반기

○ ’23년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2월) → 지도점검 추진(3월~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	점검 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739
담 당 자	5급 이동희	이 메 일	lovemin1222@korea.kr

4-1-1-2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과제 내용

○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민원인 편의 제고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재고용 시 별도 절차 없이 갱신되도록 자동 갱신 방안 추진

○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전 등록된 계좌로 보험금을 송부하는 자동환급제 내실화

○ 휴면보험금의 경우 송출국 현지에서 EPS 센터를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 ('19) 베트남, 캄보디아 → ('20)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키르키스스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몽골 → ('21) 네팔, 중국, 필리핀 → ('22) 중국 방문동포(H-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사업자

2. ’22년도 추진 실적

○ ‘22년 중국 방문동포(H-2) 대상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 ‘22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2,024건(1,342백만원)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위해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 보험 자동환급제도 홍보 실시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및 홍보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임금체불 보증보험 자동 갱신제 도입	자동 갱신제 도입	자동 갱신제 도입 여부	자동 갱신제 도입	-	내부자료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0%	-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20% 향상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448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449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50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51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증진

3-2-[2]-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451

3-3-[1]-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453

3-3-[3]-③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456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2]-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459

여 성 가 족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4	100%	99,303	113,057	13.9%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3	75%	92,165	100,278	8.8%
4. 인 권	1	25%	7,138	12,779	79.0%
5. 협 력 / 인프라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운영 예산 포함

추진 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주요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다누리 배움터 10개과정 운영)
-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사례관리 및 정착단계별 자립지원패키지 등 정착 지원
-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지원
  -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지원 및 이중언어 학습 지원 사업 확대 운영
- 폭력피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자 상담·법률·의료·숙식 제공 등 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정책 홍보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5개	99,303	107,628	8.4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3)	92,165	100,278	8.8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비예산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66,843	68,027	1.8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25,322	32,251	27.4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7,138	7,350	2.9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7,138	7,350	2.9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다문화 가구원 수는 '22년 기준 115만여 명에 이르며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학습·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수: ('20) 266,321명 → ('21) 289,529명 → ('22) 299,440명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입국 초기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국어 상담, 가족센터의 통번역,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자립 지원 등 종합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생활지도 및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추진

-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지원 신규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례관리 등 정착 지원서비스 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강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2-1-1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언어발달,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여가부 권익구조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3-2-1-1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 대상 이해교육 실시

□ 과제 내용

○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연계

○ 이해교육 홍보 및 전문강사 관리, 효과성 조사 및 성과관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부터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

○ 추진절차



2. '22년도 추진 실적

○ 온·오프라인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실시(270,496 명)

- 결혼이민자 등을 전문 강사로 채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에서 10개 과정 운영(일반, 교육자, 시설종사자, 직장인, 유·아동, 청소년, 경찰, 군인, 공직자, 전문강사)

- 기관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3. '23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DB) 구축

○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기본·전문·심화 과정) 및 강사풀 구축

□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시스템(다누리배움터 www.danurischool.kr) 운영

○ 시설종사자, 교육자, 직장인, 청소년 등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인식개선 관련 자료 및 콘텐츠 게시 등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196	262	전년(21년) 실적대비 3% 증가
23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278	312	전년(22년) 실적대비 3% 증가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2,
담 당 자	5급 최선우	이 메 일	seonwoochoi@korea.kr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가족상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등을 제공

□ 과제 내용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21개소('0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07)38개소→('08)80개소→('09)100개소 → ('10)159개소 → ('11)200개소 → ('12)200개소 → ('14~)218개소 → ('20~)228개소 → ('22)230개소 → ('23)231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46,110명

○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 : 599,261명\

3. ’23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지침 교부(1월)

○ 사업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매월)

□ 추진일정

○ 가족사업안내 지침 교부(1월)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 점검(매월)

○ 사업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3. 하반기

□ 소요예산 : **총 32,69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6,843	68,027	3.6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양성평등)	31,949	32,690	2.3	여성가족부
-지방비		34,894	35,337	1.3	
-기 타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자립지원패키지는 가족센터 기본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위 예산은 가족센터 운영 총 예산액임

□ 산출내역

○ 가족센터 운영 : 32,690백만원

※ 211개소×325.2백만원×30～70%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보조율 : 30~5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 수 (연인원)	46,000	46,110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2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 수 (연인원)	47,493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담 당 자	5급 전병길	이 메 일	pass7102@korea.kr

3-3-3-3	학업 · 진로 · 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

□ 과제 내용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09년~)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14.7월~)

○ '22년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기초학습 지원 시작(78개소, 90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운영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 78개소

- 취학준비 학습지원 : 90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누적연인원 : 128,619명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누적 연인원 : 173,506명

3. ’23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지속 실시(연중)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실 운영 신설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운영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78개소→113개소), 취학준비 학습지원(90개소→138개소)

□ 추진일정

○ 세부 운영계획 수립, 예산 교부 : ‘23. 1월 중

○ 홍보 및 참여자 발굴, 세부사업 추진 : ‘23. 2 ~ 연중

○ 사업설명회, 월별 실적 및 현장점검 : 연중

○ 사업결과(정산) 보고서 작성, 보고 : ~ ‘24. 2월

□ 소요예산 : **총 15,382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5,322	32,251	27.4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양성평등기금)	12,037	15,382	27.8	
-지방비		13,285	16,869	27.0	
-기 타					

□ 산출내역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201백만원

- 330명×39,344천원×30~70% = 6,201백만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3,461백만원

- 210명×35,023천원×30~70% = 3,461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 5,720백만원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 113개소×46.7백만원×30~50%= 2,668백만원

- 취학준비 및 학습지원 : 138개소×44.2백만원×30~50%= 3,052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65,000명	65,238명	
'2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68,499명		전년 실적대비 5% 상향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02-2100-6374
담 당 자	5급 전병길 5급 송재언	이 메 일	pass7102@korea.kr sartzche@korea.kr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주거 제공,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과제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4.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2개소)

○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별도 사업 분리(복권기금 지원),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지원

○ 20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신설(1개소)

○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4개소 확대

○ 20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 확대(쉼터2, 그룹홈1)

○ 201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개소 확대

○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 확대(쉼터1, 그룹홈1)

○ 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

○ 2019.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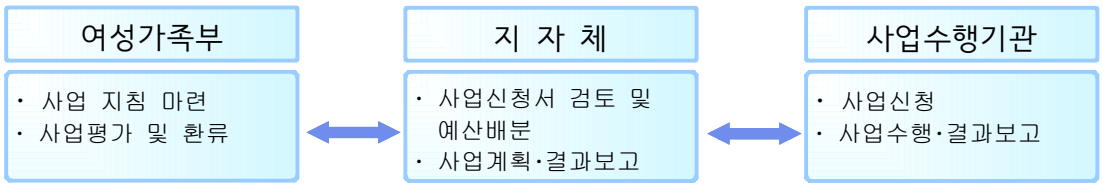
○ 202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4개소 확대

○ 2021.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추진절차



2. '22년도 추진 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숙식제공 등 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 보호시설 : ('21) 88,818건 → ('22) 91,494건,
상 담 소 : ('21) 50,367건 → ('22) 67,123건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등 주거 지원을 위해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인당 5백만원) 지급

○ 이주여성,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는 내용의 홍보 콘텐츠(13개 언어)를 제작·배포하여 폭력피해 예방 및 사업 인지도 제고

3. '23년도 추진계획

□ 폭력피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연중)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정책 홍보(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장점검(4/4분기)

☐ 소요예산 : 총 7,35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2,336	12,779	3.6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양성평등기금)	7,138	7,350	2.9	
-지방비	▪ 광역시·도비	5,198	5,429	4.4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5,939백만원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 1,335백만원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예방 홍보 : 76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지원 실적(건)	150,000	158,617	실적보고서
'2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지원 실적(건)	160,000	160,000 (추정치)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전화번호	02-2100-6582/6455
담 당 자	5급 한송이 6급 현승환	이 메 일	flowertoto@korea.kr 0731hsh@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465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46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68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70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⑤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470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472

국 토 교 통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주요 사업내용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토지거래 기획조사 착수('23년 1분기) 및 조사실시(2분기), 주택거래 2차·오피스텔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3분기) 및 조사실시(4분기)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조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소명절차 진행이 어려운 문제

※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	-	00.0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	-	00.0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	00.0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00.0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특성과 맞지 않는 **외국인력 규제***로 인하여 **불법인력**이 **양산**

* 과도한 잔여공기 규제, 이동제한 규제, 재입국특례 미적용 등 → 개선 완료('22년~'23년)

○ 규제 개선 등 합법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낮거나**, 단계적으로 **합법 외국인력**으로 **교체 중**인 상황으로 **과도기 상태**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추진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토지보유 비중은 높지 않으나, 최근 **외국인**의 **주택매수**가 **증가 추세**

* (외국인 현황) 체류 225만 명(4.4%, '22년), 토지보유 264.01㎢(0.26%, '22년)
(외국인 주택매수) '16년 5,713건(전체의 0.54%) → '22년 6,544건(1.29%)

○ 이에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외국인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관리** 필요

⇨ 110대 국정과제 중 7번 과제(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주거안정실현)에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외국인 **부동산 투기조사**가 포함*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해당없음('23년 신규 과제)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주택거래('20.1~'22.5) 중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거래 선별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를 선별(1,145건)하여 **567건**의 **위법 의심행위 적발결과 발표**(10.28)

*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의 대량 매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 실시**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토지거래 기획조사 착수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 *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신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토지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투기성 거래 조사 실시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주택 거래 2차, 오피스텔 이상거래 기획 거래 착수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토지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건설산업과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주택 거래 2차, 오피스텔 이상거래 기획 거래 조사 실시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사에 외국인 고용 절차, 규정 등 안내

-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사의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 ‘22년 하반기 ~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전문건설협회

○ 추진절차 : 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 수요조사 → 설명회 일정 조율 및 계획수립 → 지역별 설명회 개최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23년 신규 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설명회 개최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23.4분기)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 안내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1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4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6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7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	설명회 개최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39
담 당 자	5급 윤석진	이 메 일	ysj0321@korea.kr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실시 등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 토지·비(非)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동향분석 및 기획조사 병행 추진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5. 과제 추진, ’23.1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법무부, 관세청 등(협업) → 한국부동산원

○ 추진절차 : 조사대상(부동산거래 신고 中 이상거래건) 선정 → 한국부동산원·국토부 기획조사 후 위반혐의건 관계기관* 조사의뢰 → 관계기관* 처분

* (관계기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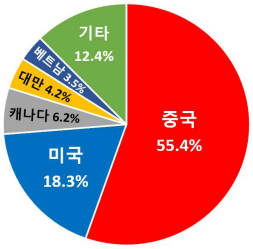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2년 간(’20.1.~’22.5.)의 주택 거래(20,038건) 중 이상거래(1,145건)를 선별하여 기획 조사한 결과를 발표(’22.10.)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으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의 국적은 중국인이 314건(55.4%),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順

【국적별 분포】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계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② 무자격 임대업	③ 탈세 의심	④ 편법 대출	⑤ 명의신탁 등	⑥ 거짓신고 등
314	59	36	54	8	7	150

① 관세청 통보 ② 법무부 통보 ③ 국세청 통보
④ 금융위 통보 ⑤ 경찰청 통보 ⑥ 지자체 통보

○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조

* 정보공유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부-관세청 MOU 체결('22.11월)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토지거래 기획조사 착수(’23년 1분기) 및 조사실시(2분기), 주택거래 2차·오피스텔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3분기) 및 조사실시(4분기)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조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소명절차 진행이 어려운 문제

-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	-	-
'23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거래조사 1회, 외국인 비주택 거래조사 1회	2회	2회	메모보고 또는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전화번호	044-201-3590
담 당 자	5급 이석유	이 메 일	stoneoil@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478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479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81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82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4-1-② 크루즈관광 활성화 ····· 482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①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485

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3-2-②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488

해 양 수 산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3	100%	8,569	8,630	0.7%
1. 경 제	1	33.3%	1,140	1,140	0%
2. 안 전	2	66.7%	7,429	7,490	0.8%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사업 등 추진**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 인력 확보**
-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주요 사업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활동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추진
  - 입항재개 전 인프라 사전점검, 선사미팅(일본, 유럽 등), 관계기관 공동 Port Sales(대만, 중국),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크루즈 체험단 운영 및 유튜브 등 매체 홍보 추진
-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등의 밀입국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안 시설 · 장비 확충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 보안인력 확보,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실시
- 외국인 어선원 근로감독 실시 및 인권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 노사정 합동점검(근해 연 2회, 원양 연 4회), 명절기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3개	8,569	8,630	0.7	'-'의 경우 '△'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1,140	1,140	0.0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1,140	1,140	0.0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7,429	7,490	0.8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비예산
2-3-2-2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7,429	7,490	0.8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코로나19 이후 3년만의 동북아지역 크루즈 운항 재개

- 원활한 크루즈 운항 재개 노력 및 내수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등을 위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필요

○ 테러 예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필요

- 테러위협 및 무단이탈 사고 등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하여 보안 시설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

-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선원 노동시장이 국제화 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 (고용현황) ('19년) 26,331명, ('20년) 26,775명 ('21년) 27,333명 ('22년) 28,281명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이탈·불법체류 예방 필요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법무부,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접인 협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크루즈 운항 재개 발표('22.10)

○ 항만보안 시설 및 인력의 운용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보안 체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항만보안 관리강화 방안」심의 의결('22.8.)

○ 항만 보안검색장비 인증제 도입('21.11.)에 따른 성능인증·점검 및 시험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안검색장비 운영·유지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 노·사·정 합동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2회) 및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확인(3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크루즈 운항 재개 노력 및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도모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실시로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항만보안인력 증원	해수부 항만운영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점검	해수부 항만운영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해수부 항만운영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점검	해수부 항만운영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크루즈산업을 미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 (국내 수요 확대) 크루즈체험단 운영 및 방송·유튜브 등 매체 홍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8.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6. 3.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기항지(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크루즈 운항 재개를 위한 노력 및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크루즈 운항 재개) 법무부,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접인 협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크루즈 운항 재개 발표('22.10)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

※ (선사미팅) Fly & Cruise 등 기항 노선 다변화를 위한 유럽지역 선사미팅('22.6)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 일본지역 선사·여행사 대상 포트세일즈('22.10)

(국제행사 개최) 제9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2.8)

(지역협의체 활동)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영상회의 개최('22.11)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연안크루즈 체험단 운영(12항차, 480명)

3. '23년도 추진계획

□ 원활한 크루즈 운항 재개 노력 및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크루즈 운항 재개) 입항 재개 전 인프라 사전점검(1분기) 및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연중)

※ 크루즈 관광객 K-ETA 적용 배제, 초대형선 전출항지 출장 입국심사 등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연중)

※ (선사미팅) 일본, 유럽 등(연중) /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 대만, 중국 등(연중)

(국제행사 개최)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3.7)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국제크루즈 체험단 운영(2분기) 및 유튜브 등 매체 홍보 진행(연중)

□ 소요예산 : 총1,140백만원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140	1,140	0	
-국 비	▪ 일반회계	840	840	0	
	▪ 특별회계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	300	0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해양수산부 예산>

○ 외국적 크루즈 유치(포트세일즈) : 400백만원

- 57.1백만원(행사장 임대, 홍보물 제작, 통역 등 행사진행비)×7개 지역

○ 국내 저변 확대 : 290백만원

- 체험단(1인 0.95백만원×50%×400명) + 매체홍보(100백만원×1편)

○ 국제크루즈 행사지원 : 15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150백만원(행사장 임차·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비>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30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300백만원(연사 초청, 컨퍼런스 운영 등 운영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6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23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전화번호	044-200-5277
담 당 자	5급 황인성	이 메 일	rhoads80@korea.kr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어선원은 연근해 어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97년부터 승선이 허용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97)86명 → ('04)1,058명 → ('16)8,314명 → ('18) 9,733명 → ('19)10,032명 → ('22)9,242명

□ 과제 내용

○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 및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20.12.)"의 이행 확인

*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 공공성 강화,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조건 개선, 인신매매·이탈 방지 등 관리강화, 한국어 및 근로고충 등 교육체계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사정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및 인권 개선대책"('13.7.)을 마련

○ 동 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노사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책 수립 시행('14.5, '15.6, '16.4, '17.4, '18.4, '19.4, '20.6, '20.12)

○ 외국인선원이 임금체불, 폭행 등 고충사항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콜센터' 및 수협중앙회 '외국인 고충상담센터' 운영(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13.1.~)

○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 수립 시행

○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20.12.)" 수립, 시행

○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입 공공화를 위한 한-인니 근해어선원 고용노동 협력 MOU 체결('21.5.31)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선장에게 선내 사망자의 시신인도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 개정안 시행('21.7.16)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조, 수협중앙회 → 선주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조사반 편성(해양수산부) → 실태조사(노사정 합동) → 평가 및 보완(해양수산부)

2. '22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실시 및 인권 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 노사정 합동점검반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여 외국인 노동인권과 근로환경을 개선(근해 연2회*, 원양 연3회**)

* (상반기) 5.30.~6.30. / (하반기) 11.16.~12.20.

** '22년 1차(3.28~30), 2차(7.29), 3차(10.12.) 노사정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휴식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사의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여, 선원의 생계를 보장

* (설 명절) '22.1.3~'22.1.21. / ** (추석 명절) '22.8.10~8.31

3. '23년도 추진계획

□ 2023년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

○ (조사내용)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지급 수준 및 체불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이행여부 등 조사

□ 외국인선원 인권개선, 이탈·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발굴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계속)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중앙회)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5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23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2회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43
담 당 자	5급 김행숙	이 메 일	ysbada22@korea.kr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IS 테러 위협, 항만보안 사고 증가 등에 따라 국경관리 차원에서 항만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방지 도모

□ 과제 내용

○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등의 밀입국 방지를 위하여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출입허가(금지)제도 정착 등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6.2.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와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방안' 수립

○ 2016.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

○ 2016.11.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 2017.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 및 보안 시설·장비 기준 등 보완

○ 2017.1.~12. 무단이탈 사고 선박에 대하여 입항 금지 등 제재조치* 이행

* 무단이탈 1회 선박은 6개월 / 2회는 1년 / 3회는 영구 입항금지('16.11.10~)

○ 2017.10. 제주항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한 차량형 X-Ray 검색기 도입(3대)

○ 2018.5.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시행

○ 2019.4.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정

○ 2020.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보안감독관 운영 근거 마련 등

○ 2022.2.「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등 제정(3건)

* 검색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 운영 및 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 2022.8.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 합동「항만보안 관리강화 방안」 수립

○ 2022.8.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보안사고 조치결과에 따른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 근거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수부, 해경청

○ 추진절차 : 부처별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개최

○ 항만보안 시설 및 인력의 운용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보안체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항만보안 관리강화 방안」 심의 의결('22.8.)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하위 행정규칙 제정('22.8.)

○ 개정법률안('21.12.9.) 시행을 위한 항만보안검색장비 인증제 하위 행정규칙 제정('22.8.00. 발령)

- 항만 보안검색장비 인증제 도입('21.11.)에 따른 성능인증·점검 및 시험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안검색장비 운영·유지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 '22년도 항만보안 예산(74.3억원*) 및 차년도 예산(74.9억원) 확보 추진

※ 민간항만 CCTV의 종합상황실 연계 3,770백만원, 출입관리시스템 고도화·연계확대 151백만원, X-Ray 검색기 임차 96백만원,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3,370백만원, 항만보안 합동보안훈련 30백만원

☐ 검역관련 의무 위반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 허가(금지)제 적용(연중)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8개 관계기관 합동 제정)에 따른 조치 시행

3. '23년도 추진계획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1분기)

-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미구축 항만 신규구축 등 항만시설 보안장비·시설 신설(18.2억원)

- 보안구역 확대운영 등을 위한 항만보안인력 증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4분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국 항만시설(213개)의 보안책임자 및 보안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보안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의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 개별 항만시설소유자의 합동훈련 준비·시행 부담 경감 및 항만보안관계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항만보안 현장과 정책·제도의 상호 개선 기대

☐ 관계부처 합동 항만분야 점검 실시(2분기, 4분기)

* 항만시설, 여객선 등에 대한 테러대응태세 점검 및 취약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관계부처(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경찰, 해경, 관세청 등) 합동점검 지속 실시(반기별)

☐ 소요예산 : **총 7,49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429	7,490	0.8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교통시설)	7,429	7,490	0.8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1,818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140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미구축 항만 신규구축) 678백만원

○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5,402백만원

-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122백만원
- (CCTV 등 유지보수) 984백만원
- (노후 보안울타리 유지보수) 400백만원
- (경비초소 등 유지보수) 812백만원
- (항만보안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70백만원
- (민간연계 통신료) 261백만원
- (보안울타리 높이 상향 등 특이소요) 1,753백만원

○ 항만보안 역량강화: 270백만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세미나 개최) 30백만원
- (청원경찰 통합채용 필기시험 출제 운영) 20백만원
- (제2차 국가항만보안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등) 2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1회	'22년 예산 확보
'23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회		'23년 정부 예산안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전화번호	044-200-5777
담 당 자	4급 김채균	이 메 일	nobakim@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495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496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498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49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2-[1]-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499

1-2-[5]-①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501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2	100%	6,000	6,000	0%
1. 경 제	2	100%	6,000	6,000	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팀들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의 스타트업으로 유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내용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성장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엑셀러레이팅 제공 후 우수팀 선발 및 후속 지원
-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실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 매칭 지원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취업 연계를 위한 신규과제 발표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2개	6,000	6,000	0.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6,000	6,000	0.0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	-	'24년 신규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6,000	6,000	0.0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요건 완화, 국내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매칭 지원

- SW 개발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 해외 SW분야 인력 공급 필요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유망 외국 스타트업 발굴 및 국내 유치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기술창업팀을 발굴하여, 국내에서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공간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국내 기업과 협력 등을 지원하여 국내 사업화 및 정착 지원

○ 기술창업비자 취득 및 국내 기술창업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 외국인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비자 취득 지원 (관계부처 협업)

- 데모데이 및 정착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법인 설립, 투자유치, 국내 기업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팀들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

- 국내 창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투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업 지원 강화 필요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팀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도입

○ 국내 창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투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업 지원 강화 필요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과 연계강화를 통한 장기적 체류 및 안착지원

○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인 ‘컴업 2023’ 및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의 인지도 제고

□ 해외 SW 인력의 스타트업으로 유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5-1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확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추진계획 수립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베트남 과기부와 협력의향서 체결	중기부 청년정책과
1-2-5-1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확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창업팀 모집공고 및 홍보 ▪ 외국인 창업팀 모집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5-1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확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외국인 창업팀 선정 ▪ 외국인 창업팀 보육 지원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5-1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확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개최 ▪ 외국인 우수 창업팀 시상 및 후속 지원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스타트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의 우수 인력이 한국 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SW 실무 교육 등을 제공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으로 취업매칭 지원

- 국내 취업을 위한 한국어·한국 기업 문화·포트폴리오 작성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6월, 사업추진을 위해 베트남 과기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 '23.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신규과제로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무부, 교육부(한국교육원)

○ 추진절차

① K-tech college 교육생 선정 : SW 상식시험 및 심층면접 평가



2. ’22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24년 신규 추진과제)

3. ’23년도 추진계획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를 위한 신규과제 발표(‘23.8월)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6억원 증액(’23.12월)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없음 (’24년 신규 추진과제)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952
담 당 자	5급 이기택	이 메 일	dlrlxor135@korea.kr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 과제 내용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성장을 위해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팅 제공 후 우수팀 선발 및 후속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16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평가·선정 → 보육 → 데모데이 → 후속지원

2. '22년도 추진 실적

□ 국내 AC의 보육을 받은 외국인 창업팀(51개팀) 대상 데모데이를 열어 후속지원 30개팀 선발 및 상위 5개팀 시상(최대1.5억원)

3. '23년도 추진계획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23. 1/4분기)

- '23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모집 공고 및 홍보(4월~)

○ ('23. 2/4분기)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신청·접수(4월~5월)

○ ('23. 3/4분기~4/4분기)

-서류평가, 해외오디션 등 통해 지원 기업 선정(6월~7월)

-국내 입국한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8월~11월)

-참가팀 정착도 평가 및 데모데이 통해 Top20 선정(11월)

○ ('24. 1/4분기~2/4분기)

- '23년 참가팀 후속지원 실시(~5월)

□ 소요예산 : **총 6,000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6,000	6,000	0.0	
-국 비	▪ 일반회계	6,000	6,000	0.0	중소벤처기업부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60억원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1억원×60개사)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20	27	법인 설립 수
'23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20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 창업정책관- 글로벌창업팀	전화번호	044-204-7682
담 당 자	5급 김택선	이 메 일	1025kts@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507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508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10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1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②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512

3-3-[2]-③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515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4-1-[1]-④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518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3	100%	1,775	1,775	0%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2	66.7%	1,775	1,775	0%
4. 인 권	1	33.3%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지속 추진**
-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유도 지속 추진**

주요 사업내용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통신서비스 가입 방법,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예방법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보급
- FM 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거주·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 제공
  ※ 총 4,317편을 제작·방송하여 1일 24시간 방송
-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3개	1,775	1,775	00.0	'-'의 경우 '△'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775	1,775	00.0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	-	비예산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775	1,775	0.00	
소계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4-1-1-4	편견 ·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	비예산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신서비스 활용·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필요

○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0.6%로 전년(92.8%) 대비 2.2%p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일반 국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

- 새로운 유형의 통신서비스 금융사기에 취약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03.

□ 국내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뉴스와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관광정보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필요

□ 편견, 차별 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필요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71명, 2회)

○ 경기대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1,721명, 2회)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가입방법,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예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6종, 한·중·영·베·태·우즈벡) 콘텐츠 제작·보급

- 다국어 책자 및 전자책,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관광정보, 재난속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보도’ 등의 프로그램 4,346편 제작·방송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34회)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지속 추진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지속 실시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외국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신종 금융사기 피해사례 업데이트 및 다양한 언어로 교육 콘텐츠 제작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지속 추진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을 제공

□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유도 지속 추진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발생시 공유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계획 수립 및 강사단 육성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다국어 교육책자 제작·보급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디지털이용자 기반과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 과제 내용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3년 : 주한외국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이동 상담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글로벌센터 연계)

○ 2014년 : 방송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전용 매장 확대 유도

○ 2015년 : 방송통신사업자 고객센터 외국어 상담원 확대 유도

○ 2016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17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다국어 책자 제작·보급

○ 2018년 : 다문화 이주여성 및 아이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이용자 도전 골든벨' 개최

○ 2019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20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2021년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2년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추진절차 : 계획 수립(방통위)→ 추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22년도 추진 실적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71명, 2회)

○ 경기대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1,721명, 2회)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가입방법,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피해예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한·중·영·베·태·우즈벡) 콘텐츠 제작·보급

- 다국어 책자 및 전자책, e-러닝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1분기)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계획 수립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강사단 선발 및 육성(집체교육, 강사단 발대식 등)

○ 주한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 (2~4분기) 주한외국인 대상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유관단체 및 외국인 대학생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주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에 교육 콘텐츠 보급

○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명)	실적	산출근거
’18	외국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확대 유도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교육제공	통신서비스 교육대상자	500	502	o 교육 수료 인원
’19				500	508	
’20				1,100	1,275	
’21				1,600	1,565	
’22				1,600	1,792	
’23				1,300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번호	02-2110-1528
담 당 자	6급 김남희	이 메 일	namhee42@korea.kr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방송권역 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을 주 청취 대상으로 뉴스와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관광정보 및 한국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송권역 해당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국민의 세계화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을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무조정실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02년 11월) 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03년 제주에서 FM영어방송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예산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과제 수행주체)

○ 추진절차 : 사업자(국제방송교류재단) 예산 교부 → 사업수행

2. '22년도 추진 실적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관광정보, 재난속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보도' 등의 프로그램 4,346편 제작・방송

3. ’23년도 추진계획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계속)

○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정보 프로그램, 음악/오락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특집프로그램 등 총 4,317편을 제작·방송하여 1일 24시간 방송

< 아리랑국제라디오방송(영어FM) 분기별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

[단위 : 편]

추진시기	시사/보도	교양/정보	음악/오락	제주 특화	특집	비고
1분기	256	182	547	90		24시간 방송
2분기	257	182	548	91		
3분기	257	183	548	92	4	
4분기	257	183	548	92		
연간 전체	1,027	730	2,191	365	4	4,317

☐ 소요예산 : 총 1,775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775	1,775	0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1,775	1,775	0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정규 프로그램 제작 : 1,559백만원

- 시사/보도 프로그램 557백만원(542천원×1,027편)

- 교양/정보 프로그램 226백만원(310천원×730편)

- 음악/오락 프로그램 620백만원(283천원×2,191편)

- 제주 특화 프로그램 156백만원(427천원×365편)

○ 특집 프로그램 제작 : 42백만원(42백만원×1편)

○ 제작지원비 : 174백만원(저작권료, 음반자료 구입, 청취행태조사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9%	75.3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46	4,346	프로그램 제작실적
'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75.9%	조사중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4,317	조사중	프로그램 제작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번호	02-2110-1421
담 당 자	5급 왕경희	이 메 일	jaerm@korea.kr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과제 내용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적극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의 방송심의 기능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 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

2. '22년도 추진 실적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심의규정 및 현안 등 설명 및 논의(34회)

3. '23년도 추진계획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계속)

○ 차별적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발생 시 적시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25회	28회	지상파사업자 5회 종편보도PP사업자 5회 SO, 등록PP사업자 5회 방송광고사업자 5회 상품판매방송사업자5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265
담 당 자	이형희 사무관	이 메 일	hhlee73@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통계청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523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524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26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27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2-②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527

통 계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	100%	2,426	2,533	4.4%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100%	2,426	2,533	4.4%

추진 방향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주요 사업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2022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2023년「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23.5.~6.) 및 결과 공표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 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2022년「국제인구이동통계」결과 공표
  - 2022년「다문화 인구동태통계」결과 공표
  -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 결과 공표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	2,425	2,533	4.5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2,425	2,533	4.5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구성 다양화

-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60년만인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 2019년 250만명을 돌파하였음

- 코로나19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2020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2023년은 약 251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를 차지함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단기, 유학・일반연수, 취업, 결혼이민・영주, 재외동포 등) 및 국적(중국, 동남아, 미국 등)의 다양화 및 다변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

	'0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체류외국인 (만명)	106.6	126.1	139.5	144.5	157.6	179.8	190.0	204.9	218.0	236.8	252.5	203.6	195.7	224.6	250.8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	2.2	2.5	2.7	2.8	3.1	3.5	3.7	4.0	4.2	4.6	4.9	3.9	3.8	4.4	4.9

주) 자료출처: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주민등록인구(각 연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인구 대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 수요 증가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 22년 주요과제 성과

○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22.4.)

○ 내국인 뿐만 아니라 상주 외국인을 포함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공표('22.5.)

○ 국제이동 규모 및 이동자 특성 파악을 위한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22.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공표('22.7.)

- 상주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모집단 정보 제공

○ 외국인과 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혼인·이혼·출생·사망에 관한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2.11.)

○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체류실태 및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22.5.~6.) 및 결과 공표('22.12.)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총인구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 행정자료 활용 인구총조사를 통해 국내 상주외국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통계 및 모집단 매년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 및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및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생산 및 공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준비(1~3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5~6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7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결과공표(7월)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내검 및 집계(7~11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공표(11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전국 장래인구추계 공표(12월)	통계청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12월)	통계청 고용통계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상주외국인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외국인 고용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등을 생산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관련 외국인 통계의 지속적인 개선·개발 추진 및 통계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 과제 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의미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검토('08.12.)

○ 2010년 기준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 결과 시산('12.12.)

○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방법 및 제공항목 결정('13.12.)

○ 2011~2013년 등록센서스 시산 및 품질점검('14.10.)

○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매년 11월) 및 결과공표(익년 8월)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외국인 고용조사를 외국인 종합통계로 확대 발전 가능성 검토 ('14.2.~15.4.)

○ 법무부·통계청 공동 실시 협의('15.6.~'16.1.)

○ 조사항목 개발, 표본 추출 등 시험조사 준비('16.2~8.)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시험조사 실시('16.9.)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본계획 수립('16.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매년 5~6월) 및 결과 공표(매년 12월)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신고서 자료를 기초로 국제인구이동통계 최초 작성('00년)

○ 국가통계 승인('04년)(승인번호 제101064호)

○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13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연간 공표(매년 7월)

< 장래인구추계 >

○ 국가통계 승인('94년)(승인번호 제101033호)

○ 전국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6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8년)

○ 다문화인구추계 작성방법 개발('18년)

○ 전국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6년 이후 매5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8년 이후 매5년)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개발 추진('10~'11년)

○ '08~'1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최초 공표('11.11.)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고서 외국어 견본 제작 배부('13.8.)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연간으로 공표(매년 11월)

□ 추진체계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추진주체 : 통계청

○ 추진절차 : 총조사 실시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방안 협의(통계청 및 자료제공기관) → 행정자료(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입수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 → 결과분석 및 공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추진주체 : 통계청(법무부 공동)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통계청) → 조사지침 교육(통계청) → 현장조사 실시(지방통계청, 사무소) → 자료처리 및 결과 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출입국 심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료전송(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유통시스템)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자료수집(통계청) → 자료분석 및 추계모형 적용(통계청) → 추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통계청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통계청) → 조사지침 교육(통계청) → 신고서 접수 및 자료 입력(지자체) → 가족관계등록 정보입수(대법원)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통계청) → 결과분석 및 공표(통계청, 보도자료)

2. '22년도 추진 실적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2.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및 모집단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공표('22.12.)

○ 국내 상주 외국인과 귀화허가자(5년 이내)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영주 및 귀화허가자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22.7.)

○ 외국인 입·출국자의 이동 규모 파악, 입국자 성·연령·국적·체류자격별 특성 분석

< 장래인구추계 >

☐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22.4.)

☐ 2020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22.5.)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2.11.)

○ 다문화 인구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작성 및 공표

3. '23년도 추진계획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3.7.)

○ 2022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23.7.)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23.5.~6.) 및 결과 공표('23.12.)

○ (조사부문)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 등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 2022년 월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제공(매월)

○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23.7.)

< 장래인구추계 >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23.12.)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3.11.)

□ 소요예산 : 총 2,533백만원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795	832	4.7	
-국 비	▪일반회계	795	832	4.7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618	1,689	4.4	
-국 비	▪일반회계	1,618	1,689	4.4	

< 국제인구이동통계 >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	3	0.0	
-국 비	▪일반회계	3	3	0.0	

< 장래인구추계 >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	8	0.0	
-국 비	▪일반회계	8	8	0.0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구 분		'22년도	'23년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	1	0.0	
-국 비	▪일반회계	1	1	0.0	

□ 산출내역

< 인구주택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인건비 : 672백만원

○ 운영비 : 77백만원

○ 여비 : 2백만원

○ 업무추진비 : 6백만원

○ 민간이전 : 75백만원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일용임금 : 327백만원

○ 운영비 : 1,277백만원

○ 국내여비 : 40백만원

○ 사업추진비 : 8백만원

○ 민간이전 : 37백만원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운영비 : 3백만원

< 장래인구추계 >

○ 운영비 : 8백만원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운영비 : 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구주택총조사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	1회	1회	보도자료
'23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	1회	1회	보도자료
'23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국인 국제이동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1회	1회	보도자료
'23	장래인구추계	외국인 관련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전국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	1회	1회	보도자료
'23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1회	1회	보도자료

5. 담당자

< 인구주택총조사 >

소관부서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번호	042-481-3756
담 당 자	5급 김민주	이 메 일	minju1101@korea.kr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전화번호	042-481-2339
담 당 자	5급 정영심	이 메 일	ysjeong89@korea.kr

< 국제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번호	042-481-2261
담 당 자	4급 유수덕	이 메 일	sudeok71@korea.kr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소관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번호	042-481-2258
담 당 자	4급 온누리	이 메 일	jasminne@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경 찰 청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538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539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42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43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543

2-1-[2]-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546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 54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551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4	100%	974	974	0%
1. 경 제					
2. 안 전	3	75%	387	387	0%
3. 통 합					
4. 인 권	1	25%	587	587	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 **체류 외국인의 범법행위 단속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 '범죄예방강화구역(舊 외사안전구역)' 으로 설정,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리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하여 주요 치안 현안 논의 및 대책 마련
- 체류 외국인의 범법행위 단속 강화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
- 외국인 협력 단체와의 협업 지속
  - 체류외국인 등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 운영
-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4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2년	'23년	증감(%)	
합계	4	974	974	0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387	387	0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94	94	0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	-	비예산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293	293	0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587	587	0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587	587	0	

Ⅱ. '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 여건

○ '22년 외국인 피의자 전년 대비 6.2% 증가(32,470 → 34,472명), 특히, 마약류 등 조직적·체계적 범죄는 지속 증가 추세

- (외국인 마약사범) '19: 1,092명 ⇨ '20: 1,466명 ⇨ '21: 1,673명 ⇨ '22: 1,757명

- 최근 10년간 체류 외국인 및 범죄 현황

연도	'13년	'15년	'17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률
인원	1,576,034	1,899,519	2,180,498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42.5% ↑
범죄현황 (전체대비)	24,984 (1.4%)	35,443 (2.0%)	33,905 (2.0%)	36,400 (2.3%)	35,390 (2.4%)	29,450 (2.4%)	30,954 (2.5%)	23.8% ↑

○ 학령기(7세~18세)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학생 비율은 91.5%* 수준으로 8.5% 가량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 범죄·비행 노출 우려

* ('21년) △학령기 다문화가족 청소년 174,974명 △다문화학생 160,058명 <2022 청소년백서>

□ 전망

○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이며,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입·유치정책을 고려하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초등학생 연령 이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7.2% 차지하는 등 지속 증가 예상

- **(다문화가족 자녀)** 264,626명'19년 → 266,626명'20년 → 289,529명'21년 <2022, 행안부> *
  ※ ('21년) △6세이하 39.6% △7~12세 37.6% △13~15세 15.0% △16~18세 7.8%
- **(다문화학생)** 137,225명'19년 → 147,378명'20년 → 160,058명'21년 →168,645명'22년 <2022, 교육부>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2.51%'19년 → 2.75%'20년 → 3.0%'21년 →3.2%'22년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안정적 치안 관리

○ 등록외국인수・외국인 피의자수・범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사안전구역(30개소) 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강화

○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외국인 범죄예방정책 및 활동을 통합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법무부 주관 단속에 참여하여 2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참여 현황 >

	’18	’19	’22	’23
실시 횟수	2회	6회	1회	3회
경찰지원 인원(명)	160	865	120	360
총 적발 인원(명)	16,218	2,806	3,865	20,947

☐ 다문화 청소년 담당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중심 학교폭력 예방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문화 청소년 담당 SPO 지정,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범죄예방교실 ▵지원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지원

*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하여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역할체험 △심리상담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학수사 등 경찰체험 등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안산단원서에서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예방교육 ▵합동순찰 등 정책 추진 중

※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가족 비율은 19.3%로 전국 비율 4.1% 보다 4.7배 높음(’21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사안전구역은 ’13년 최초 운영 이후 약 10년간 거의 해제되지 않은 채 지속 증가(7→30개소), 재점검하여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

- 전체 구역의 현황을 세밀히 재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

위험성·두려움 등이 높은 지역에 치안력 집중 투입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이 주로 농촌 등 2·3급지 경찰서 관할인 경우가 많아 SPO 인력이 署別 2~3명에 불과, 담당 SPO 지정 곤란

- 다문화학생 지원은 교육부(학교), 다문화가족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여가부에서 총괄하므로 SPO는 현장 중심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에 주력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안전구역(30개소)의 ▵등록외국인 ▵범죄·112신고 ▵방범시설 ▵주민여론 등을 종합 분석하여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편입 등 재정비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활용, CPTED사업 등 지자체 협업 및 순찰 강화

□ 체류 외국인의 범법행위 단속 강화

○ 법무부 등과 협업, ▵건설업·유흥업소 ▵마약사범 ▵대규모 불법 고용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 사범 합동단속

□ 외국인 협력단체와의 협업 지속

○ 외국인 협력단체 대상 장비 지원 및 협업,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외국인 자율방범대 순찰 ▵외국인 범죄동향 및 신고 유도 등 추진

□ 여가부와 협업,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

○ 신학기·방학기간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 時 SPO 면담 대상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하여 선제적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제1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제2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제3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중점 관리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 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 외국인 협력단체 협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②-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의 공동체 치안 강화・기초질서 확립・불법행위 방지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과제 내용

○ 외국인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 '범죄예방강화구역(舊 외사안전구역)'으로 설정,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리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하여 주요 치안 현안 논의 및 대책 마련

☐ 과제 추진 경과 및 추진주체

○ (추진 경과) '13. 8월부터 운영 /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 주체) 경찰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외국인단체・지역주민 등과 협업

2. '22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등록외국인수・외국인 피의자수・범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사안전구역(30개소) 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강화

○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외국인 범죄예방정책 및 활동을 통합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사안전구역은 '13년 최초 운영 이후 약 10년간 거의 해제되지 않은 채 지속 증가(7→30개소), 재점검하여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

- 전체 구역의 현황을 세밀히 재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 위험성・두려움 등이 높은 지역에 치안력 집중 투입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연중)

○ 외사안전구역(30개소) 중심으로 ▵등록외국인 수 ▵범죄・112신고 발생 추세 ▵방범시설 현황 ▵주민 여론 등을 종합 분석하여 예방활동 강화

< 외사안전구역 현황 (13개청 30개소) >

<**서울**> 용산 이태원/동대문 회기/마포 서교/영등포 대림/광진 자양/금천 독산/관악 신사/구로 가리봉 / 강남 역삼 <**경기남부**> 수원 지동 / 수원 매산・고등/안산 원곡・선부/시흥 정왕/평택 신장/오산 중앙・오산/ 화성 향남/용인 중앙/김포 통진 <**경기북부**> 포천 소흘・가산 <**부산**> 남구 대연 <**인천**> 서구 석남/연수 함박 <**대구**> 달서 이곡 <**광주**> 광산 월곡 <**울산**> 울주 온산 <**충북**> 음성 대소・금왕 <**충남**> 아산 신창 <**경북**> 경주 외동・성건 <**경남**> 김해 동상 <**제주**> 연동・노형

○ ▵지자체와 협업하여 CPTED사업 추진 ▵거점근무・자율방범대 순찰 등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하는 등 외국인범죄 예방에 역량 집중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외국인 문제해결(분기별)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구성・운영(28개 관서), 유관기관・외국인단체・이주민대표 間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요 범죄동향・무질서행위 및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합동으로 예방・대응대책 모색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개요 >

❖ **구성** : 위원장(경찰서장 또는 외사기능 과장) 포함 15인 내외
- **유관기관**(지자체 · 출입국관리사무소 · 고용노동청 · 교육지원청 등)
- **내·외국인 주민**(외국인 협력단체장, 국적별 외국인 주민대표, 내국인 주민대표 등)

❖ **운영방식** : 분기별(年 4회) 협의회 개최, 주요 치안현안 발굴 및 대책 등 논의
- ① **유관기관 협력** ② 외국인 대상 **홍보** ③ 내·외국인 **합동행사** 및 공동체 치안활동 추진 등

☐ 소요예산 : **총 94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4	94	0	
-국 비	▪ 일반회계	94	94	0	외사치안협력위원회
	▪ 특별회계				
	▪ 기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 28개소×839천원×4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2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외사안전구역 운영	운영 개소	28	30	현재 운영개소
'23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외사안전구역 운영	운영 개소	20		현재 운영개소

※ 외사안전구역 정비를 통해 순찰인력·CPTED 사업·공동체 협업 등 예방역량을 집중하고 관리 내실화 도모할 계획이기에 목표치 하향 설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46
담 당 자	경감 정명준	이 메 일	jmj0804@police.go.kr

2-1-②-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협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적극 참여, 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등 각종 범죄 첩보 입수 및 단속

☐ 과제 내용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를 통해, 유흥·마시지 업소, 배달대행 등 민생침해 분야 및 테러 혐의, 대포차 운행,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외국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 과제 추진 경과

○ 신규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추진절차 : 단속 계획수립 및 실시(법무부) → 각 부처 인력 지원 → 합동 단속

2. '22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 주관 단속에 참여하여 2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참여 현황 >

	'18	'19	'22	'23
실시 횟수	2회	6회	1회	3회
경찰지원 인원(명)	160	865	120	360
총 적발 인원(명)	16,218	2,806	3,865	20,947

3. ’23년도 추진계획

☐ **제1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1/4분기)

○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 병행)

☐ **제2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2/4분기)

○ 제1차 단속 결과 분석 후 2/4분기에도 단속 참여, 체류 외국인 범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력 제고

☐ **제3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3/4분기)

○ 제2차 단속 결과 분석 후 3/4분기에도 단속 참여, 체류 외국인 범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력 제고

☐ 소요예산 :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2043
담 당 자	경감 김태현	이 메 일	todokim@police.go.kr

2-2-②-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체류 외국인·유학생들이 언어·문화적 차이와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크고, 신고 및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음

- 외국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범죄유형에 대해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방법을 교육해 국내 법질서 준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

○ 국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치안협력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 전국 68개 단체·1,591명 대원 활동 중

☐ 과제 내용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외국인 시설·기관과 협업, 외국인이 접하기 쉬운 범죄·대응법에 관한 범죄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활동 ▵기초질서 준수 캠패인 실시

☐ 과제 추진 경과 및 주체

○ **(추진 경과)** 그간 별도 과제 없었고, '24년에 신규 과제로 선정

○ **(추진 주체)** 경찰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외국인 협력단체 등과 협업

2. '22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여가부 등 관련 기관의 교육 요청에 따라 총 6,016회·488,862명 교육 실시 완료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전국 총 68개 단체·1,591명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경찰청은 1.55억원 상당의 안전장비 등을 지원

3. ’23년도 추진계획

☐ 체류외국인 등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연중)

○ 체류 외국인・유학생・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경찰관이 출강, 범죄예방 교실 연중 실시

☐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협업 지속 (연중)

○ 외국인 협력단체와 경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하고,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 합동순찰,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안전장비 5종(모자・조끼・불봉・경적・손전등) △방한점퍼 등

- 외국인 자율방범대원과 경찰 間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외국인 범죄 발생 동향 파악 및 범죄 신고 유도자로도 적극 활용

☐ 소요예산 : **총 293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93	293	0	
-국 비	▪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138	138	0	
	▪ 외국인 협력 단체 지원	155	155	0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 제작 122백만원(230,000만부×1식) + 운영비 16백만원(30천원×259개 경찰서×2회)

○ **(외국인 협력단체 지원)** 활동장비 120백만원(형광조끼 50천원+신호봉20천원+전자호루라기30천원+활동모20천원×1,000개) + 교육비 10백만원(교육책자 1천원×1,000부) + 운영비 10백만원(20천원×250개×2회) + 홍보 15백만원(리플릿 제작 10백만원=10천원×1,000부 + 캠페인 5백만원=10천원×250개서×2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범죄예방교육	교육인원	346,000명	488,862명	그간 평균 교육인원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협력단체 활성화	단체별 평균 활동 실적	월 2회	월 2회	자율방범대 월 평균 활동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66
담 당 자	경사 김민규	이 메 일	jeja2001@police.go.kr

4-2-1-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통한 협업 지원 필요

☐ 과제 내용

○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초·중생 대상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안내 등 학교폭력 예방·대응활동 전개 중

○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 과제 추진 경과

○ (교육부·여가부) '06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언어 미숙 △가정폭력·학대 피해 등 한국사회 부적응 다문화가족 대상

○ (경찰청) '22. 6월 「위기청소년 집중 발굴계획」 수립 時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 밖 청소년을 SPO 면담 대상에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 (교육부·여가부) → △다문화교육정책학교*(교육지원) △다문화 가족센터(가정생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교육·직업 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 운영 주관

* 다문화 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에 맞춰 유치원·학교 지정 운영('15년 30개원 → '21년 162개원)

** 다문화가족·중도입국·탈북 청소년 대상 언어·진로교육 등을 지원 하는 비영리법인(20개소)

- (경찰청)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교·가정밖 등 위기청소년 발견 → 경찰단계 조치 및 선도제도 운영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보호·지원

○ 추진절차 :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 연락망 구축 → 담당 SPO 지정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굴 → SPO와 1:1 면담 및 멘토링 → 전문기관 연계·지원

※ SPO가 청소년과 1:1 면담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 가족센터에 협조 요청

2. '22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문화 청소년 담당 SPO 지정,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범죄예방교실 ▵지원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지원

*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하여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역할체험 △심리상담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학수사 등 경찰체험 등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안산단원서에서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예방교육 ▵합동순찰 등 정책 추진 중

※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가족 비율은 19.3%로 전국 비율 4.1% 보다 4.7배 높음('21년)

3. '23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총괄 부처인 여가부와 협업, 경찰 활동 중 발견한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

○ 신학기·방학기간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 時 SPO 면담 대상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하여 선제적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담당 SPO 지정 ▵다문화 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 소요예산 : 총 587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87	587	0	
-국 비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	525	525	0	
	▪위기청소년 선도 및 SPO 활동지원	62	62	0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3150-1385
담 당 자	경감 김 학 수	이 메 일	youthcop@police.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해양경찰청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557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558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60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61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2-②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 561

해 양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주요 사업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 상·하반기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지방청 특별 단속 시행,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 참여
-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 해상 밀입국 등 국경 침해 행위 합동 대응 체계 구축, 해경-군(軍) 간 밀입국 취약지 교차 점검·분석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1개				'-'의 경우 '△'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비예산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비예산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국제화에 따른 신안보 위협 치안수요 증가

○ 21세기에 들어 교통·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확산과 기후, 환경,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다양한 해양관련 위험 상황에 직면

- 특히, 우리나라는 해양을 통한 교역량이 전체 99%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1위의 무역국가로 해양국경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에 처해 있음

□ 외국인 출입국자 및 불법체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체류 외국인(명)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불법체류 외국인(명)	355,126	390,281	392,196	388,700
불법체류율(%)	15	15.5	19.3	19.8

○ 2021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56,781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제한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외국인의 수는 다소 증가 추세

□ 외국인 선원 국내고용 관련 문제점 쟁점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외국인 선원 현황	25,301명	26,321명	26,331명	26,775명	27,333명

○ 국내 외국인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27,333명으로 전년(26,775명) 대비 558명 증가하여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

○ 이처럼 국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이탈로 수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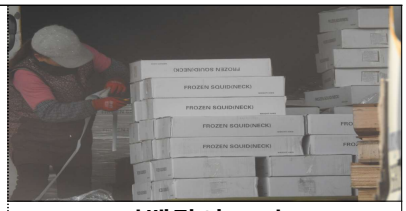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단속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해 해양국경범죄 관리 강화 단속 실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마약류와 같은 사회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사회안전 위해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사활동을 전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등 총 66건, 총 88명을 검거

- 또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판매 사범 총 21명을 검거, 그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는 실적을 달성

【주요사례 1】유통기한 경과 식품 유통사범 검거

22년 설 명절 전·후 외사활동 강화 기간 中, 수산가공품이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산 냉동오징어(30톤, 약 5억원)를 정상적인 식품인 것처럼 위장(라벨갈이)하여 유통한 업체 대표 검거	 라벨갈이 모습

【주요사례 2】마약류 관리법 위반(유통·판매) 사범 검거

유흥업소 여성이 상당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외국인 선원과 함께 투약 및 외국인 대상 판매한다는 첩보입수, MDMA 11정 위장거래 후 통신자료, 출입국 안면인식 시스템 이용 신원 특정, 위치 추적 및 주거지 잠복하여 외국인 판매책 2명 검거	 MDMA(엑스터시) 11정

【주요사례 3】마약류관리법 위반(판매·투약) 범죄 검거

외국인 선원들이 사천 관내 유흥주점을 통해 마약류(펜타닐) 판매·사용한다는 첩보입수, 판매·투약 사범 검거, 이후 필로폰 13.9g 소지 및 펜타닐 패치 투약 혐의 추가 발견하여 국내인 판매책 등 4명 검거	 필로폰, 주사기등 압수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적인 확산으로 외국인범죄 예방・단속 제한

- 외국인 및 유관기관 등 대상 대면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협업 등이 제한, 매년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이 중단

○ 방역정책 완화 추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 및 대책 마련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신종 밀입국·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 추진

○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단속 및 첩보수집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 **코로나 완화 정책에 따른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

○ 국제범죄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中·日등) 범죄정보 공유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공조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및 대응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3-2-2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상국경 침해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 등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

○ 그동안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인적교류 등이 제한되었으나 23년부터는 완화 정책으로 적극적인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해 노력

□ 과제 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테마형 국제범죄」 단속강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권역·시기에 맞는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 주요테마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

○ 전략적 해양 경비, 밀입국 취약지 관리,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신고체계 활성화 등 세부전략 수립 및 이행

➠ 불법취업 목적외에도 마약류 반입 등 범죄는 물론, **안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화된 대응책**과 **경비·감시체계 고도화***가 요구

□ 과제 추진 연혁: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추진절차 : 직접수행

2. ’23년도 추진계획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상·하반기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지방청 특별단속 시행: 반기 1회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참여(수시)

□ 소요예산 : 비예산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 범죄 특별단속 횟수(회)	8회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외사과	전화번호	032-835-2368
담 당 자	경위 조민국	이 메 일	nstarno2@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국세청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566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567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69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70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③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570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1]-②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 572

국 세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2024년	증 감 률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 강화**

주요 사업내용

-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를 위한 출국규제 전산연계 시스템 마련 추진

- 공문 통보없이 전산망을 통해 출국금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법무부 간 전산연계 시스템 마련 가능 여부 검토

- 국세청·법무부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2개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공유				신규, 비예산
2-2-1-2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신규, 비예산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체류관리 강화 요구 증대

○ (불법체류자 수 증가) 단속인력 부족, 제한적인 집행수단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2022.12월 기준 그 수가 41만 명에 도달(체류외국인 전체의 20%)

○ (체류질서 강화 요청)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이 증가

□ 외국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의 국내 발생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나 출국할 경우 재입국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우므로,

-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출국규제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제출(' 23년 신규추진 과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단계를 거쳐야함을 설명

○ 출국규제 관련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법무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이민 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우리 청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 강화

○ **(전산시스템 마련)** 공문의 통보없이 전산망을 통해 출국금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법무부 간 전산연계 시스템 마련 가능 여부 검토

- 차질 없는 업무진행을 위해 국세청·법무부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국세청 전산환경 등 점검	국세청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전산연계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국세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공유	법무부와 사전협의 계획	국세청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 시스템 마련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국세청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1. 과제의 개요

단속인력 부족, 제한적인 집행수단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이 증가

□ 목적

○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사회질서 위해(危害)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및 질서 있고 정교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으로 불법체류 환경억제

□ 과제 내용

○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외국인의 불법체류 정보수집 체계화

□ 과제 추진 연혁

○ 2022년 과제 설정, 2023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원천세과)

○ 추진절차 : 추후 법무부와 업무협의 추진 예정

2. ’22년도 추진 실적

□ ’22.12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제출

3. ’23년도 추진계획

□ 우리 청은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1)요구 법적근거, 2)자료종류 및 범위, 3)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 후**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여부 적극 검토 예정

○ 그러나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국세청에 없으**며 고용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거짓 비용 계상,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 따라 관련 세무조사 등을 통한 국세 부과를 할 수 있음

- (23.4분기)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신고 자료를 국세청과 법무부가 공유**하는 것만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익**은 추후 **법무부와 국세청 소관부서의 사전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 후 추진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 산출내역

○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가 아님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원천세과 1팀	전화번호	044-204-3342
담 당 자	5급 전정영	이 메 일	

2-2-1-2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외국인 체납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은 체납 발생 후 출국할 경우 사실상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하므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과제 내용

○ 적시에 출국정지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으로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과제 설정, 2023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 → 법무부(협업 요청), 기획재정부(법령개정 등 요청)

○ 추진절차 : 전산연계 등을 위한 협의 → 상설협의체 구성 → 법령 및 제도 개선

2. '22년도 추진 실적

□ '22.12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제출

3. '23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를 위한 출국규제 전산연계 시스템 마련 추진

○ (2분기) 출국규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산연계를 통한 출국규제 관련 전산시스템 마련 가능여부 등 검토

○ (3분기) 국세청과 법무부의 정보교환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연계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단체(상설협의체) 마련 추진

○ (4분기) 전산 연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방안 마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세금체납방지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실적	1회		회의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징세4팀	전화번호	044-204-3027
담 당 자	5급 성기원	이 메 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목 차

Ⅰ. 2023년 시행계획 총괄 ····· 577

Ⅱ. 2023년 시행계획 개요 ····· 578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 579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 580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1. 국경안전 대응체계 구축

2-3-①-④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580

질 병 관 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로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주요 사업내용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입국자 관리 협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입국자 정보 제공
- 검역단계 격리 대상 의심환자 발생 시 대리 입국심사 등 업무 협조
- 주기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협의 사항 논의 등

Ⅰ. 2023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 진 과 제 명	예 산			비 고
		'23년	'24년	증감(%)	
합계	1개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비예산

Ⅱ.'23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감염병위협 계속) 중국發 코로나19 유행의 불확실성**과 신종변이 발생 가능성 등 코로나19 위험 지속

○ **(기후 등 환경변화) 기후위기로 온열, 한랭질환은 물론 온난화와 일상회복**(이동증가)의 영향으로 모기, 진드기등 **매개체감염병**의 **해외 유입 및 국내 토착화 우려**

※ 국내 뎅기열(모기매개) 유입이 '21년 3건 → '22년 99건으로 폭발적 증가

2. '22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2년 주요과제 성과

○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협업으로 안정적 입국자 관리**

- **(위기 대응)** 격리통지서 교부, 입국자 정보 지자체 연계 등 방역 행정응원 등을 통해 국경 봉쇄 없이 안정적 입국자 관리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국심사, 검역 간 협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필요**

- 평시, 위기시 전방위적 입국자 관리를 위한 **상시 협력시스템 운영**

3. '23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질병관리청, 법무부 **부처 협업체계 운영**을 통한 **안전한 이민사회 구현 도모**

○ 연계 시스템 및 회의체 등을 활용한 **안전한 국경관리 정책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입국자 정보 연계 ▪ 격리 대상자 입국심사 협조 ▪ 회의체 참여	질병청 검역정책과

Ⅳ.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로 국경을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 과제 내용

○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 검역 대상 입국자 관련 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 제공 등을 통한 검역 관리 협조
- 검역단계 격리 대상 의심환자 발생 시 입국심사 협조
- 비상시 신속한 협업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 참여)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 개요>

○ **(배경)** 상시적 코로나19 **국가별 발생 및 국내 유입 상황과 추이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한 **국가별 방역조치**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는 **추진체계 필요**

○ **(목적)** 해외유입 확진자 수 및 변화 추이 등을 기초로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조치 검토

○ (**체계**) 방대본에서 **해외 위험도 분석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매주 관계부처 공유**, 매 2주마다 **관계부처 상황평가 및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긴급회의)

○ **(경과)** '20.7.2. 제1차 회의 이후 '23.11.1.까지 **총 123회 회의 개최**

* (주기) 코로나19 감염병등급 4급 전환('23.8.31.) 이후 (정기) 격월 개최 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0.4.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의 방역 행정응원 시행(격리통지서 교부 및 주소지 입력 등)

○ 2020.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체 운영 시작(진행 중)

○ 2022.4.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의 방역 행정응원 종료

○ 2023.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 세부추진과제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질병관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검역법」 제29조의5,「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등에 따른 협조 요청

2. '22년도 추진 실적

☐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협업으로 안정적 입국자 관리

○ **(위기 대응)** 격리통지서 교부, 입국자 정보 지자체 연계 등 방역 행정 응원 등을 통해 국경 봉쇄 없이 안정적 입국자 관리 실시

3. '23년도 추진계획

☐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입국자 관리 협조(상시)

○ **(정보 연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입국자 정보 제공

○ **(업무 협조)** 검역단계 격리 대상 의심환자 발생 시 대리 입국심사 등 업무 협조

○ **(회의체 운영)** 주기적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협의할 사항 논의 등

☐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 참여율 (법무부 회의 참여 횟수 /질병청 주관 회의 횟수 *100, %)	100%	100%	해외유입상황평가 법무부 참여율 (13회 전수 참여)

5. 담당자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전화번호	043-719-9210
담 당 자	연구관 전형일	이 메 일	ilcheun@korea.kr